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7-03

협동연구 2007-01-3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윤윤규 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발간사

경제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부문간, 계층간, 집단간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감지되었고, 그것이 초래할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었다. 그에 따라 학계와 정부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특히 양극화와 관련된 분야별 연구 성과는 빠르게 늘어났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부문의 양극화 현상을 따로 떼어 놓고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걸쳐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별 접근만으로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2006년 각 출연연구기관별로 진행되었던 양극화 관련 연구가 2007년에는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른 관련 연구원의 협력 하에 3년에 걸친 협동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형식적 변화는 내용상의 진전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제 그 1차 년도의 연구 성과로써 1권의 총괄보고서와 5권의 부문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선 제 각각의 의미로 사용되어 오던 양극화 개념에 대해 좀 더 엄밀한 정의와 이해를 확립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양극화의 현상을 주로 나열하던 기존의 경향에서 더 나아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탐구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양극화의 결과가 나타나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분석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산업이 고용에, 고용이 소득분배에, 소득분배가 소비와 재생산에 미치는 연관효과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관관계의 탐색에 협동연구는 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전체 협동연구의 진행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이 담당(총괄, 4권)하였고 각 영역의 연구를 위해 산업연구원의 주현 연구위원(2권)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윤규 연구위원(3권),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성식 연구위원(5권)이 분야별 책임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6권)에는 많은 해외 연구진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이강국 교수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 이들 책임연구진들과 그 밖의 모든 참여연구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다.

물론 협동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연구결과는 연구진 개인의 견해일 뿐 우리 연구원이나 기타 협동연구기관이 공식적 견해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 참여 연구진들의 노력과 성의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금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 3년차 연구에서는 더 많은 성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2007.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산업구조의 변동과 고용의 불균등구조	4
제1절 문제 제기	4
제2절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동 추이	6
제3절 산업별 고용구조 양극화의 현황 분석	16
제4절 산업별 고용 질의 차이 분석	28
제5절 소결	36
제3장 산업별 임금불평등도와 임금불평등 분해	38
제1절 문제제기	38
제2절 기존 연구	40
제3절 자료 및 연구 방법	42
제4절 분석 결과	52
제5절 소결	74
제4장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78
제1절 문제제기	78
제2절 서비스산업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이해	80
제3절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 고용현황	84
제4절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론	91
제5절 한국의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	96
제6절 소결	108

제5장 취업↔미취업 이행에서의 격차: 산업간·근로자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 110	
제1절 문제제기	110
제2절 노동시장이행에 대한 이해	112
제3절 노동시장 이행경로 분석	116
제4절 노동력상태간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134
제5절 소결	166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8
참고문헌	177

표 목 차

〈표 2- 1〉 산업별 취업자 및 여성 비중 추이	8
〈표 2- 2〉 산업별 임금노동자 고용형태 추이	10
〈표 2- 3〉 산업-기업규모별 취업자 추이	11
〈표 2- 4〉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14
〈표 2- 5〉 산업별 성별-사업체규모별 고용 비중	17
〈표 2- 6〉 산업-직업별 고용 비중	18
〈표 2- 7〉 산업별 고용형태 비중	20
〈표 2- 8〉 산업별 인적 속성과 근로시간 분포	21
〈표 2- 9〉 산업별 임금불평등	23
〈표 2-10〉 산업별 고용조건 비교	26
〈표 2-11〉 산업별 사회보험-근로기준 수혜 비중	27
〈표 2-12〉 고용 질의 측정 요소	29
〈표 2-13〉 고용 질 지수(EQI)의 변량분석(ANOVA) 결과	32
〈표 2-14〉 고용 질의 변량분석(ANOVA) Post Hoc(Duncan) 검정 결과	32
〈표 2-15〉 분석 변인들의 기초통계	34
〈표 2-16〉 노동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OLS 분석결과	35
〈표 3- 1〉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피고용자 기초통계표	46
〈표 3- 2〉 피고용자의 임금불평등 지수(2007년)	53
〈표 3- 3〉 산업별 불평등 일반화된 엔트로피 분해 결과(2007년)	55
〈표 3- 4〉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 산업(2005년)	60
〈표 3- 5〉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2007년)	61
〈표 3- 6〉 전체 불평등에서 각 변수들의 기여도 분석	64
〈표 3- 7〉 산업별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2005년)	68

〈표 3- 8〉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 산업 (2007년)	69
〈표 3- 9〉 피고용자 임금 회귀분석 결과 (2005년과 2007년)	71
〈표 3-10〉 남성의 월소득 회귀분석 결과(2005년)	72
〈표 3-11〉 여성의 월소득 회귀분석 결과(2005년)	73
〈표 4- 1〉 주요 선진국 서비스산업의 생산활동	85
〈표 4- 2〉 주요 선진국의 정보산업 및 비정규직 고용 비교(2000년 기준) ..	86
〈표 4- 3〉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현황(2001-2005년)	89
〈표 4- 4〉 서비스부문별 임시·일용직 비중(2005년)	90
〈표 4- 5〉 노동패널자료의 분석대상자 분포(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포함) ..	92
〈표 4- 6〉 노동패널자료의 분석대상자 분포(임금근로자)	92
〈표 4- 7〉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비)정규직 분포	95
〈표 4- 8〉 월 평균소득 추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포함)	97
〈표 4- 9〉 월 평균소득 추이 (임금근로자의 사례)	97
〈표 4-10〉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소득 격차	98
〈표 4-11〉 총소득 불평등의 분해: 산업간 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	100
〈표 4-12〉 서비스업내 총소득불평등의 분해: 4개부문간 불평등과 4개부문내 불평등	101
〈표 4-13〉 각 산업별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	103
〈표 4-14〉 각 산업별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	104
〈표 4-15〉 규모*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106
〈표 5- 1〉 KLIPS 직업력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118
〈표 5- 2〉 일자리이행과정: 전체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21
〈표 5- 3〉 일자리이행과정: 제조업과 서비스업	124
〈표 5- 4〉 일자리이행과정: 6개 산업간 비교	125
〈표 5- 5〉 일자리이행과정 비교: 저임금 vs 비저임금 근로자	127
〈표 5- 6〉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남성 vs 여성 임금근로자	128
〈표 5- 7〉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정규직 vs 비정규직	130
〈표 5- 8〉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고졸 이하 vs 전문대졸 이상	132

〈표 5- 9〉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연령계층별	133
〈표 5-10〉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 전체산업, 임금·비임금근로자	136
〈표 5-11〉 미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산업	162
〈표 5-12〉 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산업	165

그림목차

[그림 2- 1]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15
[그림 2- 2] 산업별 상대적 임금 일자리 분포	24
[그림 2- 3] 산업별 임금10분위 일자리 분포	24
[그림 2- 4] 전산업의 고용 질 분포	29
[그림 2- 5] 산업별 고용의 질 분포	30
[그림 3- 1] 산업별 월평균 임금	47
[그림 3- 2] 산업별 여성임금(남성임금=100)	67
[그림 4- 1]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부문별 임금비중(1999년 기준)	88
[그림 4-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소득불평등(타일 지수) 추이의 평활곡선 (LOWESS curve)	101
[그림 4- 3] 총 소득불평등의 2단계 분해 결과의 추이	106
[그림 4- 4] 각 산업별 소득불평등의 하위집단 분해 결과의 추이	107
[그림 5- 1] 노동시장이행의 다양한 유형	113
[그림 5- 2]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 전체산업, 임금·비임금근로자	135
[그림 5- 3]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제조업 vs 서비스업	138
[그림 5- 4]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6개 산업	139

[그림 5- 5]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경공업 vs 중화학공업	140
[그림 5- 6]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남성 vs 여성	141
[그림 5- 7]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142
[그림 5- 8]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직종간 비교	143
[그림 5- 9]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고졸이하 vs 대졸이상	144
[그림 5-10]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비정규직 경험 여부	145
[그림 5-11]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이직사유별 비교	146
[그림 5-12]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고용보험 가입여부	147
[그림 5-13]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 전체산업, 임금·비임금근로자	149
[그림 5-14]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 비교: 서비스업 vs 제조업	150
[그림 5-15]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산업간 비교: 6개 산업	151
[그림 5-16]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경공업 vs 중화학공업	152
[그림 5-17]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153
[그림 5-18]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남성 vs 여성	154
[그림 5-19]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155
[그림 5-20]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직종간 비교	156
[그림 5-21]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고졸이하 vs 대졸이상	157
[그림 5-22]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정규직 vs 비정규직	158

제1장 서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저성장·저고용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고용구조, 고용의 질, 근로소득 분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문별·계층별 이동성 또한 약화되어 왔다. 경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양극화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발전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집약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고용 위기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기보다는 그동안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성장주도형 발전패러다임을 추구하면서 축적된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 사회보장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문제들이 상호작용하여 초래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서 세계화, 산업구조 변화, 기술특성 변화 등 경제적 요인과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이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 분배구조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학제적 연구가 요구된다.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각 연구마다 분석대상 영역과 방법론이 상이하어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극화 해소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보고서는 산업구조의 성격, 산업부문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고용의 질 변화, 소득불평등에서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학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들 가운데 경제·

산업부문의 구조 변화라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 유연화가 고용구조, 고용의 질, 근로소득 분배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집중하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이행의 내용 및 질적 수준에서 근로자집단 간에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의 불균등구조를 고용구조 및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및 고용의 질에서의 성격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산업별 고용구조의 양극화의 현황과 고용창출력 등의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의 질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여 산업별로 고용의 질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분배의 성격 변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산업간 소득 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소득 분배의 양극화에 대한 산업간·산업내 요인 분해를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의 확대 경향과 고용구조 및 소득불평등 변화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서구의 경험과 비교한 다음,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고용구조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산업간(between industry) 혹은 산업내(within industry) 소득격차를 분석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상의 이질성에 따른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실업↔취업의 노동시장이행 행태가 산업별 및 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근로자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본 다음, 근로자의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직장이행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산업별 및 근로자집단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별 및 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근로자집단별로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과 취업상태에서 이탈할 확률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취업, 미취업 등 노동력 상태간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제2장 산업구조의 변동과 고용의 불균등구조

제1절 문제 제기

노동양극화(labor polarization)는 작금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 노동양극화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노동체제 전반에 있어 고용형태(정규 vs. 비정규)·기업규모(대기업 vs. 중소기업)·성별(남 vs. 여)의 3중 분절선(fracture line)이 중첩적으로 고착화되어 드러나고 있다(이병훈, 2004).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반이후,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집단간에 임금 및 복리후생, 인적자원개발, 고용조건 그리고 제도적·조직적 보호 등에서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외환위기 이후의 10년 동안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대중의 삶이 피폐해지는 '노동없는 민주주의(democracy without labor)', 또는 '노동의 위기(crisis of 일자리 축소 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labor)'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최장집, 2005).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와 이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양질의 노동양극화(labor polarization)는 사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자살·이혼·범죄 등과 같은 사회 해체의 징후들을 날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크게 위축시켜 지속성장의 잠재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이병훈, 2007a).¹⁾ 이처럼, 노동양극화는 "사회정의의 위기"와

1) 가정해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혼율의 발생이 1993년의 59.3천 건(1,000 가구당 1.3건)에서 2006년의 125.0 천 건(1,000 가구당 2.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고, 자살률 역시 같은 기간에 1993년의 10만 명 당 10.6명에서 2006년의 23명(총 자살건수 10,70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5대 흉악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경우

“지속 경제성장 기반”에의 엄중한 위협으로 제기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병훈, 2007a; 한국개발연구원, 2006; 전병유 등, 2006).

노동체제의 양극화, 특히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그 문제 현상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실태분석의 연구들이 적잖게 축적되어 왔으나 주되게 노동시장 전반의 총량지표에 대한 분석에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생산과정-직무숙련-고용관계-노동시장의 관행이 매우 상이할 것으로 손쉽게 예상되는 만큼, 노동양극화의 산업적 양태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론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양극화의 효과적인 정책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총량적 문제 진단을 넘어서 산업간 고용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한 산업수준의 심층적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에서나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탈산업화-지식/정보경제화 등과 같은 산업구조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별 고용구조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실태분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법 찾기를 위한 정책처방을 마련함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²⁾

이 연구에서는 산업 수준에서 발현되고 있는 노동양극화의 문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산업간의 그 변화 추이와 최근 현황을 비교해봄으로써 노동시장 분절구조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 1990년대 초반 이래 진행되어온 산업별 고용구

에도 1997-2004년 기간동안 연평균 1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절도는 같은 기간에 21%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이혼·자살·범죄와 같은 사회 해체현상이 급격히 증대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 노동양극화와 관련된 경제적 불안정과 생활고가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 2) 왜냐하면, 작금의 노동시장 문제(양극화)를 해결하려 함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탈산업화의 추세를 고려치 않은 채 이전 산업시대의 고용구조를 전제한 정책처방을 마련할 경우 그 정책의 실패는 충분히 예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 Regini 1999).

조의 변동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3절에서는 2007년 8월에 시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자료」를 활용·분석하여 현재의 산업별 고용구조 양극화실태를 다양한 점검하고 있다. 4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고용지표를 종합한 “고용 질” 지수 (Employment Quality Index, EQI)를 개발하여 산업별 편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검정하는 분석을 시도·정리하며, 5절에서는 분석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2절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동 추이

이 절에서는 1990년 초이래 산업별 고용구조가 어떠한 변화추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³⁾ 우선, <표 2-1>에서는 1993-2006년 기간에 산업별 취업자수 및 비중 그리고 여성 취업자 비율을 정리·예시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취업자의 절대 규모와 상대적 비중 모두에 있어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감소세를 보이는 한편, 서비스 산업은 전반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비중을 기준 삼을 경우 탈산(제조)업화와 서비스화가 뚜렷한 경향성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도 특히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부문의 취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건설업과 유통서비스,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취업자 대비 상대적 비율(-2.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여성의 취업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40.3%에서 41.9%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에서 그 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그만큼 서비스산업에서 여성 취업자 비중(3.2%)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

3)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Elfring(1988)의 분류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유통서비스-개인서비스-사회서비스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이들 부문간의 고용구조를 비교하기로 한다.

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사회서비스부문(+15.2%) 및 금융보험업(+9.4%)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기타/가시서비스부문의 여성 취업비중이 유일하게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기존 연구에서 서비스산업노동의 여성화(feminization)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같은 현상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있어 고르게 발생되기 보다는 13.5%의 통신-운수업에서부터 보건복지업종(73.6%)·숙박음식업(69.1%)·교육서비스업(67.9%)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 부문간의 상당한 편차를 드러내는 불균등한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 산업별 취업자 및 여성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1993년	2000년	2006년	1993-2006년 차이
전산업	취업자수	19,234	21,156	23,151	3,917
	여성비율	40.3	41.4	41.9	1.7
농림어업	취업자수	2,592 (13.5)	2,243 (10.6)	1,785 (7.7)	-807 (-5.8)
	여성비율	48.2	47.8	46.9	-1.3
제조업	취업자수	4,720 (24.5)	4,294 (20.3)	4,167 (18.0)	-553 (-6.5)
	여성비율	38.1	35.7	32.9	-5.1
전기가스 수도사업	취업자수	66 (0.3)	64 (0.3)	76 (0.3)	10 (0.0)
	여성비율	13.6	17.2	21.1	7.4
건설업	취업자수	1,706 (8.9)	1,580 (7.5)	1,835 (7.9)	129 (-0.9)
	여성비율	9.7	8.5	9.1	-0.6
서비스	취업자수	10,099 (52.5)	12,955 (61.2)	15,272 (66.0)	5,173 (13.5)
	여성비율	44.7	46.5	47.9	3.2
[생산자서비스]	취업자수	1,386 (7.2)	2,116 (10.0)	2,955 (12.8)	1,569 (5.6)
	여성비율	41.7	38.9	38.9	-2.8
금융보험업	취업자수	654 (3.4)	751 (3.5)	786 (3.4)	132 (0.0)
	여성비율	15.9	19.8	25.3	9.4
부동산 사회서비스	취업자수	732 (3.8)	1,365 (6.5)	2,169 (9.4)	1,437 (5.6)
	여성비율	30.7	30.6	34.4	3.7
[유통서비스]	취업자수	4,552 (23.7)	5,302 (25.1)	5,184 (22.4)	632 (-1.3)
	여성비율	36.5	37.0	37.0	0.5
도소매업	취업자수	3,536 (18.4)	4,047 (19.1)	3,713 (16.0)	177 (-2.3)
	여성비율	44.0	44.8	46.4	2.3
운수/통신업	취업자수	1,016 (5.3)	1,259 (6.0)	1,471 (6.4)	455 (1.1)
	여성비율	10.2	11.8	13.5	3.3

<표 2-1> 계속

		1993년	2000년	2006년	1993-2006년 차이
[개인서비스]	취업자수	2,295 (11.9)	3,137 (14.8)	3,968 (17.1)	1,673 (5.2)
	여성비율	63.0	63.0	59.2	-3.8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	1,348 (7.0)	1,919 (9.1)	2,049 (8.9)	701 (1.8)
	여성비율	67.8	68.0	69.1	1.3
기타/가사 서비스	취업자수	770 (4.9)	1,033 (5.8)	1,781 (8.3)	1,011 (3.4)
	여성비율	56.2	55.2	48.8	-7.4
[사회서비스]	취업자수	1,866 (9.7)	2,396 (11.3)	3,165 (13.7)	1,299 (4.0)
	여성비율	44.6	52.4	59.9	15.2
공공행정	취업자수	607 (3.3)	767 (3.7)	801 (3.5)	194 (0.3)
	여성비율	20.8	29.3	32.3	11.5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수	954 (5.0)	1,188 (5.6)	1,658 (7.2)	704 (2.2)
	여성비율	54.3	61.3	67.9	13.6
보건사회 복지사업	취업자수	282 (1.5)	423 (2.0)	686 (3.0)	404 (1.5)
	여성비율	65.2	70.4	73.6	8.4

주: ()안은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 (www.kosis.go.kr)

1990년대 초반 이래 산업별 임노동자의 고용지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993년과 2007년 상용직-임시/일용직의 규모와 비중을 비교해볼 수 있다. <표 2-2>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이 기간에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는 상용직의 비중이 각각 6.1%와 7.3%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산업에서는 61.5%에서 52.9%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세부 범주 중에서 1993-2007년의 기간에 임노동자의 비정규직(임시/일용직)화가 가장 현저하게 진행된 부문으로는 생산자서비스(Δ16.2%)와 유통서비스(Δ12.4%)로 드러나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Δ18.6%), 부동산임대/사회서비스업(Δ15.2%), 그리고 운수/통신업(Δ13.3%)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산업별 임금노동자 고용형태 추이

(단위: 천명, %)

	1993년		2007년	
	상용직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전산업	6,720 (58.2)	4,825 (41.8)	8,763 (55.2%)	7,115 (44.8%)
농림어업	29 (13.9)	180 (86.1)	20 (13.4)	129 (86.6)
제조업	2,581 (65.7)	1,247 (34.3)	2,475 (71.6)	983 (28.4)
건설업	380 (27.2)	1,016 (72.8)	481 (34.5)	913 (65.5)
서비스	3,633 (61.5)	2,273 (38.5)	5,703 (52.9)	5,082 (47.1)
[생산자서비스]	1,377 (77.9)	391 (22.1)	1,719 (61.7)	1,065 (38.3)
금융보험업	491 (78.2)	125 (21.8)	446 (59.6)	302 (40.4)
부동산사회서비스	886 (77.7)	252 (22.3)	1,273 (62.5)	763 (37.5)
[유통서비스]	1,340 (62.5)	804 (37.5)	1,429 (50.1)	1,426 (49.9)
도소매업	729 (51.3)	691 (48.7)	780 (40.2)	1,162 (59.8)
운수/통신업	611 (84.4)	113 (15.6)	649 (71.1)	264 (28.9)
[개인서비스]	327 (28.1)	835 (71.9)	566 (24.4)	1,749 (75.6)
숙박음식점업	103 (16.7)	512 (83.3)	129 (11.0)	1,046 (89.0)
기타/가사서비스	224 (41.0)	323 (59.0)	437 (38.3)	703 (61.7)
[사회서비스]	589 (70.8)	243 (29.2)	1,989 (70.3)	842 (29.7)
교육서비스업	396 (67.7)	189 (32.3)	845 (63.4)	488 (36.6)
보건사회복지사업	193 (78.1)	54 (21.9)	509 (74.7)	172 (25.3)

주: 괄호안은 해당 범주의 비율을 표기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조사자료.

사업체 규모가 일자리의 질을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별 사업체규모에 따른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표 2-3>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1993-2005년의 기간에 100인 미만 중소기업체의 취업자 비중은 69.0%에서 78.2%로 증가한 반면, 5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중은 17.2%에서 8.7%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전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 범주별로도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체의 취업자 규모와 비중이 줄고, 대기업의 규모-비중이 늘어나는 추이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다만, 대기업의 고용규모 감소 정도에 있어서는 산업간 상당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제조업의 감소분이 13.7%로 가장 크고, 건설업의 경우 8.3%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에서는 생산자서비스(-11.0%)>유통서비스(-8.1%)>개인서비스(-2.2%)>사회서비스(-0.2%)의 순으로 감소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비중에 있어 그 절대적 수준이 역시 산업간에 적잖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2005년 당시 전기가스수도사업(20.6%), 제조업(16.1%)과 사회서비스업(16.2%)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한편, 개인서비스업(1.1%)과 유통서비스업(2.6%) 그리고 농림어업(2.3%)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2-3〉 산업-기업규모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전산업	100인 미만	8,453 (69.0)	9,869 (70.5)	9,798 (75.8)	11,406 (78.1)	11,843 (78.2)
	500인 이상	2,105 (17.2)	2,157 (15.4)	1,416 (11.0)	1,272 (8.7)	1,323 (8.7)
농림어업	100인 미만	15 (55.6)	46 (74.8)	47 (76.7)	29 (83.0)	27 (84.6)
	500인 이상	6 (22.3)	3 (4.8)	0 (0.0)	1 (2.4)	1 (2.3)
제조업	100인 미만	2,045 (52.7)	2,085 (55.6)	1,919 (60.5)	2,219 (65.4)	2,275 (65.9)
	500인 이상	1,158 (29.8)	953 (25.4)	650 (20.5)	541 (16.0)	55.4 (16.1)
전기가스 수도사업	100인 미만	14 (37.1)	20 (41.1)	24 (41.8)	28 (46.5)	30 (45.8)
	500인 이상	10 (26.5)	10 (19.9)	14 (24.4)	10 (17.0)	14 (20.6)
건설업	100인 미만	431 (65.8)	461 (43.9)	380 (58.2)	558 (79.7)	631 (81.0)
	500인 이상	99 (15.1)	353 (33.7)	148 (22.7)	37 (5.3)	53 (6.8)
[생산자서비스]	100인 미만	836 (66.5)	1,150 (70.8)	1,153 (78.4)	1,369 (73.8)	1,484 (71.9)
	500인 이상	261 (20.8)	253 (15.5)	123 (8.4)	187 (10.1)	202 (9.8)
금융보험업	100인 미만	417 (60.3)	557 (70.9)	501 (81.0)	485 (76.7)	470 (79.4)
	500인 이상	196 (28.4)	147 (18.7)	54 (8.7)	68 (10.8)	46 (7.8)
부동산임대업	100인 미만	174 (83.0)	265 (88.8)	297 (94.2)	344 (94.3)	379 (93.8)
	500인 이상	22 (10.3)	13 (4.2)	2 (0.7)	4 (1.0)	5 (1.3)
사업서비스업	100인 미만	244 (68.8)	328 (88.8)	355 (66.1)	539 (62.9)	635 (59.5)
	500인 이상	43 (12.2)	93 (17.2)	67 (12.4)	115 (13.4)	150 (14.1)

〈표 2-3〉 계속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유통서비스]	100인 미만	2,372 (81.1)	2,743 (83.1)	2,691 (83.8)	3,033 (83.5)	2,981 (86.1)
	500인 이상	253 (10.7)	192 (7.0)	131 (4.9)	132 (4.4)	77 (2.6)
도소매업	100인 미만	2,017 (88.6)	2,254 (91.9)	2,171 (92.5)	2,385 (91.2)	2,276 (93.2)
	500인 이상	174 (7.6)	109 (4.4)	65 (2.8)	68 (2.6)	26 (1.1)
운수업	100인 미만	1,050 (95.6)	1,343 (97.2)	1,420 (97.7)	1,691 (97.7)	1,657 (97.7)
	500인 이상	68 (11.8)	76 (10.0)	51 (7.0)	51 (5.9)	43 (4.9)
통신업	100인 미만	33 (44.2)	40 (44.0)	58 (46.4)	71 (47.7)	74 (53.7)
	500인 이상	12 (15.3)	8 (8.3)	4 (11.3)	14 (9.1)	7 (5.3)
[개인서비스]	100인 미만	1,790 (90.9)	2,206 (93.4)	2,352 (96.9)	2,734 (96.4)	2,775 (95.8)
	500인 이상	64 (3.3)	49 (2.1)	22 (0.9)	28 (1.0)	33 (1.1)
숙박음식점업	100인 미만	1,050 (95.6)	1,343 (97.2)	1,420 (97.7)	1,691 (97.7)	1,657 (97.7)
	500인 이상	23 (2.1)	11 (0.8)	12 (0.8)	15 (0.8)	13 (0.8)
오락문화운동	100인 미만	158 (82.5)	202 (81.7)	259 (90.9)	290 (87.2)	338 (85.3)
	500인 이상	17 (8.7)	19 (7.9)	6 (2.3)	13 (3.8)	18 (4.5)
기타서비스	100인 미만	582 (85.7)	661 (90.0)	673 (97.5)	753 (97.4)	779 (97.0)
	500인 이상	24 (3.6)	18 (2.4)	3 (0.4)	1 (0.1)	2 (0.2)
[사회서비스]	100인 미만	923 (64.1)	1,135 (63.9)	1,217 (65.8)	1,422 (68.4)	1,625 (68.3)
	500인 이상	237 (16.4)	335 (18.8)	323 (17.5)	332 (16.0)	386 (16.2)
공공행정	100인 미만	201 (39.7)	224 (38.3)	196 (35.4)	179 (35.8)	196 (36.4)
	500인 이상	143 (28.1)	191 (32.7)	188 (34.0)	160 (31.8)	170 (31.6)
교육서비스업	100인 미만	543 (83.6)	671 (83.3)	734 (84.8)	880 (83.8)	973 (81.6)
	500인 이상	37 (5.7)	57 (7.0)	47 (5.5)	72 (6.8)	100 (8.4)
보건사회복지사 업	100인 미만	178 (62.9)	240 (62.3)	287 (66.4)	363 (68.7)	456 (70.4)
	500인 이상	57 (20.2)	87 (22.5)	88 (20.4)	100 (19.0)	115 (17.8)

주: ()안은 해당 범주의 비율을 표기함.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산업별 고용창출력을 살펴보기 위해 1993-2006년 기간의 취업계수(실질 GDP 10억원 당 취업자수)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2-4>에서 정리-
예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전산업의 취업계수가 54.1(명/10억원)에서 34.3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실질GDP 증가율에 비해 취업자수 증가율이 상

대적으로 하회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취업계수로 측정되는 고용창출력은 노동생산성의 역수이므로 고용창출력의 하락이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경제적 함의는 복합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고용구조의 측면에서는 분명 일자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장병돈, 2004). 산업부문별 취업계수를 비교해보면, 1993-2006년의 기간에 제조업(-67.6%)과 유통서비스(-46.4%) 및 농림어업(-38.7%)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사회서비스부문과 생산자서비스부문이 각각 19.8%와 16.6%의 신장세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취업계수 차이가 주되게 극심한 생산성 격차로 인해 빚어진다는 소위 “생산성격차설”⁴⁾(이홍직·장준영, 2007)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조업 고임금-고생산성 부문으로부터 서비스업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함으로써 노동양극화에 적잖게 기여해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홍장표, 2007). 그런데, <표 2-4>와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서비스산업의 취업계수 추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경우 취업계수가 유통 및 개인서비스부문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부문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세부 부문간의 편차가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산업의 세부 부문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고부가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관련 제도개혁(예: 사회보험 수혜범위 확대)과 사업지원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점을 지적하게 된다([그림 2-1] 참조). 따라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동과 양극화 경향에 대해 제조업-서비스업의 단순 이분법에 따른 분석을 넘어서 산업별 특성과 상호 차이를 엄밀하게 판별하는 논증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케 된다.

4) 이홍직·장준영(2007)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저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7% 둔화시킴으로써 낮은 서비스 노동생산성으로 인한 소위 ‘보몰의 병(Baumol’s disease)’ 징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홍장표, 2007).

〈표 2-4〉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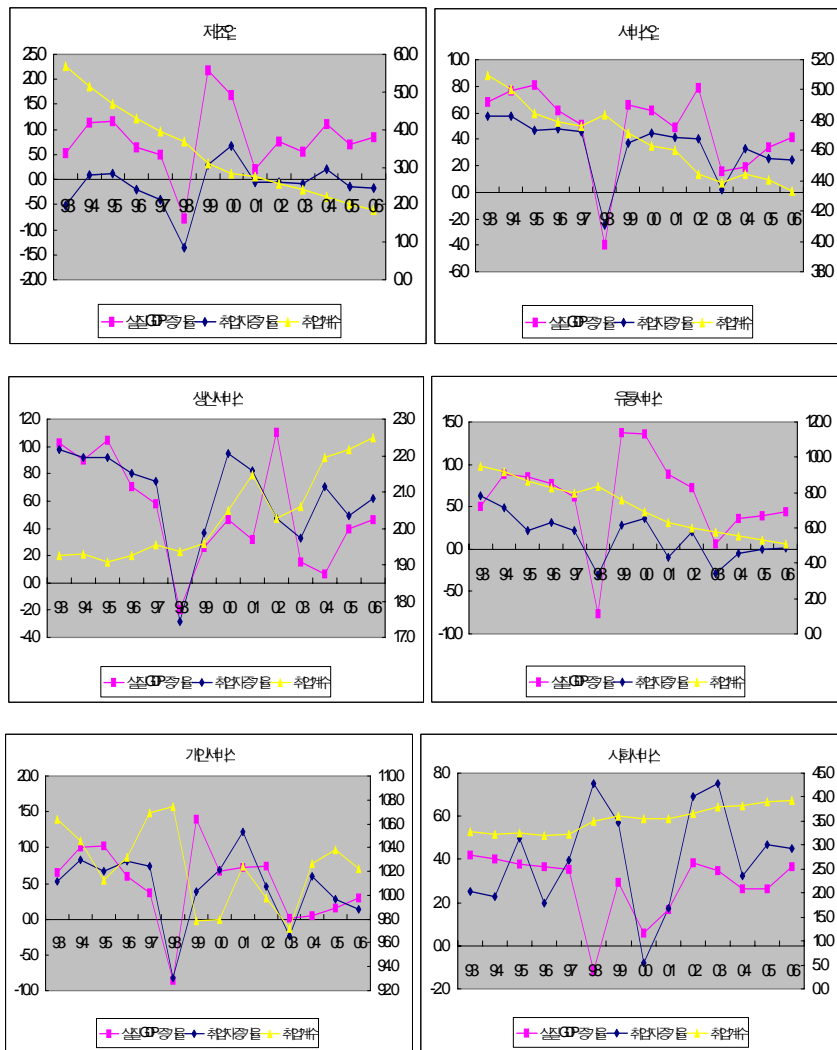
	1993년	1997년	2001년	2006년	1993-2006년 차이
전산업	54.1	45.7	40.4	34.3	-19.8
농림어업	117.5	91.6	84.9	72.0	-45.5
제조업	56.9	39.4	27.6	18.4	-38.5
전기가스수도사업	8.9	7.2	4.1	4.0	-4.9
건설업	40.5	37.8	35.0	35.7	-4.8
[생산자서비스]	19.3	19.5	21.5	22.5	+3.2
금융보험업	26.3	22.2	19.9	15.5	-10.8
부동산/사업서비스	15.6	18.0	22.4	26.8	+11.2
[유통서비스]	95.3	79.7	62.8	51.1	-44.2
도소매업	120.4	106.7	93.3	81.2	-39.2
운수/통신업	55.2	43.0	31.8	26.4	-28.8
[개인서비스]	106.3	106.9	102.4	102.2	-4.1
숙박음식점업	132.1	143.6	121.3	120.1	-12.0
기타/가사서비스	83.2	75.6	85.9	88.2	+5.0
[사회서비스]	32.8	32.2	35.6	39.3	+6.5
공공행정	25.0	23.6	23.7	24.5	-0.5
교육서비스업	42.8	44.4	45.9	53.5	+10.7
보건사회복지사업	27.3	26.0	40.4	31.9	+4.6

주: 취업계수= 취업자수 ÷ 실질GDP (명/10억원)

자료: 통계청(www.kosis.go.kr), 한국은행(ecos.bok.or.kr)

[그림 2-1]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제3절 산업별 고용구조 양극화의 현황 분석

이 절에서는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고용구조 실태에 대해 다양한 근로조건 지표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표 2-5>에서 남녀로 구분하여 30인 미만 중소기업체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남녀 공통적으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비중에 있어 전산업의 평균(남 14.4%, 여 7.4%)에 비해 제조업(남 26.1%, 여 10.9%)과 사회서비스부문(남 26.6%, 여 11.9%) 및 금융보험업(남 17.1%, 여 9.0%)-운수통신업(남 15.2%, 여 17.4%)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서비스부문과 건설업 및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소속의 임금노동자 비중이 전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한편,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직업 고용비중은 <표 2-6>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주요하게 특기할 점으로서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이 사회서비스부문(58.0%+20.5%)과 생산자서비스부문(31.2%+26.6%)에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판매서비스직은 개인서비스부문(49.8%)과 유통서비스부문(29.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산기능직은 제조업(47.8%)과 건설업(49.2%)에서 전산업 평균(21.7%)의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다. 단순노무직(농림어업 종사자 포함)의 경우에는 농림어업(85.1%)에서 압도적 높게 나타나며, 건설업과 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서 역시 전산업 평균(16.0%)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2-5〉 산업별 성별-사업체규모별 고용 비중

(단위: 천명, %)

	남성		여성	
	30인 미만 기업	300인 이상 기업	30인 미만 기업	300인 이상 기업
전산업	5,009 (54.2)	1,333 (14.4)	4,391 (66.1)	500 (7.4)
농림어업	53 (82.8)	2 (3.1)	85 (97.7)	0 (0.0)
제조업	810 (34.7)	609 (26.1)	595 (52.8)	123 (10.9)
건설업	1,032 (82.6)	28 (2.2)	113 (77.9)	7 (4.8)
서비스업	3,101 (56.2)	671 (12.2)	3,196 (68.9)	324 (7.0)
[생산자서비스]	992 (59.8)	172 (10.4)	274 (55.1)	38 (7.6)
금융보험업	172 (48.2)	61 (17.1)	187 (47.8)	35 (9.0)
부동산/사업서비스	820 (63.0)	111 (8.5)	87 (82.1)	3 (2.8)
[유통서비스]	1,061 (60.1)	151 (8.6)	814 (74.7)	57 (5.2)
도소매업	801 (79.9)	35 (3.5)	745 (79.3)	31 (3.3)
운수/통신업	260 (34.1)	116 (15.2)	69 (46.3)	26 (17.4)
[개인서비스]	702 (77.6)	32 (3.5)	1,286 (91.4)	34 (2.4)
숙박음식점업	255 (85.0)	5 (1.7)	822 (94.1)	20 (2.3)
기타/가사서비스	447 (73.9)	27 (4.5)	464 (87.1)	14 (2.6)
[사회서비스]	346 (29.1)	316 (26.6)	822 (50.0)	195 (11.9)
공공행정	132 (23.8)	209 (37.7)	105 (40.1)	76 (29.0)
교육서비스업	152 (32.4)	58 (12.4)	426 (49.2)	36 (4.2)
보건사회복지사업	62 (37.8)	49 (29.9)	291 (56.2)	83 (16.0)

주 : ()안은 해당 범주의 비율을 표기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8월 부가조사자료.

〈표 2-6〉 산업-직업별 고용 비중

(단위: %)

	관리/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
전산업	4,097 (25.8)	3,077 (19.4)	2,713 (17.1)	3,452 (21.7)	2,542 (16.0)
농림어업	6 (4.1)	4 (2.7)	0 (0.0)	12 (8.1)	126 (85.1)
제조업	634 (18.3)	624 (18.0)	41 (1.2)	1,655 (47.8)	505 (14.6)
건설업	222 (15.9)	180 (12.9)	1 (0.1)	687 (49.2)	305 (21.9)
서비스업	3,200 (29.6)	2,236 (20.7)	2,666 (24.7)	1,080 (10.0)	1,620 (15.0)
[생산자서비스]	869 (31.2)	739 (26.6)	339 (12.2)	196 (7.0)	638 (22.9)
금융보험업	160 (21.4)	343 (46.0)	221 (29.6)	6 (0.8)	16 (2.1)
부동산/사업서비스	709 (34.8)	396 (19.5)	118 (5.8)	190 (9.3)	622 (30.6)
[유통서비스]	382 (13.4)	681 (23.9)	850 (29.8)	575 (20.1)	367 (12.9)
도소매업	283 (14.6)	424 (21.8)	825 (42.5)	161 (8.3)	250 (12.9)
운수/통신업	99 (10.9)	257 (28.2)	25 (2.7)	414 (45.4)	117 (12.8)
[개인서비스]	295 (12.8)	231 (10.0)	1,152 (49.8)	230 (9.9)	405 (17.5)
숙박음식점업	27 (2.3)	53 (4.5)	887 (75.6)	14 (1.2)	193 (16.4)
기타/가사서비스	268 (23.5)	178 (15.6)	265 (23.3)	216 (19.0)	212 (18.6)
[사회서비스]	1,654 (58.0)	585 (20.5)	325 (11.4)	79 (2.8)	210 (7.4)
공공행정	176 (21.0)	345 (41.2)	149 (17.8)	29 (3.5)	138 (16.5)
교육서비스업	1,033 (77.4)	161 (12.1)	80 (6.0)	28 (2.1)	33 (2.5)
보건사회복지사업	445 (65.3)	79 (11.6)	96 (14.1)	22 (3.2)	39 (5.7)

주 : 단순노무직에 농림어업 종사자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부가조사자료.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구성분포는 <표 2-7>에서 정리-예시하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비중이 전산업 평균(6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부문으로는 제조업(79.3%), 사회서비스(70.5%), 유통서비스(69.6%)부문을 꼽게 된다. 반면,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산업 평균(35.9%)을 상회하는 산업부문으로는 농림어업(67.1%), 건설업(57.9%), 생산자서비스(52.9%) 및 개인서비스(38.4%)부문이 해당된다. 또한, 비자발적인 비정규

일자리의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81.2%)과 건설업(79.4%) 그리고 개인 서비스(59.8%)가 전산업 평균(46.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는 한편, 사회서비스부문은 26.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취약노동자집단⁵⁾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산업(20.7%)이 전산업 평균(19.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4개 세부 부문이 흥미로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의 비중을 보인 생산자 서비스부문과 개인서비스부문이 서로 취약노동자집단의 대조적인 구성을 보이는 바, 전자가 전산업 평균의 절반 수준(8.7%)에 그치는 반면 후자는 두 배 많은 39.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부문 역시 취약노동자집단의 비중에 있어 역시 상이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유통서비스부문의 경우에는 취약노동자집단의 비중이 전산업 평균 보다 높은 27.7%를 보이는 한편, 사회서비스부문은 매우 낮은 10.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8>에서는 산업별 노동자들의 인적 속성으로서 평균 연령과 학력 분포를 정리·예시하고 있다. 예상대로, 농림어업(54.0세)과 건설업(42.7세)이 전산업 평균(39.5세) 보다 높은 고령화의 수준을 보이는 한편, 서비스 산업(38.9세)은 다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특히 유통 서비스(37.6세)와 사회서비스(38.4세)이 상대적으로 젊은 산업부문으로 드

5) 이들 취약노동자집단은 비정규직의 규모산정에 있어 정부의 공식통계와 노동계의 집계 방식에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 김유선(2007)에 따르면, 정부 통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속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동계의 집계방식에서는 이에 더하여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소위 장기임시직 노동자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이환(2003)은 이들 장기임시직의 범주를 별도의 '취약노동자집단'으로 설정·분류하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정부통계와 노동계 통계 사이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이환(2003)의 분류에 따라 장기임시직을 취약노동자집단으로 별도 분류 분석하기로 한다.

러났다. 학력에서도 농림어업과 건설업 그리고 개인서비스부문에서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들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사회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부문에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과 유통서비스부문의 노동자들은 고졸 학력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다.

〈표 2-7〉 산업별 고용형태 비중

(단위: 천명, %)

	정규직	비정규직	비자발적 비정규직	취약노동
전산업	10,175 (64.1)	5,703 (35.9)	2,362 (46.1)	3,084 (19.4)
농림어업	49 (32.9)	100 (67.1)	82 (81.2)	32 (21.5)
제조업	2,743 (79.3)	715 (20.7)	256 (35.8)	612 (17.7)
건설업	587 (42.1)	807 (57.9)	641 (79.4)	204 (14.6)
서비스업	6,716 (62.3)	4,069 (37.7)	1,649 (40.5)	2,233 (20.7)
[생산자서비스]	1,310 (47.1)	1,474 (52.9)	514 (34.8)	243 (8.7)
금융보험업	369 (49.3)	379 (50.7)	85 (22.4)	34 (4.5)
부동산/사업서비스	941 (46.2)	1,095 (53.8)	429 (39.1)	209 (10.3)
[유통서비스]	1,986 (69.6)	869 (30.4)	382 (44.0)	792 (27.7)
도소매업	1,291 (66.5)	651 (33.5)	285 (43.8)	640 (33.0)
운수/통신업	695 (76.1)	218 (23.9)	97 (44.7)	152 (16.6)
[개인서비스]	1,425 (61.6)	890 (38.4)	532 (59.8)	905 (39.1)
숙박음식점업	718 (61.1)	457 (38.9)	310 (67.8)	566 (48.2)
기타/가사서비스	707 (62.0)	433 (38.0)	222 (51.4)	339 (29.7)
[사회서비스]	1,995 (70.5)	836 (29.5)	221 (26.4)	293 (10.3)
공공행정	617 (75.5)	200 (24.5)	72 (36.0)	16 (2.0)
교육서비스업	876 (65.7)	457 (34.3)	104 (22.8)	194 (14.6)
보건사회복지사업	502 (73.7)	179 (26.3)	45 (25.1)	83 (12.2)

주 : ()안은 해당 범주의 비율을 표기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부가조사자료.

〈표 2-8〉 산업별 인적 속성과 근로시간 분포

(단위: 세, %, 개월, 시간)

	나이	학력			근속기간	주 근로시간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전산업	39.5	16.8	41.9	41.3	55.1	45.9
농림어업	54.0	66.7	22.0	11.3	21.1	44.2
제조업	39.1	17.2	49.7	33.1	65.7	46.2
건설업	42.7	27.3	45.4	27.3	26.6	47.7
서비스업	38.9	14.6	39.4	46.0	55.2	45.7
[생산자서비스]	40.3	15.5	34.7	49.8	50.8	45.7
금융보험업	37.7	2.9	37.1	60.0	87.3	42.5
부동산/사업서비스	41.2	20.0	33.8	46.1	37.4	46.9
[유통서비스]	37.6	11.0	52.5	36.6	48.6	47.9
도소매업	35.8	9.3	53.6	37.1	35.8	47.2
운수/통신업	41.4	14.6	50.0	35.4	76.0	49.5
[개인서비스]	39.7	26.2	48.3	25.5	27.7	48.5
숙박음식점업	38.7	31.4	55.0	13.6	16.2	50.2
기타/가사서비스	40.7	20.9	41.4	37.8	39.6	46.7
[사회서비스]	38.4	8.0	23.4	68.6	88.4	41.0
공공행정	43.1	14.1	29.8	56.1	129.0	39.3
교육서비스업	37.0	3.9	16.4	79.7	83.3	40.6
보건사회복지사업	35.6	8.7	29.6	61.8	49.8	4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8월 부가조사자료.

또한, 근속기간에 있어 사회서비스(88.4개월), 제조업(65.7개월) 그리고 금융보험업(87.3개월)과 운수통신업(76.0개월)이 전산업 평균(55.1개월)을 상회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이는 한편, 농림어업(21.1개월)과 건설업(26.6개월) 그리고 개인서비스부문(27.7개월)이 전산업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매우 잦은 일자리의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개인서비스(48.5시간), 유통서비스(47.9시간), 및 건설업(47.7시간)이 전산업 평균(45.9시간)을 일정하게 초과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부문이

41.0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9>에서는 산업별 임금불평등 실태를 다양하게 정리·제시하고 있다. 우선, 월 평균임금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2,040천원), 생산자서비스(1,913천원), 그리고 제조업(1,900천원)이 전산업 평균(1,745천원)을 상회하는 한편, 농림어업(892천원), 개인서비스(1,188천원), 유통서비스(1,611천원) 그리고 건설업(1,644천원)이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 임금수준을 보이는 금융보험업(2,552천원)과 최저 수준의 농림어업(892천원)간의 임금 격차가 무려 1,660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에 대해 월 근로기간으로 나눠 산출한 시간당 임금의 산업별 분포는 월평균임금과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연합(EU)의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에서 제시하는 상대적 임금수준의 정의에 따르면, 고임금 수준을 '중위임금의 3/2 이상'으로, 중간임금 수준을 '중위임금의 2/3 이상-3/2 미만'으로, 그리고 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같은 LoWER의 상대적 임금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전산업 중위임금 150만원을 적용하여 고임금집단 225만 원 이상, 중간임금집단 100만 원 이상-225만 원 미만, 저임금집단 100만 원 미만으로 분류하게 된다. 시간당 중위임금(7,164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저임금집단, 중간임금집단, 그리고 고임금집단이 각각 4,776원 미만, 4,776원 이상~10,747원 미만, 10,747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판별기준에 따른 산업별 시간당 상대적 임금분포에 대해서는 <표 2-9>에 정리·제시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의 상대적 분포에 있어 저임금집단이 농림어업(67.3%)과 개인서비스(52.9%)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고임금집단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45.8%)와 생산자서비스(34.4%)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중간임금집단이 각각 해당산업 노동자 전체의 50.2%와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의 상대적 분포를 산업별로 구분한 결과를 [그림 2-2]에서 예시하고 있다.

〈표 2-9〉 산업별 임금불평등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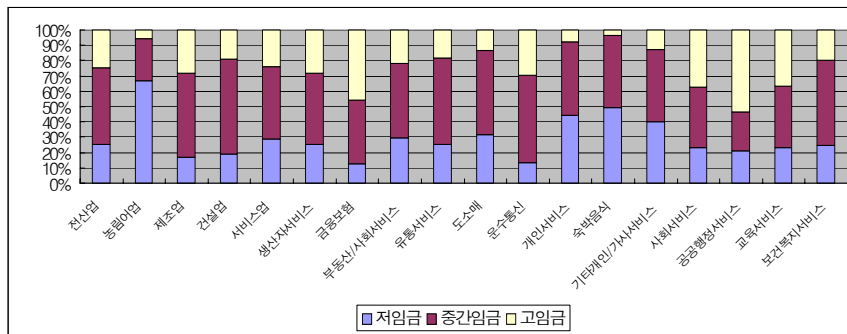
	월 임금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 분포			최저임금 미달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산업	1,745.5	9.15	27.4	44.5	28.1	11.9
농림어업	891.9	4.80	67.3	26.7	6.0	49.3
제조업	1,900.0	9.74	19.2	50.2	30.6	7.5
건설업	1,643.7	8.20	22.0	58.6	19.4	7.9
서비스업	1,710.7	9.08	30.4	41.2	28.3	13.4
[생산자서비스]	1,912.9	10.17	24.8	40.8	34.4	12.4
금융보험업	2,552.0	13.96	7.4	38.4	54.2	2.7
부동산/사업서비스	1,678.2	8.78	31.2	41.7	27.2	16.0
[유통서비스]	1,610.5	8.09	30.9	48.8	20.3	13.0
도소매업	1,444.1	7.27	35.7	48.9	15.4	15.8
운수/통신업	1,964.6	9.84	20.7	48.5	30.7	6.9
[개인서비스]	1,188.0	5.95	52.9	37.5	9.6	25.5
숙박음식점업	1,016.0	4.89	65.2	30.3	4.5	29.9
기타/가사서비스	1,365.2	7.04	40.3	44.9	14.8	21.0
[사회서비스]	2,040.1	11.58	17.1	37.1	45.8	4.9
공공행정	2,273.8	12.98	15.9	23.1	61.0	5.9
교육서비스업	2,058.5	11.89	14.7	39.0	46.3	3.7
보건사회복지사업	1,723.4	9.30	23.2	50.3	26.5	6.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8월 부가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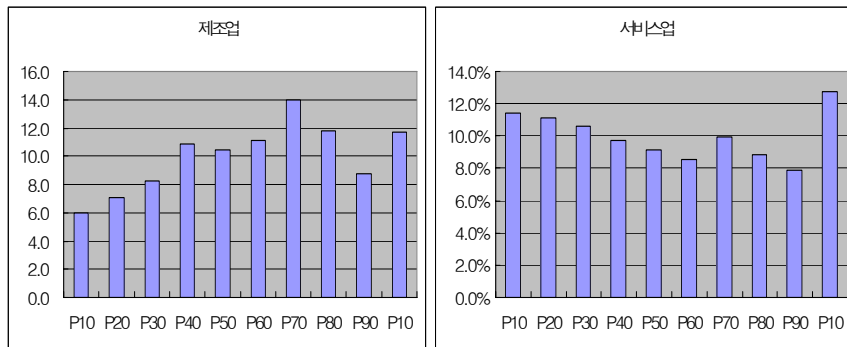
[그림 2-3]에서는 전산업 월 평균임금의 일자리 10분위를 각 산업에 적용하여 그 구성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체로 (다소 우측 편중의)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는 한편, 서비스업 및 유통서비스업은 N자형 분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및 생산자서비스는 고임금집단의 편중 분포(우상향)를 보이는 반면, 개인서비스와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저임금집단의 편중 분포(우하향)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전산업 노동자의 비율이 11.9%에 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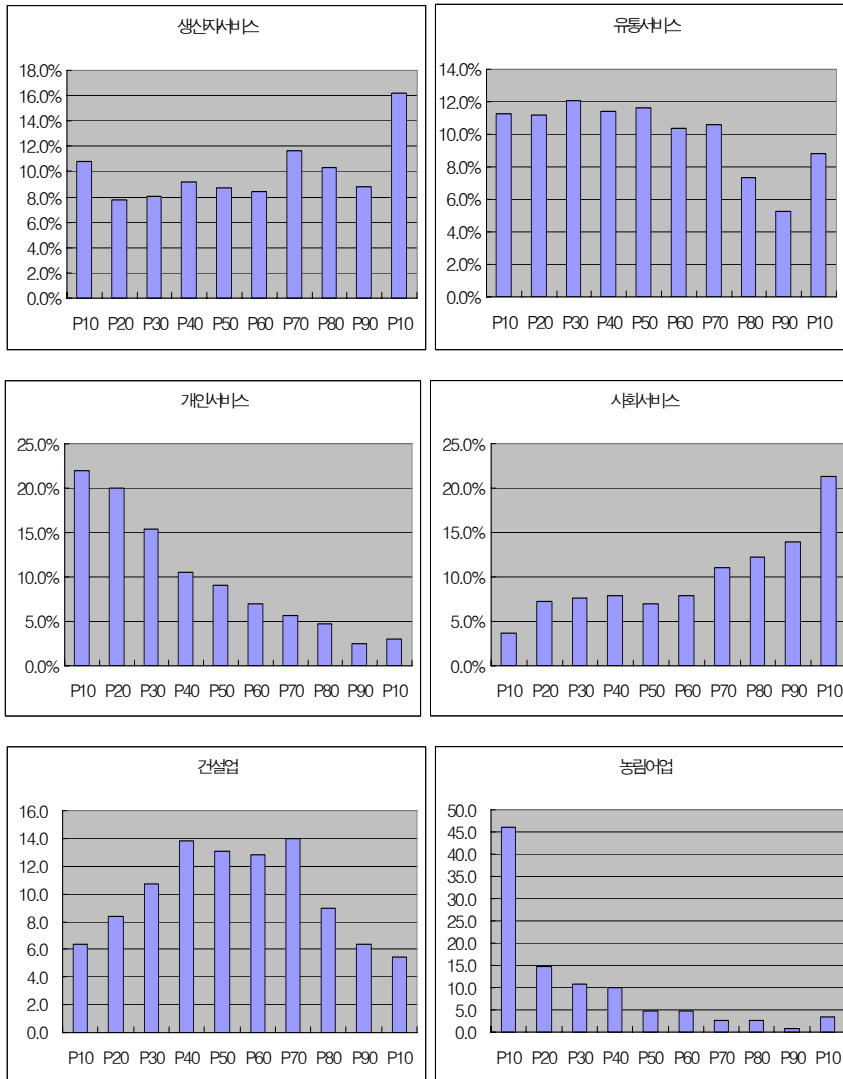
가운데, 사회서비스부문의 비율이 5% 미만으로 가장 낮은 반면 농림어업과 개인서비스부문이 각각 49.3%와 25.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 산업별 상대적 임금 일자리 분포



[그림 2-3] 산업별 임금10분위 일자리 분포





〈표 2-10〉 산업별 고용조건 비교

(단위: %, 시간)

	근로계약	주5일제	교육훈련 유무	교육훈련 시간	노조가입
전산업	42.8	39.8	24.9	8.0	12.1
농림어업	10.7	10.1	7.3	2.1	5.3
제조업	51.7	47.3	22.8	6.2	16.6
건설업	26.9	14.1	10.2	2.8	3.6
서비스업	42.4	40.7	27.5	9.3	11.5
[생산자서비스]	61.1	57.5	30.5	9.4	10.8
금융보험업	62.7	87.8	54.5	20.6	23.5
부동산/사업서비스	60.5	46.4	21.7	5.3	6.1
[유통서비스]	40.4	30.0	23.3	6.6	15.9
도소매업	33.3	23.2	17.5	5.0	5.1
운수/통신업	55.4	44.3	35.5	9.9	38.8
[개인서비스]	19.4	13.9	11.8	3.5	3.8
숙박음식점업	11.3	7.6	6.0	1.3	2.7
기타/가사서비스	27.8	20.4	17.6	5.7	5.0
[사회서비스]	44.7	56.9	41.8	16.7	14.0
공공행정	38.0	93.5	49.5	20.7	17.6
교육서비스업	42.9	38.8	40.6	17.9	11.8
보건사회복지사업	56.2	48.5	34.8	9.9	14.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8월 부가조사자료.

산업별 주요 고용조건 실태에 대해 <표 2-10>에서 정리-예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에 대해 전산업 평균(42.8%)을 상회하는 산업으로는 생산서비스(61.1%)와 제조업(51.7%)을 꼽을 수 있는 반면, 그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산업부문에는 농림어업(10.7%)을 비롯하여 개인서비스(19.4%)와 건설업(26.9%)이 해당된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생산자서비스(57.5%), 사회서비스(56.9%) 그리고 제조업(47.3%)이 전산업 평균(39.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농림어업(10.1%), 개인서비스

(13.9%), 건설업(14.1%) 및 유통서비스(30.0%)가 평균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훈련 유무와 실제 훈련시간에 있어 사회서비스와 금융보험업이 전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건설업-농림어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조 가입율의 경우에는 통신/운수업-금융보험업-제조업-사회서비스의 높은 조직화부문과 농림어업-건설업-숙박음식업-기타/가사서비스-도소매업-부동산.사업서비스의 낮은 조직화부문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11〉 산업별 사회보험-근로기준 수혜 비중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가
전산업	63.2	64.4	55.3	57.5	55.9	43.3	49.8
농림어업	18.8	20.0	15.4	14.7	16.0	7.4	12.0
제조업	80.6	81.1	80.1	75.0	73.5	63.8	65.6
건설업	41.4	41.6	40.4	36.2	35.5	23.1	28.1
서비스업	60.9	62.4	49.5	55.0	53.2	39.4	47.8
[생산자서비스]	69.3	74.6	68.9	65.4	59.7	41.2	55.5
금융보험업	65.8	65.6	64.0	60.7	60.8	47.7	59.0
부동산/사업서비스	70.6	77.8	70.7	67.1	59.2	40.1	54.2
[유통서비스]	61.1	61.4	58.6	52.9	52.6	35.9	42.9
도소매업	51.8	51.8	50.7	43.1	43.7	26.3	34.4
운수/통신업	80.8	81.7	75.5	73.7	71.6	56.3	61.0
[개인서비스]	29.6	29.4	26.8	25.2	25.7	16.9	21.0
숙박음식점업	16.7	16.4	15.8	13.2	14.1	9.9	11.4
기타/가사서비스	42.8	42.8	38.0	37.5	37.6	24.2	30.8
[사회서비스]	77.9	78.3	39.8	71.3	70.0	58.8	67.1
공공행정	83.7	84.2	17.5	78.2	78.4	74.9	77.6
교육서비스업	70.1	70.1	30.3	64.3	62.5	52.2	60.8
보건사회복지사업	86.2	87.4	81.4	76.8	74.7	52.1	6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부가조사자료.

<표 2-11>에서는 산업별 사회보험과 법정 근로기준의 적용비율을 정리·예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제조업-운수통신업-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전산업 평균 수준을 일정하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부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평균이상의 적용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제외의 부문 특성이 작용하여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림어업-건설업-개인서비스부문의 3개 사회보험의 가입율이 전산업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부문의 사회복지배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정 근로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사회서비스 및 금융보험업이 전산업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농림어업-건설업-개인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이 평균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제4절 산업별 고용 질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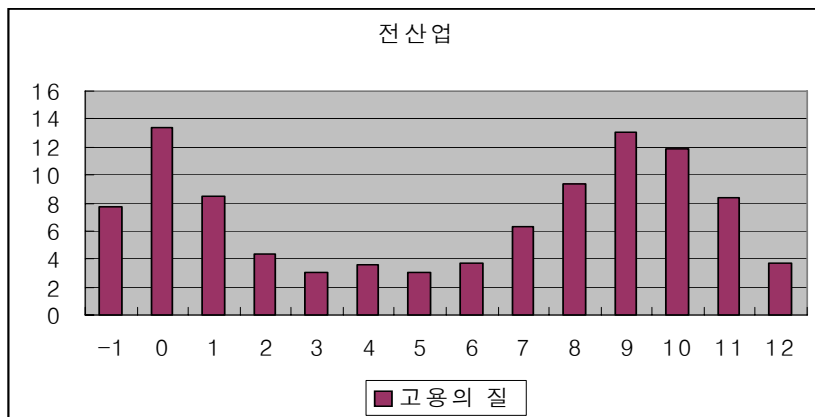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산업간 고용 질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한다.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자료의 관련 설문항목 13개를 선정하여 총합하는 고용 질 지수(Employment Quality Index, EQI)를 산출하여 산업간 비교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EQI의 산출에 고려되는 세부 구성항목은 <표 2-12>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으며, 전체 13개 항목 중에서 LoWER 저임금집단에 대해서만 해당 -1점, 미해당 0점을 적용하는 한편, 남은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1점, 미해당 0점을 적용하여 합계한 점수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EQI는 최고 12점~최저 -1점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2-12〉 고용 질의 측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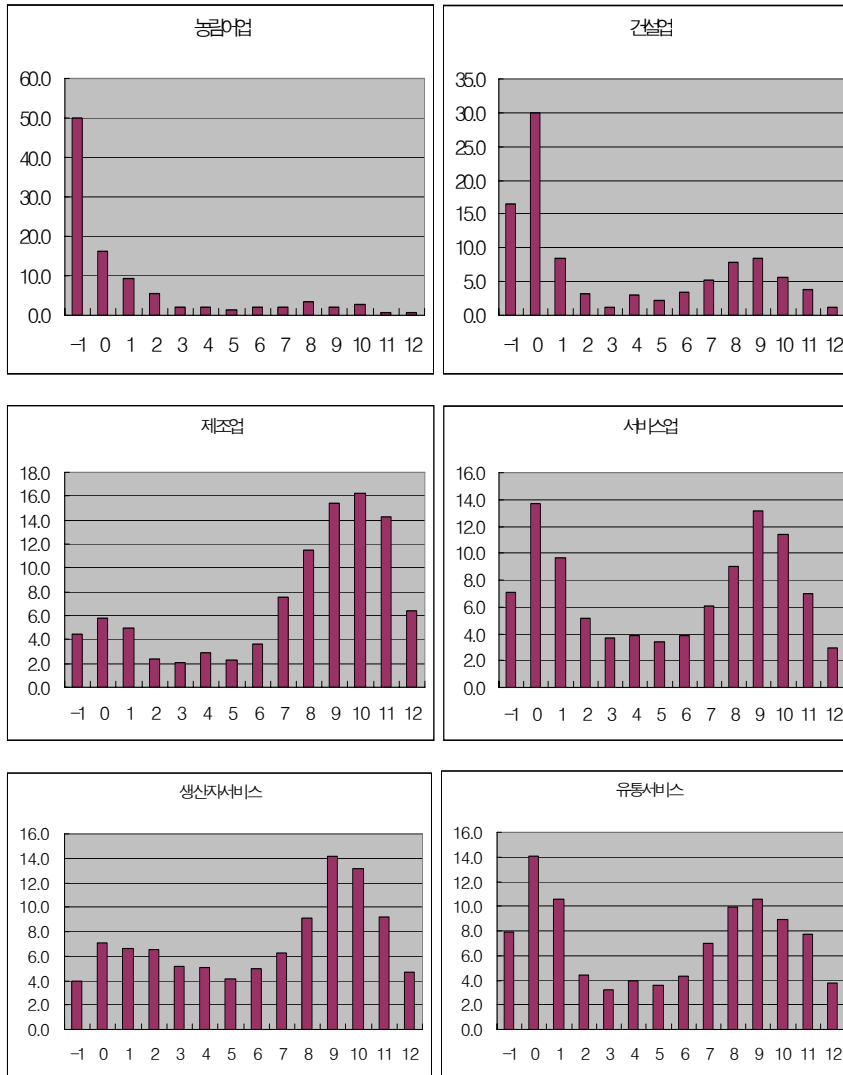
범주	세부 구성요소
법정 근로기준(4개)	퇴직금(57.5%) 시간의 수당(43.3%), 유급휴가(49.8%), 근로계약 작성(42.8%)
사회보험 가입(3개)	국민연금(63.2%), 건강보험(64.4%), 고용보험(55.3%)
고용조건(4개)	정규직(64.1%), 시간당 LoWER 저임금(-; 27.4%), 5년 이상 근속기간(28.7%), 주5일제 시행(39.8%)
인적자원 관리(2개)	상여금(55.9%), 교육훈련(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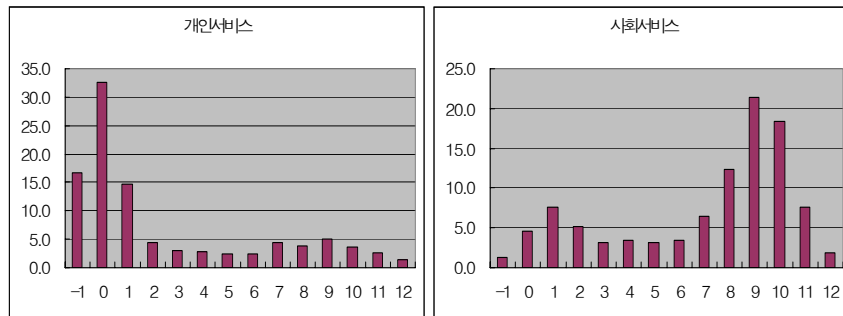
[그림 2-4]은 전산업의 고용 질 지수(EQI)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바, “쌍봉형(Bi-modal shape)”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림 2-5]에서 산업별 EQI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부문은 우편향 쌍봉형을 보여주는 반면, 서비스업 전체와 유통서비스는 좌편향 쌍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림어업-건설업-개인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좌단 밀집의 ‘L자형’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전산업의 고용 질 분포



[그림 2-5] 산업별 고용의 질 분포





다음으로는, 고용 질의 산업간 편차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과 회귀분석(OLS)의 두 가지 분석기법을 적용한다. 우선, <표 2-13>과 <표 2-14>에서는 20개 대산업범주들의 고용 질 지수에 대한 변량분석(ANOVA)을 예시하고 있다. <표 2-13>에서 보여주듯이, 고용 질 지수의 총 변량분산에서 산업간 분산의 비중이 23.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2-14>에서는 사후 변량검정(Post Hoc test)을 위한 Duncan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산업부문들의 고용 질 지수에 대한 1:1 비교를 통해 그 위계 구조를 판별해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4>의 Duncan 검정 결과($\alpha < .05$)에 따르면, 고용 질의 산업간 편차에 있어 6개 하위집단(subsets)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최상위의 고용 질 지수를 가진 산업부문으로는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국제/외국기관으로 확인되며, 차상위 집단으로는 통신업, 공공행정서비스, 광업, 보건복지, 제조업, 금융보험,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사서비스가 평균 -0.133의 점수를 드러내 최하위 고용 질의 산업으로 꼽히게 되었으며, 이어 농림업, 숙박음식, 어업이 1점대의 평균값을 보여주며 차하위의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2-13〉 고용 질 지수(EQI)의 변량분석(ANOVA) 결과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산업간 분산	69167.0	19	3640.4	254.484	0.000
산업내 분산	226904.6	15862	14.3		
Total	296071.6	15881			

〈표 2-14〉 고용 질의 변량분석(ANOVA) Post Hoc(Duncan) 검정 결과

산업분류	빈도(천명)	Subset for alpha = .05					
가사서비스	159	-0.133					
농림업	132	1.050					
숙박음식	1174	1.248					
어업	17	1.554					
건설업	1394	3.329					
기타공공개인서비스	668	4.165					
부동산임대	297	4.192					
도소매	1942	4.262					
오락문화	310	4.399					
보건복지서비스	1333	6.248					
사업서비스	1738	6.347					
운수	682	7.123 7.123					
금융보험	747	7.179 7.179					
제조업	3458	7.373 7.373					
보건복지서비스	680	7.423 7.423					
광업	17	7.733					
공공행정서비스	799	7.919					
통신	230	7.941					
국제기관	18	9.472					
전기가스수도	77	10.067					
Sig.		1.000	0.401	0.090	0.067	0.218	0.290

이상의 변량분석(ANOVA)에서는 여타의 인적-사업장 특성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산업간 고용 질 지수의 차이를 검정하고 있다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통제된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표 2-16>에는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변인들의 기초통계와 가공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표 2-17>에서는 고용 질에 대한 OLS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에서는 서비스산업 범주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모형 2)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을 4개 세부부문(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으로 대체하여 재구성하고, (모형 3)에서는 서비스산업을 다시 9개 대분류 범주로 대체-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노동자 인적속성과 사업장 특성을 통제한 각 분석모형에서 분석 초점이 되고 있는 고용 질의 산업간 편차 유의도를 검정하기 위해 광공업용 기준범주로 삼아 비교한 결과, 전기가스수도업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산업범주가 유의하게 부적(-) 회귀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고용조건들을 총합한 고용 질 지수(EQI)에 대한 산업간 비교를 통해 제조업(광업 포함)이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보건복지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산업의 모든 세부부문에 비해서도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제조업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공공행정서비스>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금융보험업>운수통신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기타공공/개인가사서비스>농림어업>숙박음식업>건설업의 순으로 그 상대적 크기가 서열화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같은 회귀분석결과는 상기한 변량분석의 사후검정결과와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5〉 분석 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비고
- 성별(더미)	15,882	.581	.493	남성 기준범주
- 연령	15,882	39.458	11.969	
- 학력범주: 초 졸	15,882	.079	.269	고졸 기준범주
중 졸	15,882	.089	.285	
전문대 졸	15,882	.135	.342	
대학 졸	15,882	.239	.426	
대학원 졸	15,882	.039	.193	
- 직종: 관리/전문직	15,882	.132	.338	생산기능직 기준범주
기술/준전문직	15,882	.126	.332	
사무직	15,882	.194	.395	
판매/서비스직	15,882	.171	.376	
단순노무직	15,882	.160	.367	농림어업 종사자 포함
- 노조가입	15,882	.121	.326	노조가입 기준범주
- 사업장 규모: 1-29인	15,882	.592	.491	100-299인 기준범주
30-99인	15,882	.196	.397	
300인 이상	15,882	.115	.320	
- 산업: 농림어업	15,882	.009	.097	광공업 기준범주
전기수도가스	15,882	.005	.069	
건설업	15,882	.088	.283	
서비스업	15,882	.679	.467	
생산자서비스	15,882	.175	.380	
유통서비스	15,882	.180	.384	
개인서비스	15,882	.146	.353	
사회서비스	15,882	.178	.383	
금융보험	15,882	.047	.212	
부동산/사회서비스	15,882	.122	.328	
도소매	15,882	.074	.262	
운수/통신업	15,882	.057	.233	
숙박음식업	15,882	.128	.334	
기타개인공공서비스	15,882	.052	.221	
공공행정서비스	15,882	.084	.277	
교육서비스	15,882	.043	.203	
보건복지서비스	15,882	.072	.258	
- 고용의 질 지수	15,882	5.624	4.318	13개 요소 합계(-1~12점)

〈표 2-16〉 노동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OLS 분석결과

	고용의 질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2.869(.267)***	2.906(.264)***	2.892(.263)***
성별(남성=1)	1.152(.052)***	1.123(.053)***	1.046(.053)***
연령	.201(.012)***	.203(.012)***	.203(.012)***
연령 ²	-.002(.000)***	-.002(.000)***	-.002(.000)***
학력(고졸 기준)			
초졸	-.571(.107)***	-.497(.106)***	-.511(.105)***
중졸	-.661(.090)***	-.581(.089)***	-.570(.088)***
전문대졸	1.093(.077)***	1.040(.076)***	.993(.076)***
대학졸	.787(.072)***	.739(.072)***	.809(.071)***
대학원졸	-.060(.142)	.006(.141)	.194(.148)
직종(생산기능직 기준)			
관리/전문직	1.921(.105)***	1.792(.105)***	1.989(.107)***
기술/준전문직	1.282(.094)***	1.172(.094)***	1.177(.094)***
사무직	2.000(.085)***	1.904(.084)***	1.877(.084)***
판매서비스직	-1.490(.089)***	-1.179(.089)***	-1.107(.095)***
단순노무직	-1.462(.085)***	-1.515(.084)***	-1.529(.084)***
노조 가입	2.207(.077)***	2.207(.076)***	2.228(.076)***
사업장규모(100-299인 기준)			
1-29인	-2.882(.084)***	-2.769(.083)***	-2.646(.084)***
30-99인	-.784(.091)***	-.820(.090)***	-.646(.090)***
300인 이상	.278(.101)**	.281(.100)**	.212(.099)*
산업(광공업 기준)			
농림어업	-1.918(.250)***	-1.982(.247)***	-1.978(.245)***
전기가스수도	.123(.336)	.198(.332)	.191(.329)
건설업	-2.556(.096)***	-2.602(.095)***	-2.614(.094)***
서비스업	-.955(.064)***		
생산자서비스		-.362(.079)***	
유통서비스		-1.071(.078)***	
개인서비스		-2.067(.088)***	
사회서비스		-.815(.081)***	
금융보험			-.634(.122)***
도소매			-1.198(.092)***
숙박음식			-2.392(.116)***
운수통신			-.924(.108)***
부동산/사회서비스			-.346(.085)***
공공행정서비스			-.239(.117)*
교육서비스			-1.867(.106)***
보건복지서비스			.046(.127)
기타공공/가사서비스			-1.914(.103)***
F (sig.)	921.981***	843.897***	719.474***
Adj. R ²	.549	.560	.567
사례수	15,882	15,882	15,882

주 : ()안은 표준편차임. † p< .1 * p< .05 ** p< .01 *** p< .001

제5절 소결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노동시장 전반에 있어 양극화의 추이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면에는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동과 불균등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실제, ([그림 2-4]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 질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문제 실상을 산업별로 분해해보면 각 산업부문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양극화구조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낮은 고용 질의 농림어업-건설업-개인서비스부문과 좋은 일자리 질의 제조업-사회서비스-생산자서비스부문간의 격차-간극이 뚜렷하게 고착화됨으로써 노동시장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대처하려 함에 있어 이 같은 산업간 불균등구조가 내재하고 있다는 현실 분석에 의거하여 노동시장의 총량적 정책처방을 지양하고 산업별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좋은 일자리의 산업부문을 유지-확산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 나쁜 일자리의 산업부문에 있어 그 고용조건을 개선토록 유도-강제하려는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요망되는 것이다.

우선, 산업별 고용구조와 고용 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고용규모 및 비중이 그 생산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홍장표, 2007). 따라서,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질 유지-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손꼽을 수 있다.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공동화(de-industrialization) 및 해외생산기지 이전을 제어하고 생산거점 투자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노사정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협약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존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행 장시간

생산체제에서 탈피하여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적극 유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고용구조는 전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양극화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세부 부문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통상, 탈산업화, 즉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산업의 고용증대를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지난 1990년대 이래 서비스산업 내부에서 특히 유통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생산자서비스의 고임금부문과 개인서비스의 저임금부문에서 동시에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노동 양극화에 일정하게 기여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임금-저부가가치의 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부문은 해당 서비스의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 부문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과 투자비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망되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수요의 증대에 못지않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물론,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방식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특히 교육·보건복지 및 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통적인 저임금-저부가가치의 개인서비스·유통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그 사업부문의 규모 확대와 경영방식 선진화를 통해 그 일자리의 질을 제고토록 함과 동시에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회보험 미가입 등의 탈법·편법 노무관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취약부문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법정 고용조건 강제를 위한 특단의 정책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저부가가치부문(유통·개인서비스)의 산업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들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실직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고임금 산업부문으로의 상향 전직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제3장 산업별 임금불평등도와 임금불평등 분해

제1절 문제제기

오늘날 사회양극화는 오늘날 한국 분배구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다.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그것의 사회정치적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90년대 초중반에 비해서 2000년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의 단위를 막론하고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강승복, 2005; 여유진 외, 2005: 179-180; 유경준·김대일, 2002: 19-22; 유경준, 2007: 27-28; 정진호, 2001: 2-4 및 2005: ; 통계청, 2007).

그렇다면, 왜 경제적 불평등이 경향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인은 기술적 요인에서부터 제도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임금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적자본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서부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변동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배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하여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평등은 피고용자의 산업별 임금 불평등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피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루는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일반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획득하는 임금의 불평등

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논의의 초점은 산업별 임금 불평등이다. 산업간 임금 불평등(inter-industry wage inequality)의 현황과 그것의 원인을 분석한다.

산업구조적인 요인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분배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다. 역사적으로 산업구조에서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분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산업부문의 비중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에 상응하여 산업별 임금구조도 변하게 된다.

둘째,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사회에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비중의 변화와 더불어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별 임금 불평등에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최근까지 내수의 침체로 인하여 내수산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었지만, 수출은 호조를 보여서 수출산업 부문은 활황을 겪어서, 부문에 따른 임금격차가 전체 임금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산업구조의 또 다른 특징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피고용자들의 임금격차가 전체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Kremer and Maskin, 1996; Lallemand, Plasman and Rycx, 2007; Oi and Idson, 1999). 기업규모는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생산체제 내에서의 위치와 상품 시장에서의 지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산업별 임금 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한다. 외환위기 전후의 산업별 임금 추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2005년도와 2007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불평등 정도와 산업별 불평등 정도를 분석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와 지니계수 및 분산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중심으로 산업별 임금불평등 정도를 분석한다. 그 다음 임금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임금 불평등을 산업 간과 산업 내 불평등으로 분해한다.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는 기업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서 임금불평등의 요인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용자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산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제2절 기존 연구

임금은 개인 및 가족의 경제수준, 기업의 이윤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임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까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 축소와 수요의 내용 변화로 고용문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임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임금과 생산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점차 불평등이 새롭게 사회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불평등 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임금불평등이 양극화라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정치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근로자 임금 불평등에 관한 논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주엽·김동배·전병유·김주섭, 2004; 정진호, 2005).

근로자 임금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임금불평등이 약화되다가 1997년을 전후로 임금불평등이 증가하는 U자형 추세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강승호, 2005: 19-21; 정진호, 2005: 31-32).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 불평등은 7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다시 높아져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10인 이상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상용직만을 대

상으로 하여, 실제 임금 불평등지수보다 낮은 불평등 정도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불평등 심화 추세는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별 임금격차(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또한 국가들 사이에서 산업간 임금격차의 패턴이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Allen, 1995; Gittleman and Wolff, 1993; Hartog et al., 1997; Kreuger and Summers, 1988). 산업간 임금격차의 패턴은 정치체제나 경제발전 수준을 떠나서 모든 사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미국, 브라질 등지에서 경제발전 수준이나 산업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임금격차 패턴은 유사하게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Kreuger and Summers, 1988; Katz and Summers, 1989; Kahn, 1998).

개인의 생산성과 그에 대한 보상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산업별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산업별 임금격차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인식되었다. 산업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대나 효율임금 때문이다((Kreuger and Summers, 1988; Slichter, 1950). 대표적으로, 크르거와 서머즈((Kreuger and Summers, 1988)는 개인들의 인적자본이나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이후에도 산업부문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고전파 이론이 맞지 않는 증거라고 보았다. 그것은 일종의 지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일찍이 산업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스틱터(Slichter 1950)가 미국의 시간당 임금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지대공유(rent-sharing)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논리이다.

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산업에 따른 인적자본의 차이, 노동조합과 같은 노사관계 제도, 기업규모,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윤율 등도 많이 언급되었다(Arbache and Carneiro, 1999; Lane, Salmon and

Spelzer, 2007; Osburn, 2000; Rycx, 2002). 산업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인적자본을 소유한 피고용자들의 임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노조 조직률이나 노사관계의 차이가 산업별 임금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산업별 임금격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간 임금격차가 전체 근로자 임금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다양한 임금함수를 분석하여,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별 임금격차 연구들은 가용한 자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비교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별 임금불평등 연구는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논의나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제3절 자료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5년과 2007년 통계청이 수집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임금관련 논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2005년도와 2007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전체 70,786명 가운데 고용주,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용자 26,083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는 기업규모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업규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2007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도 자료를 추가분석한 것이다.

1. 산업구분과 변수

산업임금 불평등 분해에서 중요한 부분은 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산업분류이다. 산업 범주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산업간 불평등과 산업 내의 불평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으로 구분하는 클락(Clark)의 산업분류를 적용하여 분석한다(Clark, 1950). 이것은 산업화와 더불어 농업 중심 사회에서 제조업 중심 사회, 제조업 중심 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시적인 지표로 많이 사용되었다(대표적으로 Maddison, 1995).

클락의 산업 대분류는 제3차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팽창이 대단히 다양한 원인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업을 제3차 산업 하나로 묶는 것이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제3차 산업 내 내적 이질성이 너무 커져서, 제3차 산업 자체를 하나의 산업 범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김유선, 2006; 신헌영, 2006; 이병훈, 2006; 정준호, 2006). 제3차 산업은 생산자 서비스 혹은 사업 서비스라고 불리는 법무나 회계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업, 도소매나 숙박과 같은 대인 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중문화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제3차 산업의 이질성은 대단히 높아져서 그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제3차 산업을 생산자(사업) 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4개의 산업으로 구분한다(Elfring, 1988 및 1989).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산업 범주는 7개 산업 범주다. 7개 산업은 제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림어업 및 광공업, 제2차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제3차 산업을 세분화한 서비스업 4개와 제2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으로

구분하기 힘든 건설업으로 구성된다. 제3차 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전기 및 가스, 금융, 사업서비스), 유통서비스(도소매, 운수, 통신), 개인서비스(음식, 숙박, 기타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복지, 오락 및 스포츠, 국제 및 외국기관 근무)로 구분하였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공급 차원인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와 같은 조직의 속성과 산업적 속성들과 경기변동과 같은 요소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월평균 임금 분포와 임금결정 분석에 사용한 다른 요인들의 속성은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산업 3분류에서 제1차 산업 월평균 임금이 79.2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차 산업 월평균 임금이 106.0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7가지로 구분하여 산업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191.7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서비스 종사자가 농림어업 및 광업 다음으로 낮은 100.10만원의 월평균 임금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제3차 산업 내에서 대단히 큰 임금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업에 따라서 종사하는 피고용자들의 인적 속성은 대단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산업간 성별 분포도 대단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서비스업과 제1차 산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각각 67.05%와 62.65%에 달하였다. 반면에 건설업에서의 여성 비율은 9.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들 산업에서 대체로 임금이 낮았지만, 임금이 가장 높은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 비율이 55.15%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연령분포도 대단히 큰 편차를 보였다. 제1차 산업에서 평균 연령이 56.82세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건설업으로 42세였다. 반면에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낮은 산업부문은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각각 37.07세와 37.67세였다.

산업별 인적자본의 분포도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농림어업의 경우 피고용자의 66.02%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이고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학력을 보인 반면,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자들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졸업자 비율은 5.05%에 불과하였다. 그 대신 사회서비스업에서는 대졸자의 비율이 3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자 비율도 9.16%에 달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거의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대졸자이고, 11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대학원 졸업자임을 알 수 있다. 제2차 산업과 유통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의 학력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월평균 임금 수준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주요 요소인 학력분포도 매우 유사하여, 산업의 속성은 매우 다르지만, 종사자의 특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서, 전체적으로 4.87년이지만, 농림어업 및 광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에서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2년 내외의 낮은 근속연수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제조업,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는 평균과 같거나 혹은 평균 이상이었다. 특히 가장 임금이 높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7.87년으로 근속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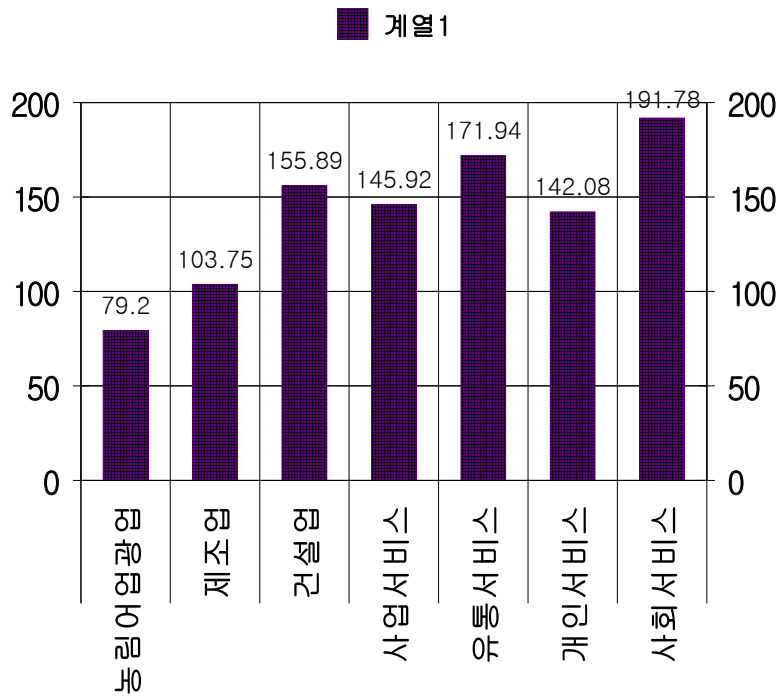
산업별 직업분포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숙련 노동자 비율은 제1차 산업에서 54.46%로 가장 높았고, 사회서비스업에서 6.82%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관리직·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농업에서 0.96%로 가장 낮았고, 사회서비스업에서 34.31%로 가장 높았다. 사회서비스업은 관리직·전문직 종사자와 기술직·준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52.27%에 달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숙련·반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각각 53.12%와 50.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숙련 노동자 비율까지 합치면, 전체 노동자의 비율은 각각 62.17%와 74.67%에 달하였다. 산업에 따라서 직업 분포가 대단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피고용자 기초통계표

변수	전계	산업 3분류			서비스 산업 세분류(추가)				
		제1차	제2차	제3차	건설	사업	유통	개인	사회
월평균 임금 (만원)	157.22	79.20	103.75	106.09	145.92	171.94	142.08	100.10	191.78
개인변수									
성(%)	44.00	62.65	34.27	46.17	9.93	41.48	43.08	67.05	55.15
연령(세)	39.32	56.82	38.91	39.08	42.00	40.68	37.07	40.20	37.67
학력									
초등이하	9.96	66.02	8.62	9.18	14.82	10.09	5.65	15.85	5.05
중졸	10.27	11.33	12.77	9.46	15.91	8.88	7.86	16.95	3.91
고졸	43.46	16.14	50.58	41.80	44.99	35.63	55.37	49.25	28.76
초대졸	12.12	3.61	11.36	12.54	9.45	13.30	13.44	7.30	15.75
대졸	20.6	2.65	15.10	22.79	14.13	27.75	17.00	7.18	37.38
대학원졸	3.53	0.24	1.56	4.22	0.69	4.34	0.67	3.48	9.16
직업									
관리/전문	11.64	0.96	5.27	13.88	5.59	12.77	2.15	4.15	34.31
기술/준전문	10.08	1.69	8.01	10.91	6.42	13.60	8.06	3.27	17.96
사무직	19.50	2.65	17.28	20.55	12.96	28.38	24.21	7.97	22.54
판매서비스	18.25	0.96	1.56	23.86	0.22	12.82	31.10	57.92	15.21
농림어업	.60	31.57	0.03	0.12	0.17	0.33	0.00	0.06	0.07
숙련/반숙련	23.81	7.71	53.12	14.93	50.67	8.06	19.50	11.05	3.08
미숙련	16.13	54.46	14.73	15.76	23.97	24.04	14.98	15.57	6.82
노동시장 변수									
주노동시간	44.00	41.52	46.56	43.25	43.80	44.31	47.52	48.72	35.21
부업노동시간	0.29	1.41	0.18	0.30	0.30	0.37	0.29	0.27	0.27
비정규직	47.46	85.54	30.68	51.93	71.65	41.30	54.42	81.22	31.28
노조직률	12.43	4.34	19.59	10.35	3.81	12.70	15.77	2.78	11.40
근속년수	4.87	1.61	5.73	4.66	1.90	4.72	4.07	2.21	7.87

참고: 산업 세분류에서 농림어업/광업과 제조업은 제1차 산업과 제2차 산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표에서 추가하지 않았음.

[그림 3-1] 산업별 월평균 임금



2. 임금 불평등 지수 분해

산업별 임금 불평등 분해는 인구집단에 따른 불평등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Cowell, 1995: 149-154; Litchfield, 1999). 이 방법은 전체적인 불평등을 하위집단간 불평등과 하위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하여, 전체 임금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전체 n 명의 피고용자가 k 개의 산업에 종사하며, 각 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규모는 각각 n_1, n_2, \dots, n_k 이고, 평균 임금은 각각 u_1, u_2, \dots, u_k 라고 한다면, 전체 불평등

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I = F(I_1, I_2, \dots, I_k; u_1, u_2, \dots, u_k; n_1, n_2, \dots, n_k)$$

여기에서 I_k 는 k 산업내의 불평등이다.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이하 GE)는 이전의 원칙, 분해 가능성, 측정척도 무관성, 인구원칙 등 불평등 지수가 지녀야 할 모든 공리적인 속성들을 지니는 불평등 지수이다(Theil, 1967; Shorrocks, 1984; Cowell, 1995: 55-60). 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_\theta = \frac{1}{\theta(1-\theta)} \left[\frac{1}{n} \sum_{i=1}^n \left(\frac{y_i}{u} \right)^\theta - 1 \right] \text{ if } \theta \in \mathbb{R} - \{0, 1\}$$

x_i 는 I번째 개인의 임금이며, $I(1, 2, \dots, n)$ 과 u 는 평균임금으로 $\frac{1}{n} \sum_{i=1}^n y_i$ 이다. E의 값은 0에서 ∞ 이며 0은 평등한 임금 분포를 가리키며,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더 심하다. 모수치 θ 는 임금분포에서 다른 위치의 소득간 거리에 주어진 비중을 지칭하며, θ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포 상위 집단에 E가 더 민감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로피탈의 법칙에 의해서 θ 가 0과 1인 경우, 타일(Theil) 불평등 지수이며, θ 가 2인 경우 E는 변이계수 제곱(CV²)의 1/2이 된다. 이는 각각 아래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E_0 = \frac{1}{n} \sum_{i=1}^n \log \left(\frac{u}{y_i} \right)$$

$$E_1 = \frac{1}{n} \sum_{i=1}^n \frac{y_i}{u} \log \frac{y_i}{u}$$

$$E_2 = \frac{1}{2} \left[\frac{1}{n} \sum_{i=1}^n \left(\frac{x_i}{u} \right)^2 - 1 \right]$$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니계수 G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지니계수는 요인별로 불평등 분해가 가능하기 않기 때문에,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G = \frac{\sum_{i=1}^n (2i - n - 1) x_i}{n^2 u}$$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불평등을 하위 집단별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전체 불평등을 하위집단 간 불평등(I_b)과 하위집단 내 불평등(I_w)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전체 불평등(I)을 하위집단으로 분해할 때, 일반화된 엔트로피는 집단 내 불평등과 집단 간 불평등의 합으로 구성된다. 집단 간 불평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I_b = \frac{1}{\theta(1-\theta)} \left[\frac{1}{n} \sum_{k=1}^n \left(\frac{\overline{u_k}}{u} \right)^\theta - 1 \right]$$

여기에서 $\overline{u_k}$ 는 k산업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산업 내 임금불평등은 I_w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I_w = \sum_{j=1}^k w_j E(\theta)_j$$

$$w_j = v_j^\theta f_j^{1-\theta}$$

여기에서 f_j 는 전체 피고용자 중에서 산업 j 에 종사하는 피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칭하며, v_j 는 전체 임금가운데 각 산업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칭한다.

전체 불평등은 산업 간 불평등과 산업 내 불평등의 합이다(Cowell and Jenkins 1995):

$$I = I_b + I_w$$

여기에서는 일반화된 엔트로피 가운데 E_0 , E_1 과 E_2 를 불평등 지수로 측정하고, 이들 불평등 지수들을 산업 간과 산업 내 임금불평등 분해에 사용한다.

다른 한 가지 불평등 분해방법은 회귀분석을 이용한 방법이다 (Fields, 2003; Israeli, 2007; Litchfield, 1999; Morduch and Sicular, 2002; Shorrocks, 1982; Yun, 2006).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불평등 분해방법은 일반적인 불평등 분해 방법이 지니는 인과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Cowell, 2000; Fields, 2003; Yun, 2006). 여기에서는 필즈(Gary Fields)가 제안한 불평등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임금 함수 Y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nY = a'Z_i$$

여기에서 $a = [\alpha, \beta_1, \beta_2, \dots, \beta_n, 1]$ 이고 $Z =$

$[1, x_1, x_2, \dots, x_n, e]$ 이다. 회귀계수가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로그 임금의 분산은 다음과 같다.

$$\sigma^2(\ln Y) = \sum_{j=1}^{j+2} cov(a_j Z_j, \ln Y)$$

양변을 $\sigma^2(\ln Y)$ 로 나눠주면,

$$100\% = \frac{\sum_{j=1}^{j+2} cov[a_j Z_j, \ln Y]}{\sigma^2(\ln Y)} \equiv \sum_{j=1}^{j+2} S_j(\ln Y)$$

여기에서 불평등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s_j(\ln Y) = cov[a_j, Z_j, \ln Y] / \sigma(\ln Y)$$

Z의 마지막 요인을 제거하면,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sum_{j=1}^{j+1} cov[a_j Z_j, \ln Y] / \sigma^2(\ln Y)$$

이것은 $R^2(\ln Y)$ 이다.

로그 임금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_j(\ln Y) = cov[a_j, Z_j, \ln Y] / \sigma(\ln Y) = a_j * \sigma(Z_j) * cov[Z_j, \ln Y] / \sigma(\ln Y)$$

여기에서

$$\sum_{j=1}^{j+2} s_j(\ln Y) = 100\%$$

$$\sum_{j=1}^{j+1} s_j(\ln Y) = R^2(\ln Y)$$

여기에서 j 번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불평등의 정도 $p_j(\ln Y)$ 는 다음과 같다.

$$p_j(\ln Y) \equiv \frac{s_j(\ln Y)}{R^2(\ln Y)}$$

제4절 분석 결과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산업별 임금불평등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임금불평등은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지수 분석을 통해서 살펴 본 월소득 불평등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피고용자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E_0 , E_1 와 E_2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근로자 임금 불평등도 0.3482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높은 불평등 지수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점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이전의 연구들보다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차이 때문이다. 이전의 임금불평등 연구들이 10인 이상의 민간부문 상용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구조기 본조사>를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용자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정진호, 2005).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전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 피고용자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그 결과 불평등 지수는 이전의 연구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시간적으로 임금불평등 지수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2005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전체 피고용자 임금불평등 엔트로피 지수를 포함한 모든 불평등 지수가 커졌다. E_0 , E_1 , E_2 , CV와 Gini 계수 모든 불평등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피고용자의 임금불평등 지수(2007년)

년도	산업	E0	E1	E2	CV	Gini	사례수	
2005	전체	0.2173	0.1990	0.2260	0.6724	0.3482	26,083	
	산업 3분류	1차 산업	0.3563	0.3383	0.4322	0.9308	0.4509	415
		2차 산업	0.1778	0.1658	0.1897	0.6160	0.3166	6,145
		3차 산업	0.2219	0.2047	0.2331	0.6829	0.3538	19,523
	산업 7분류	농림어광업	0.3563	0.3383	0.4322	0.9308	0.4509	415
		제조업	0.1778	0.1658	0.1897	0.6160	0.3166	6,145
		건설업	0.1420	0.1339	0.1479	0.5441	0.2848	2,307
		사업서비스	0.2124	0.2080	0.2490	0.7058	0.3559	3,985
		유통서비스	0.1949	0.1726	0.1914	0.6188	0.3224	4,605
		개인서비스	0.1774	0.1659	0.1901	0.6168	0.3144	3,275
사회서비스		0.2327	0.1967	0.2016	0.6350	0.3504	5,351	
2007	전체	0.2263	0.2089	0.2412	0.6946	0.3558	25,975	
	산업 3분류	1차 산업	0.3376	0.3246	0.4162	0.9134	0.4421	421
		2차 산업	0.1946	0.1819	0.2133	0.6532	0.3297	5,693
		3차 산업	0.2274	0.2112	0.2433	0.6976	0.3583	19,861
	산업 7분류	농림어광업	0.3376	0.3246	0.4162	0.9134	0.4219	421
		제조업	0.1946	0.1819	0.2133	0.6532	0.3297	5,693
		건설업	0.1483	0.1423	0.1590	0.5640	0.2945	2,349
		사업서비스	0.2169	0.2111	0.2474	0.7035	0.3594	4,326
		유통서비스	0.2048	0.1858	0.2121	0.6514	0.3332	4,470
		개인서비스	0.1710	0.1648	0.2015	0.6349	0.3104	3,307
사회서비스		0.2518	0.2116	0.2230	0.6678	0.3616	5,409	

셋째, 산업내 불평등을 살펴보면, 제1차 산업에서는 불평등이 감소하였던 반면,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의 임금 불평등 증가도 모든 불평등 지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제3차 산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서비스,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서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서비스 부문은 불평등 지수에 따라서 증감이 동시에 나타났다.

넷째,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점에서, 이 1999년 미국의 피고용자 임금소득 지니계수가 .338로 2005년과 2007년 한국의 .3482와 .3558보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Fields 2003), 한국의 임금 소득 불평등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거의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산업별 불평등 분해 분석결과

<표 3-3>은 산업별 불평등 분해 결과이다. 전체 피고용자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를 산업 내 불평등과 산업간 불평등으로 분해한 것이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점은 2005년 전체 불평등 지수에서 산업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낮다는 점이다. E_0 , E_1 와 E_2 세 가지 엔트로피 지수에서 산업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타일지수(E_1)를 살펴보면, 지수값은 0.0028로 전체 0.1990의 1.4%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8.6%가 산업 내 임금불평등에 따른 임금불평등이었다. 이것은 피고용자들의 임금불평등 요인으로 산업 간 임금불평등이 무시할 만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고용자 임금 불평등의 요인이 주로 산업 내의 불평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2007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산업간 불평등 지수가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대단히 작은 증가로 그치고 있다.

전체 불평등에서 산업내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불평등의

대부분이 제3차 산업내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산업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3%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전체 불평등에서 제3차 산업내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75~76%에 달하고 있다. 제3차 산업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임금불평등에 더 큰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7년 제3차 산업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80%를 상회하여 2년 사이에 4% 정도 증가하였다.

〈표 3-3〉 산업별 불평등 일반화된 엔트로피 분해 결과(2007년)

	산업	E ₀	E ₁	E ₂	사례수
2005년	전체	0.2173	0.1990	0.2260	
	산업간 불평등	0.0036	0.0028	0.0026	26,083
	사업내 불평등				3
	A. 산업 3분류				
	1차 산업	0.0057	0.0027	0.0017	415
	2차 산업	0.0419	0.0419	0.0514	6,145
	3차 산업	0.1661	0.1516	0.1703	19,523
	B. 산업 7분류				
	농림어업	0.0057	0.0027	0.0017	415
	제조업	0.0419	0.0419	0.0514	6,145
건설업	0.0126	0.0109	0.0113	2,307	
사업서비스	0.0325	0.0348	0.0455	3,985	
유통서비스	0.0344	0.0275	0.0276	4,605	
개인서비스	0.0223	0.0134	0.0098	3,275	
사회서비스	0.0477	0.0492	0.0414	5,351	
2007년	전체	0.2263	0.2089	0.2412	
	산업간 불평등	0.0042	0.0034	0.0036	25,975
	사업내 불평등				3
	A. 산업 3분류				
	1차 산업	0.0055	0.0028	0.0020	421
	2차 산업	0.0427	0.0448	0.0590	5,693
	3차 산업	0.1739	0.1574	0.1766	19,861
	B. 산업 7분류				
	농림어업	0.0055	0.0028	0.0020	421
	제조업	0.0427	0.0448	0.4806	5,693
건설업	0.0134	0.0121	0.0127	2,349	
사업서비스	0.0361	0.0381	0.0483	4,326	
유통서비스	0.0352	0.0291	0.0303	4,470	
개인서비스	0.0218	0.0134	0.0104	3,307	
사회서비스	0.0524	0.0513	0.0627	5,409	

참고: 반올림을 한 관계로 산업내 불평등과 산업간 불평등 합이 전체 불평등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3차 산업을 4가지 서비스업으로 나눠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3차 산업에서 건설업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최종분석에서는 7개 산업분류가 사용되었고,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분해 결과는 <표 3-3> 패널 B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제3차 산업을 4개의 서비스업으로 구분한 결과, 제조업, 유통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내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세 가지 산업으로 밝혀졌다. 이들 산업 내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6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산업 가운데서는 사회서비스업 내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을 나타났다. 다시 타일지수(E_i)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업 내의 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는 0.0492로 전체의 임금불평등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제2차 산업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1%로 높은 편이지만, 전체 임금불평등에서 사회서비스업 임금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낮았다. 그 다음이 사업서비스로 17.5%인 0.0348이었다.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회귀분석을 통한 소득불평등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3-4>는 월평균 소득을 4가지 주요 요소에 회귀시킨 분석 결과이다. 4가지 요소는 개인적인 속성(인적 자본 포함), 노동조건, 직업과 산업이다. <표 3-4>의 모형 5는 산업 더미 변수를 임금에 회귀시킨 결과이다. 제조업을 비교의 기준으로 하여 사회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은 유의미하게 제조업 종사자의 임금보다 높으며, 사업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은 제조업 종사자의 임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농림어업 및 광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설명력은 전체 분산의 9% 정도로 나타났다. 단순한 모형은 산업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4>의 모형 1은 인적 자본을 포함한 개인적인 속성을 임금에 회귀시킨 결과이다. 노동력 공급자의 속성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속성들은 모두 유의미하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32%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도 유의미하게 임금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조정된 R^2 가 0.55로 근로자 임금 전체 분산의 55%를 설명하는 매우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노동조건만을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이다. 주된 직업에서의 노동시간과 부업에서의 노동시간을 구분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정규직 변수와 노동조합원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하게 0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시간과 노동원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46%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흥미로운 점은 부업 노동시간은 임금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업 노동시간이 길수록 임금이 더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모형 2는 전체 분산의 36.5% 정도를 설명하고 있어서 대단히 설명력이 높은 회귀분석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형 3은 직업을 임금에 회귀시킨 모형이다. 직업을 7개로 구분한 후, 미숙련 노동자를 비교의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직업 종사자의 임금이 모두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관리·전문직 종사자의 임금은 미숙련 노동자에 비해서 3.1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준전문직과 사무직의 임금도 미숙련 노동자 임금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수정된 R^2 가 .267로 높은 편이다.

직업이나 산업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속성과 노동조건만을 분석에

포함한 모형 5는 모형 1에 노동조건인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여부와 노조원 여부를 추가한 모형이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직의 격차는 정규직 임금의 46%에서 70.8%로 크게 줄어들었고, 노조원의 임금 프리미엄도 24%에서 7%로 줄어들었다. 반면, 노동시간의 효과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개인적인 속성과 노동조건만을 고려한 회귀모형은 근로자 임금 전체 분산의 6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크게 높아졌다.

<표 3-4>의 모형 6과 모형 7은 모형 5에 직업과 산업을 추가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직업을 추가함으로써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대학원 학력자의 임금이 고등학교 학력자의 임금의 1.56배에서 1.28배로 크게 줄어들었다.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임금비율도 1.39에서 1.28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직업 간 격차와 산업간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미숙련 노동자와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판매서비스직과의 차이는 크게 줄지 않았다. 또한 산업간 차이를 보면, 제조업과 여타 산업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사업서비스와의 차이는 오히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건설업과의 차이는 역전되었다. 모형 4에서 제조업에 비해서 건설업 종사자의 임금이 10% 정도 낮았으나, 연령, 학력, 성과 노동시장,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서

건설업 종사자의 임금이 13%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다른 변수들의 통제된 후에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7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와 모형 7을 비교해서 영향력이 더 커진 독립변수들은 노동시간과 노조원 임금 프리미엄으로 노동시간 효과는 0.2% 증가하였고, 조합원 임금 프리미엄은 2% 정도 증가하였다.

<표 3-5>는 2007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임금 회귀분석결과이다. 2005년도 자료와는 달리 기업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업규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도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 3-5>에 제시된 2007년 근로자 로그 임금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4>에서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회귀계수와 절편 값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커다란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도 나타났다. 먼저, 모형의 설명력에서 노동조건을 포함한 회귀분석모형인 모형 2와 직업을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인 모형 3의 설명력은 증가하였지만, 산업을 분석모형에 포함한 모형 4의 설명력은 1.2% 정도로 약간 설명력이 낮아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자와 다른 학력 소지자간의 임금격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대학원 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져서 대학원 학력자의 임금프리미엄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불이익이 더 커졌다. 2007년도 자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서 더 적은 많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노조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2005년 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46.07% 이었는데, 2007년에는 45.3%로 더 줄어들었다. 개인적 속성, 직업과 산업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서 2005년 74.8%에서 2007년 72.8%로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격차가 줄어든 경우도 있다. 미숙련 생산직과 다른 직업 종사자간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이것은 미숙련 노동자 임금의 증가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임금 프리미엄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에 미숙련 생산직과 차이가 없었던 농림어업 및 광업에서 2007년 들어서 이제 생산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서 이들 사이에서 격차가 유의미하게 벌어졌다.

〈표 3-4〉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 산업(2005년)

변수 \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Constant	3.477	4.994	4.260	4.949	3.410	3.131	3.142
개인속성							
연령	.069***				.065***	.065***	.063***
연령 ²	-.001***				-.001***	-.001***	-.001***
성(여성)	-.378***				-.287***	-.307***	-.285***
학력							
초졸	-.208***				-.196***	-.116***	-.114***
중졸	-.131***				-.125***	-.084***	-.083***
고졸(기준)	-				-	-	-
초대졸	.218***				.148***	.085***	.079***
대졸	.373***				.330***	.216***	.212***
대학원졸	.456***				.446***	.238***	.252***
근속년수	.039***				.030***	.027***	.028***
노동조건							
노동시간(주업)		.004***			.006***	.007***	.007***
노동시간(부업)		-.007***			-.001	.000	.000
비정규직		-.775***			-.346***	-.299***	-.300***
노조원		.212***			.068***	.080***	.088***
직업							
관리/전문			1.135***			.510***	.512***
기술/준전문			.859***			.332***	.335***
사무직			.784***			.318***	.317***
판매서비스			.266***			.212***	.260***
농림어업			-.119***			.015	.052
숙련/반숙련			.677***			.238***	.237***
미숙련(기준)			-			-	-
산업							
농림어광업				-.933***			-.038
제조업(기준)				-			-
건설업				-.108***			.124***
사업서비스				-.014			.073***
유통서비스				-.187***			-.033***
개인서비스				-.511***			-.099***
사회서비스				.075***			-.013
조정된 R ²	.551	.365	.267	.089	.618	.640	.646
N	26,083	26,083	26,083	26,083	26,083	26,083	26,083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5〉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2007년)

변수 \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Constant	3.427	5.038	4.327	5.069	3.415	3.144	3.183	2.986
개인속성								
연령	.075***				.070***	.070***	.067***	.067***
연령 ²	-.001***				-.001***	-.001***	-.001***	-.001***
성(여성)	-.391***				-.299***	-.317***	-.293***	-.285***
학력								
초졸	-.168***				-.160***	-.094***	-.094***	-.091***
중졸	-.127***				-.111***	-.075***	-.074***	-.071***
고졸(기준)	-	-	-	-	-	-	-	-
초대졸	.209***				.139***	.076***	.076***	.074***
대졸	.354***				.306***	.188***	.189***	.174***
대학원졸	.487***				.464***	.235***	.258***	.228***
근속년수	.039***				.029***	.026***	.027***	.026***
노동조건								
노동시간(주업)		.005***			.006***	.006***	.007***	.007***
노동시간(부업)		-.006***			-.004**	-.003**	-.002	-.002
비정규직		-.791***			-.372***	-.324***	-.318***	-.270***
노조원		.254***			.081***	.102***	.112***	.070***

〈표 3-5〉 계속

변수 \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직업								
관리/전문			1.162***			.514***	.529***	.546***
기술/준전문			.878***			.334***	.347***	.361***
사무직			.783***			.292***	.297***	.297***
판매서비스			.273***			.213***	.266***	.273***
농림어업			-.097*			.059*	.119***	.120***
숙련/반숙련			.702***			.009***	.217***	.219***
미숙련(기준)			-	-	-	-	-	-
산업								
농림어광업				-.875***			-.078**	-.028
제조업(기준)			-	-	-	-	-	-
건설업				-.133***			.099***	.141***
사업서비스				-.059***			.061***	.087***
유통서비스				-.220***			-.070***	-.022*
개인서비스				-.543***			-.113***	-.042***
사회서비스				-.023			-.067***	-.054***
종사자규모								
1~4인(기준)								-
5~29인								.135***
30~299인								.203***
300인 이상								.304***
수정된 R ²	.557	.378	.278	.077	.627	.649	.657	.667
N	25,975	25,975	25,975	25,975	25,975	25,975	25,975	25,975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5>에서 새롭게 포함된 회귀분석 모형은 모형 8이다.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는 없는 기업규모에 관한 정보가 2007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있어서 기업 규모별로 임금격차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4인 규모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임금이 점차 커져서 기업 규모별 격차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7과 기업규모를 분석에 포함시킨 모형 8을 비교하였을 때, 학력의 효과는 더 줄어든 반면, 직업의 효과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은 전체 임금의 분산에 각 요인들이 기여하였는가를 필즈(Gary Fields, 2003)가 제시한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개인적 속성과 노동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 모형 5에 직업과 산업을 추가한 모형 6과 모형 7은 설명력을 크게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분석 모형 5를 이용하여 각 요인들이 임금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2005년과 2007년 공통적으로 임금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근속년수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로 밝혀졌다. 두 가지 요인이 전체 불평등의 거의 절반을 설명하고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피고용자 임금 불평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으로서 전체 임금불평등의 19%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4%로 나타났다.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의 영향력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노동시간이 불평등에 미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전체 불평등의 1/4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발견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대가 근로자 임금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2005년과 2007년 사이의 변화는 연령과 관련된 요인들(연령과 연령 제공)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달라졌다. 전체적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 제공의 영향력은 약화된 반면, 연령 자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령의 전체 영향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표 3-6〉 전체 불평등에서 각 변수들의 기여도 분석

	2005		2007	
연령	.049	7.78%	.106	16.39%
연령제공	.038	6.07%	.000	0.03%
젠더	.086	13.69%	.085	13.23%
교육연수	.124	19.73%	.116	17.95%
근속연수	.157	25.13%	.153	23.62%
노동시간	.012	1.91%	.014	2.13%
정규직/비정규직	.153	24.38%	.162	25.02%
노조가입여부	.008	1.31%	.010	1.63%
전체 R ²	.6262	100.00%	.6458	100.00%

참고: 여기에서는 학력 변수를 범주형 변수 대신에 연속형 변수인 교육연수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R²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3-7>은 분석모형 6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이것은 전체 근로자를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으로 분석모형 6의 설명력과 분석모형 6에 포함된 요소들의 영향력이 산업에 따라서 대단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분석모형의 적합도 혹은 설명력은

건설업에서 가장 낮았고, 사회서비스업,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임금결정 요인이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업,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모형 6이 전체 분산의 65~72%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의 경우 모형 6의 설명력은 45% 정도여서 대단히 큰 설명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농업,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도 모형 6의 설명력은 건설업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모형 6에 포함된 개별 요인들이 월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도 산업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인 속성 가운데 연령의 효과는 유통서비스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연령 1세 증가에 약 7% 임금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및 광업에서는 연령 효과가 없었고, 나머지 가운데 제조업에서 가장 연령 효과가 낮았다.

남성과 여성간의 격차는 제조업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고임금 서비스 산업인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금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다. 고임금 산업인 사회서비스와 사업서비스업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8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5% 이상의 차이가 두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 피고용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산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인적자본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업을 제외하고 대체로 학력과 근속년수가 임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에 미치는 학력과 근속년수의 효과는 산업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서, 고졸자를 기준으로 고졸자 이하가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산업은 유통서비스업이며, 가장 덜 불이익을 받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졸자 이상(대졸자나 대학원 졸업자)이 가장 큰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산업은 평균 임금이 높은 사업서비스업(대졸 1.26

배, 대학원졸 1.42배)과 사회서비스업(대졸 1.29배, 대학원졸 1.49배)이었다. 근속연수의 효과는 건설업에서 가장 낮았고, 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1년 근속연수 증가에 약 3%의 임금 상승이 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진 반면, 건설업에서는 1.6%로 가장 낮았다. 건설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9년으로 농업 1.61년 다음으로 가장 낮은 반면, 사업서비스업 4.72년, 유통서비스업 4.01년 및 사회서비스업 7.87년으로 훨씬 길었다. 농림어업, 광업 및 건설업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혜택이 매우 낮기 잦은 이동이 발생하여 근속연수가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2007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도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모형 6의 설명력이 약간 높아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든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격차도 약간 커졌다. 전체적으로 <표 3-7>와 <표 3-8>을 비교하면, 유통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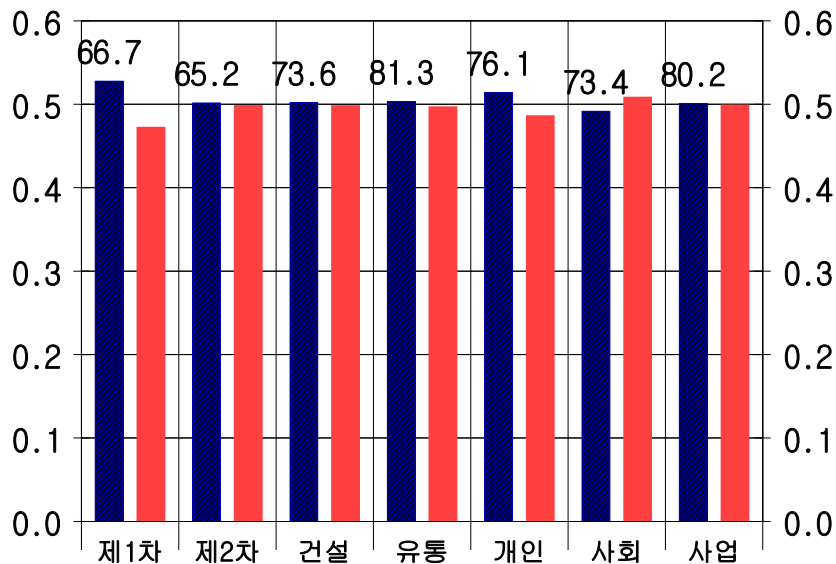
산업에 따라서 남성 임금에 비해서 여성 임금이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이나 시간당 임금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거나 다른 설명변수와 젠더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남성 자료와 여성 자료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조건의 효과도 산업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의 효과는 제1차 산업에서 가장 낮았고, 건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회서비스업에서 가장 커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보다 40%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고, 사업서비스업에서는 18%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불이익이 가장 적었다. 노조원 프리미엄은 제조업보다 건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조원과 비교하여 노조원의 임금 프리미엄은 제조업에서 17%, 건설업에서 21%, 개인서비스업에서 33%로 나타났다.

[그림 3-2] 산업별 여성임금(남성임금=100)



산업별로 직업에 따른 임금격차가 대단히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제1차 산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 직업에 따른 임금차이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련 노동자와 비교하여 관리직, 전문직의 임금은 제1차 산업에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사업서비스업에는 1.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

설업에서도 1.85배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 효과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임금이 가장 높은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직업에 따른 임금격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적었다. 그 대신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들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표 3-7〉 산업별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2005년)

변수 \ 모형	농림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사업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상수항	3.841	3.670	3.268	3.092	3.092	2.821	3.441
개인속성							
연령	.011	.040***	.056***	.0644***	.070***	.066***	.058***
연령 ²	-.000	-.000***	-.001***	-.001***	-.001***	-.001***	-.001***
성(여성)	-.405***	-.428***	-.307***	-.207***	-.273***	-.309***	-.221***
학력							
초졸	-.108	-.091***	-.103***	-.091***	-.264***	-.126***	-.197***
중졸	.070	-.057***	-.089***	-.100***	-.111***	-.079***	-.125***
고졸(기준)	-	-	-	-	-	-	-
초대졸	-.123	.047**	.044	.079***	.063***	.091***	.089***
대졸	.249	.137***	.147***	.220***	.187***	.125***	.275***
대학원졸	-.180	.253***	.208*	.336***	.407***	-.012	.348***
노동조건							
노동시간(주업)	.016***	.006***	.008***	.004***	.007***	.0134***	.006***
노동시간(부업)	.006	-.006*	-.005	.001	.007**	-.000	-.000
비정규직	-.350**	-.269***	-.298***	-.189***	-.293***	-.363***	-.510***
노조원	.274	.095***	.176***	.155***	.019	.162***	.076***
근속년수	.025**	.024***	.016***	.029***	.029***	.020***	.028***
직업							
관리/전문	.733*	.598***	.430***	.590***	.495***	.012	.325***
기술/준전문	.318	.419***	.336***	.448***	.378***	.046	.174***
사무직	.191	.397***	.277***	.416***	.282***	.243***	.100***
판매서비스	.082	.254***	.137	.458***	-	.107***	.089**
농림어업	-.021	-.130	.115	.356***	.155***	.015	.261
숙련/반숙련	.311*	.259***	.230***	.286***	.159***	.183***	.145***
미숙련(기준)	-	-	-	-	-	-	-
수정된 R ²	0.584	0.661	0.475	0.647	0.613	0.561	0.720
N	415	6145	2307	3985	4605	3275	5351

〈표 3-8〉 월평균 소득 회귀분석 결과 산업 (2007년)

변수 \ 모형	1차 산업	2차 산업	건설업	사업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상수항	3.769	3.662	3.446	3.186	3.196	2.971	3.318
개인속성							
연령	.028**	.047***	.049***	.062***	.073***	.065***	.068***
연령 ²	-.000**	-.001***	-.001***	-.001***	-.001***	-.001***	-.001***
성(여성)	-.516***	-.434***	-.313***	-.220***	-.329***	-.276***	-.225***
학력							
초졸	-.194*	-.064**	-.108***	-.108***	-.305***	-.099***	-.086**
중졸	-.013***	-.047*	-.056*	.105***	-.110***	-.093***	-.089***
고졸(기준)	-	-	-	-	-	-	-
초대졸	.115	.010	-.016	.132***	.104***	.103***	.053***
대졸	.145	.111***	.083**	.230***	.165***	.112***	.258***
대학원졸	-.367	.230***	.269***	.350***	.321***	.003	.402***
근속년수	.032***	.024***	.018***	.028***	.027***	.011***	.029***
노동조건							
노동시간(주업)	-.011***	.005***	.008***	.003***	.006***	.008***	.007***
노동시간(부업)	-.002	-.005	-.001	.001	-.002	-.008	.002
비정규직	-.348**	-.309***	-.287***	-.198***	-.327***	-.334***	-.507***
노조원	.104	.145***	.191***	.144***	.039***	.287***	.068***
직업							
관리/전문	.265	.603***	.616***	.646***	.528***	.120***	.348***
기술/준전문	.309	.465***	.448***	.480***	.383***	.006***	.157***
사무직	.312*	.380***	.363***	.425***	.231***	.228***	.089**
판매서비스	.091	.261***	.038	.494***	.149***	.074***	.071*
농림어업	.078	.095	.447***	.157	.024	-	.234*
숙련/반숙련	.227*	.254***	.285***	.291***	.071**	.165***	.151***
미숙련(기준)	-	-	-	-	-	-	-
조정된 R ²	.641	.662	.531	.639	.640	.541	.754
N	420	5,692	2,348	4,325	4,469	3,306	5,408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성별 임금 분석

먼저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3-9>에 제시되었다. <표 3-9>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령에 따른 경제적 보상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 노동시간과 근속년수와 같은 인적 자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내에서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여성에게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막이 없는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노조가 막아주는 경우, 노조 가입으로 인한 상대적인 혜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표 3-10>과 <표 3-11>는 각각 산업별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네 가지 독립변수들에 회귀시킨 결과를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남녀를 통합하여 분석과 결과와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여성들은 사업서비스와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연령에 따른 보상을 낮지만, 교육과 노동시간에 대한 높은 보상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보상 차이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체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유통서비스에서 학력 간 격차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우 학력별 격차는 초졸 이하는 고졸자 임금의 74.5%, 대학원 졸업자는 고졸자 임금이 1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우 초졸 이하는 고졸자 임금의 87%로

<표 3-9> 피고용자 임금 회귀분석 결과 (2005년과 2007년)

변수 \ 모형	2005 남성	2007 남성	2005 여성	2007 여성
상수항	2.946	2.942	2.915	3.015
개인속성				
연령	.084***	.089***	.048***	.051***
연령 ²	-.001***	-.001***	-.001***	-.001***
학력				
초졸	-.158***	-.133***	-.086***	-.070***
중졸	-.101***	-.092***	-.057***	-.057***
고졸(기준)	-	-	-	-
초대졸	.062***	.045***	.075***	.097***
대졸	.176***	.149***	.262***	.253***
대학원졸	.217***	.216***	.367***	.413***
근속년수	.023***	.023***	.037***	.034***
노동조건				
노동시간(주업)	.004***	.004***	.010***	.010***
노동시간(부업)	-.001	-.003*	.010	-.001
비정규직	-.293***	-.314***	-.300***	-.308***
노조원	.050***	.074***	.158***	.170***
직업				
관리/전문	.435***	.483***	.551***	.518***
기술/준전문	.310***	.341***	.335***	.295***
사무직	.279***	.273***	.295***	.257***
판매서비스	.231***	.274***	.259***	.241***
농림어업	.103*	.196***	-.044	.013
숙련/반숙련	.205***	.199***	.194***	.156***
미숙련(기준)	-	-	-	-
산업				
농림어광업	-.112**	-.100**	.017	-.054
제조업(기준)	-	-	-	-
건설업	.033**	.011	.153***	.134***
사업서비스	-.019	-.029**	.209***	.194***
유통서비스	-.075***	-.102***	.027	-.023
개인서비스	-.154***	-.200***	-.031	-.028
사회서비스	-.050***	-.121***	.023	-.003
수정된 R ²	.599	.624	.565	.572
N	14,704	14,765	11,379	11,210

참고: 회귀분석에서 <표 3-4>과 <표 3-5>의 모형 7을 적용하였다.

낮아서 격차가 적지만, 대학원 졸업자는 168%로 남성에 비해서 훨씬 높은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고학력 프리미엄이 여성들의 경우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남성의 월소득 회귀분석 결과(2005년)

변수 \ 모형	1차 산업	2차 산업	건설업	사업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상수항	4.089	3.449	3.196	3.186	2.976	2.971	2.998
개인속성							
연령	.012	.067***	.059***	.088***	.083***	.095***	.087***
연령 ²	-.000	-.001***	-.001***	-.001***	-.001***	-.001***	-.001***
학력							
초졸	.004*	-.233**	-.104***	-.067*	-.322**	-.084	-.255***
중졸	.111	-.099*	-.094*	.073*	-.138***	-.130	-.146***
고졸(기준)	-	-	-	-	-	-	-
초대졸	.032	.042*	-.050	.047	.044	.015	.088**
대졸	.298	.133***	.192**	.219***	.180***	.091*	.161***
대학원졸	-.190	.245***	.201*	.323***	.314***	.029	.233***
근속년수	.026***	.022***	.016***	.023***	.024***	.014***	.018***
노동조건							
노동시간(주업)	.002***	.002***	.008***	.001**	.005***	.009***	.004***
노동시간(부업)	.010	-.005*	-.005	.003	.008*	.004	-.002
비정규직	-.389**	-.205***	-.289***	-.190***	-.271***	-.394***	-.664***
노조원	.167	.081***	.167***	.117***	.008	.137	.003***
직업							
관리/전문	.818	.514***	.444***	.545***	.528***	.024	.334***
기술/준전문	.513	.324***	.342***	.411***	.383***	.152*	.158***
사무직	.245	.297***	.324***	.387***	.231***	.293***	.098**
판매서비스	.015**	.164**	.188	.325***	.252***	.215***	.160*
농림어업	.157	.222	.127	.402***	.094***	.076	.216
숙련/반숙련	.424	.203***	.235***	.251***	.128***	.222***	.065
미숙련(기준)	-	-	-	-	-	-	-
조정된 R ²	.555	.537	.461	.688	.546	.530	.709
N	155	4,039	2,078	2,332	2,612	1,079	2,4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11〉 여성의 월소득 회귀분석 결과(2005년)

변수 \ 모형	1차 산업	2차 산업	건설업	사업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상수항	2.842	3.449	3.449	3.200	2.768	2.646	2.998
개인속성							
연령	.021	.020***	.021	.037***	.066***	.054***	.087***
연령 ²	-.000	-.000***	-.000	-.000***	-.001***	-.001***	-.001***
학력							
초졸	-.215*	.042	-.171	-.171***	-.136*	-.130***	-.255***
중졸	.021	.026	-.054	.151***	-.050	-.060*	-.146***
고졸(기준)	-	-	-	-	-	-	-
초대졸	.696	.025	-.018	.107***	.083**	.140***	.088**
대졸	-.060	.164***	.087	.207***	.183***	.126**	.161***
대학원졸		.318*	.392	.460***	.517***	.009	.233***
근속년수	.040***	.023***	.009	.040***	.044***	.031***	.018***
노동조건							
노동시간(주업)	.018***	.011***	.009***	.009***	.011***	.015***	.004***
노동시간(부업)	.005	-.010*	-.003	.006	.008*	.001	-.002
비정규직	-.174**	-.317***	-.358***	-.180***	-.289***	-.283***	-.664***
노조원	.153	.119***	.193	.210***	.166***	.231*	.003***
직업							
관리/전문	-	.598**	.444***	.558***	.541***	.193	.334***
기술/준전문	-	.525***	.342***	.402***	.407***	-.156*	.158***
사무직	.472	.433***	.472***	.358***	.259***	.177***	.098**
판매서비스	.258**	.262***	.188	.491***	.252***	.056*	.160*
농림어업	-.105	-	.127	.161	-	.171	.216
숙련/반숙련		.224***	.235***	.210*	.191***	.128	.065
미숙련(기준)	-	-	-	-	.258**	-	-
조정된 R²	.323	.463	.415	.500	.558	.461	.709
N	260	2,106	229	1,653	1,984	2,196	2,4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제5절 소결

본 연구는 2005년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임금 불평등을 산업간 임금불평등과 산업 내 임금불평등으로 분해하여 근로자 임금불평등을 분석하고, 근로임금 불평등의 요인별로 분해하여 산업별 임금격차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산업별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대단히 적다. 임금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포괄적인 노동시장 내에서 인적 자본의 효과와 성차별적 임금체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산업별 임금 격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회귀분석을 통한 임금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임금불평등의 산업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임금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점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첫째, 산업에 따라 임금수준, 성별 분포, 학력분포, 평균 노동시간, 비정규직 비율, 노조조직률, 직업구성에서 극단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1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임금수준, 성별분포, 학력수준, 직업구성 등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산업 내의 인적 자본 분포와 산업의 평균 임금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일반화된 엔트로피(GE), 변이계수(CV)와 지니(Gini) 계수와 같은 임금불평등 지수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 피고용자들의 임금불평등도는 이전의 유사한 연구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핵심적인 이유는 자료의 차이에 근거한다. 이전의 연구들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10인 미만이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분석에서 제외시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체 근로자를 분석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이전의 연구에서 나타난 근로

자 임금불평등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적으로 임금 불평등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는 불과 2년 시차를 두고 있지만, 두 시기의 수집된 자료에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난 점은 근로자 전체의 임금 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산업 부문에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서 불평등이 증가하여 산업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차 산업내의 불평등 심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또한 계속해서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제3차 산업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곧바로 전체 피고용자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임금불평등 분해 결과, 산업간 불평등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임금불평등은 산업내 불평등의 산물로 밝혀졌다. 산업내 임금불평등을 산업별로 분해한 결과, 제2차 산업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3%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제3차 산업내 불평등의 비중은 75~7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3차 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산업 내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7개 산업 가운데 제조업, 사회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불평등이 전체 근로자 임금불평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간 불평등은 산업분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산업내 임금불평등도 산업을 세분화시켜 분류하는 경우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산업범주를 이용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섯째, 회귀분석 결과는 산업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2005년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점은 근로자 소득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며, 산업의 영향력은 전체 로그 임금 분산의 8%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적인 속성과 노동시장 조건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서 각각 전체 분산의 55~56%와 37~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피고용자의 월평균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큰 미치는 요인들은 근속년수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기초한 임금불평등 분해분석은 근속년수와 정규직 여부가 전체 불평등의 절반 정도를 결정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교육과 성별의 영향이 컸다. 반면, 노동시간과 노조여부에 따른 임금불평등은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임금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은 경제위기 이후 보다 더 크게 대두된 불평등이다.

일곱째, 산업 내의 임금결정에 미치는 변수들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였다.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의 개인서비스업에서 교육수준은 임금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교육수준은 사업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크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특수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노동력의 구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또한 노동력에 대한 상이한 보상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어떤 산업으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적 자본에 대한 보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불평등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산업 간 불평등보다 산업 내의 불평등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내의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차 산업에서 산업 내의 불평등이 크지만,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사회서비스업 내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근속년수와 고용형태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근로자 불평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근속년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이 근로자 임금불평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셋째, 전체 불평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내 불평등 가운데서 성차별에 따른 불평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불평등을 낳고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보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이루어지지만,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보상은 남성에서 높게 이루어져, 성차별적인 보상체계의 속성을 보여준다. 연령이나 성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요소들이기 때문에 연령과 성에 따른 보상의 차이는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업,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 등 성차별이 심한 산업에서 성차별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전체 근로자 임금불평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4장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제1절 문제제기

현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탈산업화 경향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정보산업이나 금융산업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서비스산업 생산액은 2005년에 GDP의 70%를 넘었고, 서비스산업에 고용된 인력도 이미 1990년대에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World Bank, 2007). 또한 한국사회에서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0년에 61.6%에 이르던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2006년 들어서 66.4%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산업 가운데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의 비중도 동 기간에 24.6%에서 31.3%로 증가하였다(통계청, KOSIS).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기업간 관계,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그리고 소득불평등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음식·숙박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고용이 지배적이며, 금융·통신·교육·문화산업 등 최근 부각되는 서비스산업에서도 노동유연화가 확산되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외부노동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이성균, 2004).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인사관리방식이나 노사갈등에서도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사회과학계가 탈산업화의 소득불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나쁜 일자리-좋은

일자리(bad job-good job)” 등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산업구조변화가 노동현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Morris and Western, 1999).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대규모 노사갈등이 주로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나 근무조건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탈산업화 사회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서비스산업 확대에 표현되는 탈산업화 경향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확대와 소득불평등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고용구조상의 변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가? 서비스산업 중 저소득 취업자가 많은 영세사업체의 고용이 증가한 때문인가, 혹은 서비스산업의 노동유연화로 인하여 종사상 지위별 불평등이 증가한 결과인가?

이러한 의문은 산업별 소득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으로 해명될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별 고용구조변화를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차이, 서비스업 내부구성 및 고용형태의 국가별 차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산업부문·고용형태별 현황을 정리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의 비중 변화를 보여주며,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국가별 차이,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한국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둘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개인의 소득은 산업별 고용구조·사업체 규모·종사상 지위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탈산업화의 소득불평등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효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산업을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부문·고용형태·기업규모에 의한 소득불평등 효과를 분해하여 파악한다.

제2절 서비스산업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이해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 저임금이 일반화된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도소매·음식업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은 가구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소비활동이 시장화 되면서 나타난 산업부문이며(Kutscher, 1987), 현대사회에서도 맞벌이부부 및 사회적 이동이 증가하고 생산비용이 하락하면서 여전히 중요한 서비스산업부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인적 자본으로 인하여 저임금 취업자를 양산한다. 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 많은 서비스생산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생산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보다는 영세한 규모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기술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Kassab, 1992). 따라서 숙련된 기술인력 보다는 인적 자본이 낮은 단순노무직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며, 인건비 부담이 적은 파트타임직과 일용직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후기산업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 시각을 반대한다. 벨(Bell, 1981)에 의하면, 산업화가 진전되고 기술이 더욱 혁신되면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다.⁶⁾ 생산력이 발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하며,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산업에서 고용기회가 확대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후기산업화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지만, 현대 자본주의의 기술혁신과 정보화가 탈산업화 경향을 낳는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기술변동, 혁신의 확산, 수요패턴의 변화 등

6)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낳은 또 다른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공공부문의 확대 및 복지국가의 등장이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부문이 확대되었고, 특히 복지국가의 등장은 공공서비스부문의 확대를 낳았다. 탈산업화와 복지국가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Esping-Andersen, 1990)을 참고.

으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방식과 유통 방식이 변화하였고,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경제활동이 부각되었다(최강식, 1997). 이러한 변화는 과거 제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온 경제활동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리시켰으며, 기존의 서비스산업과 다른 특성을 갖는 “생산자서비스” 산업을 낳았다. 일부 제조업체들이 신상품의 연구, 설계, 제조활동을 외부의 서비스전문가 집단에 의존하거나, 전자·소프트웨어·유전공학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등장을 잘 나타낸다(김장호, 1999: 49).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현재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학자들에게도 공존한다. 서구(특히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일부 학자들은 탈산업화가 소득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를 경험하였는데, 일부 학자들과 정책전문가집단은 “임금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있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전통적으로 저임금 직종이 집중된 서비스산업이 확대됨으로써 취업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소득불평등도 증가한다”는 “나쁜 일자리(bad job)의 저임금 효과를 주장하였다(Kutscher, 1987).⁷⁾ 반면 후기산업화 이론가들은 서비스산업 종사자 가운데 전문기술직 등의 고소득화를 강조한다. 생산력이 발전됨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하는 지식경제활동 종사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이러한 일자리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에 금융보험부동산 등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8% 높다”는 점을 근거로 후기산업화 분야의 일자리는 더 이상 영세한 저임금 부문이 아니라고 설명

7) 미국의 경우에 1972년부터 1986년의 산업별 고용성장률을 보면, 서비스산업은 58%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4.3% 증가하였다(Kutscher, 1987). 또한 이시기에는 취업자 개인의 임금과 가구 소득이 모두 하락하였다. 주간 임금은 동 시기에 10% 감소하였고, 1973년에 \$27,072였던 미국의 가구소득도 1985년에는 \$25,738로 감소하였다(Kassab, 1992: 3).

한다(Morris and Western, 1999). 따라서 후기산업화가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취업자를 증가시킨다면, 탈산업화가 소득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격차이다. 전통적 시각은 예전부터 존재하던 임시직이나 일용직 고용, 파트타임 고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유연적 고용형태(flexible employment)”가 확산됨에 따라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Houseman, 2000; 이성균, 2004).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는 고용주들은 단기간에 노동력수요변동이 큰 직무에 대해서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수요변동 가능성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또한 서비스업 가운데 자동화를 도입하는 대규모사업체에서 더 높아 비정규직 고용이 현대의 서비스산업에서도 지배적이다(김장호, 1999). 또한 정보화와 기술혁신은 기존의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일부 사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처리 등의 새로운 서비스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업체에 외부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불안정 취업자도 증가한다. 이러한 유연적 고용형태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서비스산업의 비정규직 취업자들은 정규직 취업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기회를 제공받는다(OECD, 2001; Smith, 1997).

그러나 후기산업화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유연적 고용형태가 증가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금융산업이나 정보산업의 취업자들이 전문 기능과 지식을 기초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생산업무의 외부화에 의한 취업자들도 계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에 기초한 임금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미국경제가 탈산업화되면서 일자리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부문 가운데

한 가지는 인력을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부문(temporary help service agency)인데, 이 분야의 취업자들은 독립적인 근무환경에서 전문적인 정보처리능력을 발휘하며 높은 임금과 직업적 명예를 갖는다(Reskin, 1996).

소득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도 매우 다양한 결론을 제시한다. 일부 학자들은 서비스고용 확대가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소득불평등을 확대할 만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지만(Raffalovich, 1990), "소득불평등의 20%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증가로 설명된다"(Tilly, Blustone and Harrison, 1986) 혹은 "정보화산업의 상징적 공간인 실리콘 벨리에서도 노동유연화가 일반화되어, 전문지식 기술인력 보다는 호텔·음식점의 비정규직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 높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Carnoy, Castells and Benner, 1997). 또한 "최근에는 소득불평등이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차이보다는 서비스업 내부의 차이로 인하여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Blackburn, 1990; Lawrence, 1984).

이러한 논의는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다른 특징을 나타낼 것이며, 서비스산업 자체도 내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산업 활동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산업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국가의 서비스산업구조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형태상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이 주로 영세한 개인 서비스산업부문으로 구성된다면, 비정규직 및 저임금 취업자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소득을 하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가운데 생산자서비스산업부문이나 대자본에 기초한 서비스활동의 비중이 높다면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두 가지 산업부문으로, 혹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양분화 되면, 중간소득계층이 감소하

고 소득불평등구조도 양극화 경향도 나타날 것이다(McMahon and Tschetter, 1986).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서비스산업의 내부구성, 서비스산업의 고용형태별 규모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제3절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 고용현황

1.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 고용

1980년대 들어서 제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체들은 유연적 생산방식 등 다양한 경영전략을 도입하였고,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지식정보산업과 금융산업·문화산업도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0년대 전반기에 연평균 2.7% 성장하였던 미국의 서비스산업은 2005년에 국내생산액(GDP)의 77%를 차지하였고, 영국과 일본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하였다.⁸⁾ 주요 국가들의 민간 서비스산업 수출액이 1990-2005년에 3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표 4-1>),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서비스산업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도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탈산업화 경향은 서비스산업의 일 자리를 확대하였다. 1970년에 62.4%였던 미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8)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산업별 비중에 대한 통계는 다양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은 농림어업과 광공업이외의 잔여적 경제활동영역을 지칭하였으나,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웹스터(1995)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제조업 그 자체에 대한 영향을 미쳐, 전후사회에서 공업의 활동은 소비자들의 분명한 요구에 부응하여 서비스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대체상품의 제조였다”(Webster, 1995: 88, 이탤릭체는 필자 첨가)고 주장하며,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내부의 노동분업구조가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산업구분방식을 이용하여 산업별 통계를 제시한다.

2000년에 77.4%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성장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일본의 서비스업 고용비중도 46.1%에서 64%로 증가하였다(<표 4-2>).

〈표 4-1〉 주요 선진국 서비스산업의 생산활동

(단위: %)

	연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연평균 성장률	1990-1999년	3.4	3.4	2.4	1.9
	2000-2005년	2.7	3.1	1.5	1.7
생산액 비중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1990년	70	63	64	59
	2005년	77	73	72	77
민간 서비스산업의 수출액 (\$백만)	1990년	132,880	53,830	312,162	41,384
	2005년	354,020	199,454	796,772	107,876

출처: OECD(2007)

〈표 4-2〉 주요 선진국의 정보산업 및 비정규직 고용 비교(2000년 기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1. 제조업 전체	22.6	20.6	30.1	33.1
2. 서비스산업 전체	77.4	77.5	64.5	64.0
3. 서비스산업 4개 부문				
- 유통서비스	21.0	21.1	24.2	17.5
- 생산자서비스	15.7	19.0	11.0	12.1
- 사회서비스	26.1	25.8	16.9	25.8
- 개인서비스	11.7	11.8	11.0	8.6
임시직 고용 전산업(%)	4.5	6.8	11.4	12.7
비중의 중요도(ratio)				
1. 제조업	0.81	0.72	0.72	0.92
2. 서비스업	1.06	1.10	1.15	1.05
- 생산자서비스	1.18	0.98	0.94	0.85
- 유통서비스	0.53	0.60	1.11	0.86
- 개인서비스	1.16	1.57	1.81	1.36
- 사회서비스	1.38	1.42	0.84	1.20

주: 임시직은 임금근로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또한 임시직 비중 중요도는 해당 산업의 임시직 고용비율과 전 산업의 임시직 고용비율의 비(ratio)를 의미하며, 1이상의 수치는 해당 산업의 임시직 고용이 후자에 비하여 더 높다는 점을 의미함.

출처: Aoyama and Castells(2002, p147)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아오야마와 카스텔(Aoyama and Castells, 2002)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국가별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제조업의 전통이 강한 일본과 독일에서는 2000년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65%에 불과하지만, 금융산업과 문화산업 등이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75%이상을 차지한다. 후기산업화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서비스 산업부문의 비중도 독일(12.1%)이나 일본(11.0%)보다는 미국(16%)과 영국(19%)에서 더 높다(<표 4-2>). 둘째, 서비스부문이 확대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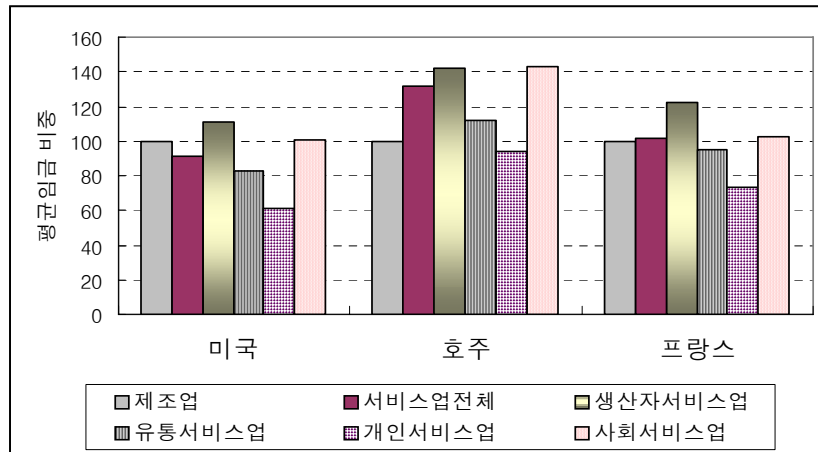
따라서 이 분야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고용비중은 산업부문 및 국가별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업의 임시직 종사자 비중은 제조업보다 높지만, 산업부문별로는 개인서비스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생산자서비스부문의 임시직 비중은 미국과 독일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만, 사회서비스부문의 임시직 비중은 영국과 일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서비스업의 소득수준도 산업부문별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을 예로 들면, 서비스산업 전체의 평균임금은 제조업의 90%에 불과하지만, 생산자서비스업 110%, 사회서비스업 100%, 유통서비스업 83%, 개인서비스업 61%이다(OECD, 2001: 106). 호주와 프랑스의 경우에도 개인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하여 낮지만, 생산자·사회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은 양 국가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그림 4-1]). 또한 소득불평등 수준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00년 소득분포상의 상위 10%와 하위 10% 집단의 소득을 비교하면, 미국의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16.6배 높았으며, 프랑스는 9.1배의 격차를 나타냈다.⁹⁾

서비스산업은 이처럼 산업 자체의 내적 다양성과 고용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소득불평등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소득불평등수준이 단순히 산업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서비스업 내부 부문간 평균소득 격차가 적은 프랑스에서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수준이 낮은 것은 탈산업화의 소득불평등 효과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9)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값을 보아도 국가별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시기 미국의 지니계수는 40.8이며, 프랑스의 지니계수는 32.7이다(Aoyama and Castells, 2002).

[그림 4-1]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부문별 임금비중(1999년 기준)



주: 평균임금비중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산업의 평균임금

출처: OECD(2002, p. 106)

2. 한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전통적으로 영세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고도성장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최근에는 기술혁신과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착하였다. 2005년 현재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65%이고, 가장 많은 취업자가 고용된 부문은 개인서비스부문이며 사회서비스업에서의 고용비중은 약간 낮다(<표 4-3>). 특히 한국의 음식·숙박업 등 개인서비스부문(27.9%)은 유럽의 OECD국가(20.6%)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인 남미의 멕시코(22.2%), 헝가리(16.9%)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OECD, 2000),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화 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서비스부문과 생산자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소매업자들로 구성되는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에 있고 창업 및 휴폐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가율은 낮다.¹⁰⁾ 반면, 2000년대 들어서 교육 및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부문과 금융·보험·통신산업 등 생산자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이 시기에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표 4-3〉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현황(2001-2005년)

(단위: 명, %)

서비스산업 부문	종사자 규모		연도별 증감율
	2001	2005	
유통서비스	2,318,858 (28.3)	2,366,455 (26.0)	2.1
생산자서비스	1,777,298 (22.1)	2,160,921 (23.8)	21.6
사회서비스	1,465,691 (18.2)	1,828,558 (20.1)	24.8
개인서비스	2,480,844 (30.8)	2,735,915 (30.1)	10.3
합계	8,042,692 (100)	10,542,274 (100)	13.0

출처: 통계청(2007)

10) 이 시기에 고용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개인 및 가정용품업(-45.9%),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12.5%),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소매업(-6.9%)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2007)을 참고.

〈표 4-4〉 서비스부문별 임시·일용직 비중(2005년)

서비스산업부문	규모별						
	전체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유통서비스	10.8	6.9	18.9	13.6	11.1	18.9	14.7
생산자서비스	10.1	6.2	6.2	7.2	11.8	15.2	13.9
사회서비스	10.2	7.1	9.7	10.4	9.4	9.1	15.1
개인서비스	12.1	9.0	19.4	14.4	18.7	18.0	21.4
서비스업 전체	12.2	7.5	17.8	12.8	11.6	14.7	14.6

주: 임시·일용직은 “고용주와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거나 일일로 고용된 자로서 일정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

출처: 통계청(2007)

한국 서비스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또 다른 노동시장 지표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규모이다. 첫째,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주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비스산업의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은 29.3%이며, 피고용인 가운데 상용직 종사자는 52.1%,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14.6%이다(통계청, 2007). 둘째, 고용증가율을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자영업자의 고용비중은 2001-2005년에 2.4% 감소한데 반하여,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동 기간에 54.6% 증가하였고, 특히 금융보험업(294%), 사회복지사업(107%), 보건업(76.3%)에서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증가하였다(<표 4-4>).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이 높아 서비스산업 전체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지만, 후기산업화 영역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징은 기업규모를 고려해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서비스산업 취업자의 85.8%는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며, 50명 이상의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서비

스산업 전체의 0.8%에 불과하다(통계청, 2007: 27-29). 그러나 서비스산업에서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영세규모보다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고, 300인 이상의 경우에도 1-4인의 영세규모보다 높다. 전통적인 인식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에서 영세규모의 서비스업체일수록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자영업형태의 고용주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시·일용직의 비중(10-12%)은 300인 이상의 사업체(15%이상)보다도 낮다. 양적으로는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영세규모 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고용하지만, 서비스산업의 대기업들도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현재의 서비스산업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결국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개인·유통서비스부문 영세사업체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생산자·사회서비스부문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및 규모별 고용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산업부문,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소득격차를 낳을 것이다.

제4절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론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소득불평 현황, 서비스산업의 내부부문·사업체규모별·고용형태별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한다. 노동패널자료는 1998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어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이나 고용현황을 매년 추적한 패널자료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1998-2005년도 자료를 토대로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은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소득, 산업, 기업규모, 고용형태 관련 변수에서 결측값이 없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1998년의 사례는 3,927명이며, 2005년의 사례는 4,779명이다(연도별 응답자 수는 <표 4-5>와 <표 4-6>을 참고).

<표 4-5> 노동패널자료의 분석대상자 분포(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포함)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1,363	1,509	1,541	1,525	1,516	1,574	1,578	1,593
서비스업 전체	2,564	2,216	2,471	2,691	2,736	2,863	3,058	3,186
-유통서비스	1,065	713	1,028	1,109	1,112	1,158	1,156	1,221
-생산자서비스	524	478	472	545	557	625	697	684
-사회서비스	328	540	326	375	391	412	474	492
-개인서비스	647	485	645	662	676	668	731	789
합 계	3,927	3,725	4,012	4,216	4,252	4,437	4,636	4,779

<표 4-6> 노동패널자료의 분석대상자 분포(임금근로자)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1,134	1,377	1,302	1,297	1,285	1,333	1,340	1,332
서비스업 전체	1,617	1,944	1,604	1,862	1,863	1,954	2,114	2,080
-유통서비스	566	602	564	667	653	682	677	690
-생산자서비스	458	449	403	479	475	526	596	527
-사회서비스	271	510	285	333	343	349	408	404
-개인서비스	322	383	352	383	392	397	433	459
합 계	2,751	3,321	2,906	3,159	3,148	3,287	3,454	3,412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는 타일(Theil) 지수이다. N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때, Theil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김영미·한준, 2007).

$$T = \frac{1}{N} \sum_{i=1}^N \left(\frac{y_i}{\bar{y}} \ln \frac{y_i}{\bar{y}} \right) = \underbrace{\sum_{k=1}^m s^k \ln \frac{\bar{y}^k}{\bar{y}}}_{\text{산업 간 불평등}} + \underbrace{\sum_{k=1}^m s^k T_k}_{\text{산업 내 불평등}}$$

y_i 는 개인 i 의 소득, \bar{y} 는 소득의 전체 평균이다.11) 대상 집단을 m 개 산업으로 나눌 때, s_k 는 k 번째 산업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율(income share), \bar{y}^k 는 k 번째 산업의 평균소득이며 T_k 는 k 번째 산업의 Theil 지수이다.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Theil 지수는 산업간 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분해방법은 그 구조 상 분산분석과 유사하다. 즉, 집단간 불평등은 각 하위집단(부문)에 소속된 모든 개인들이 하위집단 평균 소득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평균소득에 대한 하위집단(부문) 평균소득의 비율을 각 집단의 소득점유율로 가중 처리하여 합산한 것이며, 집단 내 불평등은 각 하위집단의 Theil 지수를 소득점유율로 가중 처리하여 합산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확대하면, Theil 지수는 집단간/집단내 불평등 뿐 만 아니라, 집단내 불평등을 또 다른 하위집단간/하위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Akita, 2003; Allison, 1978; 유헤근, 2004). 이러한 분석과정은 아래의 식과 같다.

11)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어 개인소득과 전체소득평균이 동일할 때 Theil 값은 0이며 소득분포가 불균등하면 할수록 Theil값은 정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T = \underbrace{\left[\sum_{k=1}^m s^k \ln \frac{\bar{y}^k}{\bar{y}} \right]}_{\text{산업 간 불평등}} + \underbrace{\left[\sum_{k=1}^m s^k \sum_{j=1}^J s^{kj} \ln \frac{\bar{y}^{kj}}{\bar{y}^k} \right]}_{\text{산업 내/부문 간 불평등}} + \underbrace{\left[\sum_{k=1}^m \sum_{j=1}^J s^{kj} T_{kj} \right]}_{\text{산업 내/부문 내 불평등}}$$

다단계 불평등 분해방법은 1단계 분해방법의 연장으로 이전 식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산업 간 불평등은 이전 식과 동일한 반면, 이전 식에서 산업 내 불평등으로 표현되었던 부분이 산업내/부문간 불평등과 산업내/부문내 불평등으로 재분해 되었다. 산업 k 내에 부문 j가 배태되어 있다고 할 때, s^{kj} 는 k번째 산업의 j번째 부문의 총소득이 k 산업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이며, T_{kj} 는 그 집단의 Theil 지수이다.

이 연구는 2단계 작업으로 불평등 분해를 시도한다. 1단계는 전체 불평등을 산업간 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는 작업이며, 2단계는 산업을 기업규모 혹은 고용형태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산업내 불평등을 이러한 하위집단간 불평등과 하위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하위집단은 산업·기업규모·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산업은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고, 서비스산업을 개인서비스부문, 유통서비스부문, 사회서비스부문, 생산자서비스부문으로 재분류하여 산업간/산업내 소득불평등 효과를 파악한다.¹²⁾ 둘째, 기업규모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10개의 범주(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에서 소규모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50인 이하 기업규모를 자세히 구분한 것이다. 셋째, 노동유연화의 효

12) 개인서비스부문은 음식·숙박, 오락·문화,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유통서비스부문은 도·소매·음식·숙박·운수·창고업을, 사회서비스부문은 공공행정·국방,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을, 생산자서비스부문은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은 필자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공되는 자료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거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이거나, 근로시간형태가 시간제인 취업자”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한다.

집단간(내)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임금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뉜다. 탈산업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전체를 포함하지만, 노동유연화 등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4-7〉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비)정규직 분포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정규직	896	987	1,009	984	978	1,020	1,014	991
	비정규직	238	390	293	313	307	313	326	341
서비스업 전체	정규직	1193	1388	1266	1388	1414	1478	1548	1455
	비정규직	424	556	338	474	449	476	566	625
-유통 서비스	정규직	439	445	465	530	529	542	518	495
	비정규직	127	157	99	137	124	140	159	195
-생산자 서비스	정규직	375	338	344	398	402	435	472	398
	비정규직	83	111	59	81	73	91	124	129
-사회 서비스	정규직	200	421	238	260	261	281	322	320
	비정규직	71	89	47	73	82	68	86	84
-개인 서비스	정규직	179	184	219	200	222	220	236	242
	비정규직	143	199	133	183	170	177	197	217
총계	정규직	2,089	2,375	2,275	2,372	2,392	2,498	2,562	2,446
	비정규직	662	946	631	787	756	789	892	966

제5절 한국의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

1. 산업부문별 월 평균소득 변화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의 산업 및 고용형태에 따라서 증가율이 상이하다. 산업별로는 생산자서비스부문과 제조업의 소득증가율이 높고, 개인서비스부문과 사회서비스부문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 제조업 취업자의 2005년도 소득은 1999년에 비하여 54.9%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서비스부문에서는 이 보다 약간 높은 58%를 기록하였다(<표 4-8>). 그러나 개인서비스부문에서는 동 기간에 32% 증가한데 그쳤다. 1998년 당시에 생산자서비스부문과 제조업의 소득수준이 후자의 산업부문 보다 높았는데, 이후 7년간 소득증가율이 달라져 4개 산업부문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경향은 비고용인의 지위에 있는 임금근로자만을 비교해도 그대로 나타난다. 생산자서비스부문의 임금근로자들의 2005년도 임금은 제조업의 경우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소득이 가장 낮은 개인서비스부문 임금근로자보다 1.7배 정도 높다(<표 4-9>).

〈표 4-8〉 월 평균소득 추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포함)

(단위: 만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124.31	111.87	122.48	135.90	147.57	167.49	184.89	192.48
유통서비스	122.83	122.99	125.15	144.24	168.42	171.70	190.39	179.52
생산자서비스	125.90	118.42	127.85	140.66	155.34	167.52	179.66	199.11
사회서비스	131.23	131.94	128.48	142.43	161.25	176.45	192.73	178.34
개인서비스	106.30	94.17	109.91	119.38	138.87	142.41	147.07	140.42

〈표 4-9〉 월 평균소득 추이 (임금근로자의 사례)

(단위: 만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112.49	103.78	110.81	120.17	130.34	148.76	161.77	175.14
유통서비스	107.59	108.31	107.75	118.17	129.98	142.13	153.11	156.69
생산자서비스	122.60	113.62	123.22	131.08	144.53	160.56	175.44	187.38
사회서비스	119.10	128.45	116.48	130.33	134.57	144.95	163.85	167.08
개인서비스	86.76	78.57	84.01	88.58	98.58	110.03	113.55	117.01

한편 동일한 산업에서도 개인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소득격차가 명확히 나타난다. 월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생산자 서비스업의 경우에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2배가 넘으며, 개인서비스부문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는 1.6배에 이른다(<표 4-10>). 이러한 고용형태별 소득격차가 유통 서비스부문이나 사회서비스부문에서도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근로자 개인간 소득불평등은 산업 뿐 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탈산업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추이가 산업간 이질성과 고용형태의 다양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서비스부문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개인서비스부문은 가장 낮은 소득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체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월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생산자서비스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은 개인서비스부문의 정규직보다도 낮다. 탈산업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하면, 이러한 점이 좀 더 명확히 나타날 것이다.

〈표 4-10〉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소득 격차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정규직	119.27	114.01	118.20	129.06	141.18	163.27	177.16	196.85
	비정규직	87.00	77.89	85.37	92.22	95.81	101.45	113.92	112.03
유통 서비스	정규직	116.55	118.66	115.58	128.11	140.13	155.34	170.82	178.11
	비정규직	76.60	78.96	70.98	79.71	86.69	90.96	95.40	102.32
생산자 서비스	정규직	130.74	124.54	129.49	139.35	152.01	172.25	192.47	213.14
	비정규직	85.84	80.37	86.68	90.46	103.30	104.69	110.60	107.89
사회 서비스업	정규직	133.17	139.28	122.05	142.46	151.48	160.16	179.80	184.70
	비정규직	79.45	77.19	88.26	87.14	80.74	82.06	104.13	99.95
개인 서비스	정규직	108.11	97.76	100.82	110.37	116.38	136.74	142.68	143.55
	비정규직	60.03	60.84	56.34	64.77	75.34	76.82	78.64	87.41

2.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해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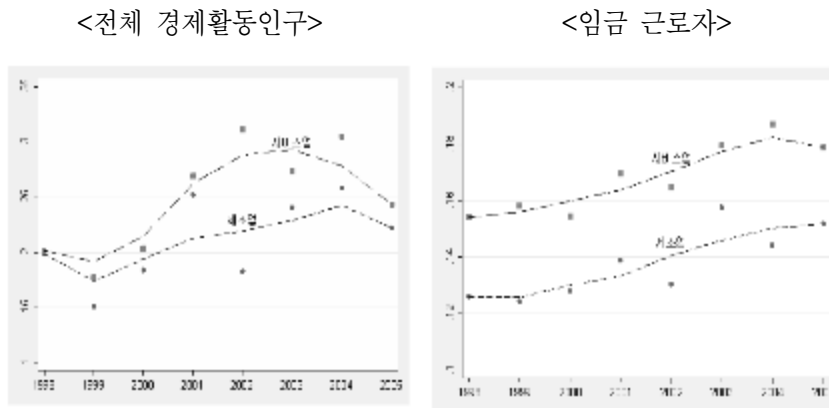
앞에서 설명한 방법론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을 분해하면,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소득자의 총 소득불평등 지수는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0.14에서 0.17로 증가하였으며, 고용주를 포함한 경우에는 동 시기에 0.21에서 0.25로 증가하였다(<표 4-11>). 2005년의 불평등 지수가 2004년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2005년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 보다는 훨씬 높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높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전체 취업자 불평등은 1998년에 거의 비슷하였으나, 소득불평등이 가장 악화되었던 2003-2004년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훨씬 높았다([그림 4-2]). 고용주를 제외한 임금소득자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가 큰 변동 폭을 나타내지만, 임금소득자만을 분석하면 비교적 일정한 격차를 유지한다. 이것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가 소규모 개인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부문의 자영업자들은 규모의 영세성과 내부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소득 이질성이 높으며 경제위기이후 이질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편차가 매년 달라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소득불평등 변동 폭은 고용주를 포함할 경우에 더 크다.

〈표 4-11〉 총소득 불평등의 분해: 산업간 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

	전체 경제활동 인구			
	총 소득 불평등	산업 내 소득불평등	산업 간 소득불평등	산업 간 소득불평등/ 총 소득불평등
1998	0.213	0.205	0.008	3.619%
1999	0.169	0.165	0.004	2.604%
2000	0.219	0.215	0.004	1.746%
2001	0.279	0.274	0.005	1.756%
2002	0.280	0.273	0.007	2.482%
2003	0.278	0.271	0.007	2.534%
2004	0.305	0.298	0.007	2.290%
2005	0.248	0.238	0.011	4.257%
	임금 소득자			
	총 소득 불평등	산업 내 소득불평등	산업 간 소득불평등	산업 간 소득불평등/ 총 소득불평등
1998	0.142	0.138	0.004	3.041%
1999	0.146	0.137	0.009	5.847%
2000	0.143	0.138	0.005	3.492%
2001	0.157	0.151	0.006	3.631%
2002	0.151	0.146	0.005	3.271%
2003	0.172	0.166	0.005	3.149%
2004	0.171	0.164	0.007	4.135%
2005	0.170	0.161	0.009	5.362%

[그림 4-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소득불평등(타일 지수) 추이의 평활곡선 (LOWESS curve)



<표 4-12> 서비스업내 총소득불평등의 분해: 4개부문간 불평등과 4개부문내 불평등

	서비스업			
	총 소득불평등	4개서비스부문내 소득불평등	4개서비스부문간 소득불평등	4개서비스부문간 불평등 / 총 소득불평등
1998	0.201	0.199	0.003	1.493%
1999	0.178	0.171	0.007	3.932%
2000	0.204	0.202	0.002	0.980%
2001	0.269	0.267	0.003	1.115%
2002	0.311	0.309	0.003	0.980%
2003	0.273	0.271	0.003	1.098%
2004	0.305	0.300	0.005	1.639%
2005	0.244	0.236	0.007	2.868%

한편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산업간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면,¹³⁾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을 산업간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간 소득불평등의 비중은 전체 소득불평등의 5% 이하를 설명할 뿐이며, 이러한 설명력도 시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산업간 소득불평등의 비중이 증가세에 있는 경향성이 보이지만 그 비중이 낮아 전체 소득불평등의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분석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여 4개 서비스부문(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간의 평균소득격차를 비교하면, 4개 부문간에 소득격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 예를 들어서, 4개 서비스부문간 소득불평등이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1998년에 1.5%이었으나, 2005년에는 2.7%에 불과하다(<표 4-12>). 최근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단순히 서비스업과 다른 산업, 혹은 서비스업의 4개 부문간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 이후 총 소득불평등 증가가 대부분 산업내(혹은 4개 서비스부문내) 불평등 증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의미하는데, 각 산업의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하위집단간 소득격차를 분해하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첫째,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소득 불평등의 20% 이상은 기업규모간 불평등으로 설명된다. 총 소득불평등을 10개 규모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기업규모간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기업규모간 격차의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였다(<표 4-13>). 제조업에서는 총 소득불평등 가운데 기업규모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10%에서 2005년 26%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15%에서 19%로 증가하였다.

13) 산업은 1차 산업(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만으로 제한한 분석에서는 1차 산업을 제외한 5개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4-13〉 각 산업별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제조업			
	총불평등	기업규모간 불평등	기업규모내 불평등	기업규모간 불평등 / 총불평등
1998	0.126	0.013	0.113	10.3%
1999	0.124	0.018	0.106	14.5%
2000	0.128	0.019	0.109	14.7%
2001	0.139	0.020	0.119	14.1%
2002	0.130	0.021	0.110	15.8%
2003	0.158	0.027	0.130	17.2%
2004	0.144	0.034	0.110	23.5%
2005	0.152	0.040	0.112	26.2%
	서비스업			
	총불평등	기업규모 간 불평등	기업규모 내 불평등	기업규모 간 불평등 / 총불평등
1998	0.154	0.024	0.130	15.4%
1999	0.158	0.026	0.132	16.6%
2000	0.155	0.023	0.132	14.7%
2001	0.170	0.026	0.143	15.4%
2002	0.165	0.027	0.137	16.5%
2003	0.180	0.030	0.150	16.6%
2004	0.187	0.040	0.147	21.2%
2005	0.179	0.035	0.144	19.5%

둘째, 2005년의 총소득 불평등 가운데 16-20%는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 정규직)에 의한 소득격차로 설명된다(<표 4-14>).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고용형태간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용형태별 소득격차의 설명력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약간 더 크다. 제조업에서는 고용형태간 불평등이 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6%(1998년)에서 16%(2005년)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14%에서 19%로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노동유연화 확대를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표 4-14〉 각 산업별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제조업			
	총불평등	고용형태 간 불평등	고용형태 내 불평등	고용형태 간 불평등 / 총불평등
1998	0.126	0.007	0.119	5.8%
1999	0.124	0.013	0.111	10.5%
2000	0.128	0.008	0.120	6.4%
2001	0.139	0.009	0.130	6.6%
2002	0.130	0.012	0.119	9.1%
2003	0.158	0.017	0.141	10.7%
2004	0.144	0.015	0.129	10.5%
2005	0.152	0.025	0.127	16.2%
	서비스업			
	총불평등	고용형태간 불평등	고용형태내 불평등	고용형태간 불평등 / 총불평등
1998	0.154	0.021	0.133	13.8%
1999	0.158	0.024	0.134	15.4%
2000	0.155	0.018	0.137	11.6%
2001	0.170	0.022	0.147	13.2%
2002	0.165	0.021	0.144	12.5%
2003	0.180	0.026	0.153	14.6%
2004	0.187	0.030	0.157	16.1%
2005	0.179	0.034	0.145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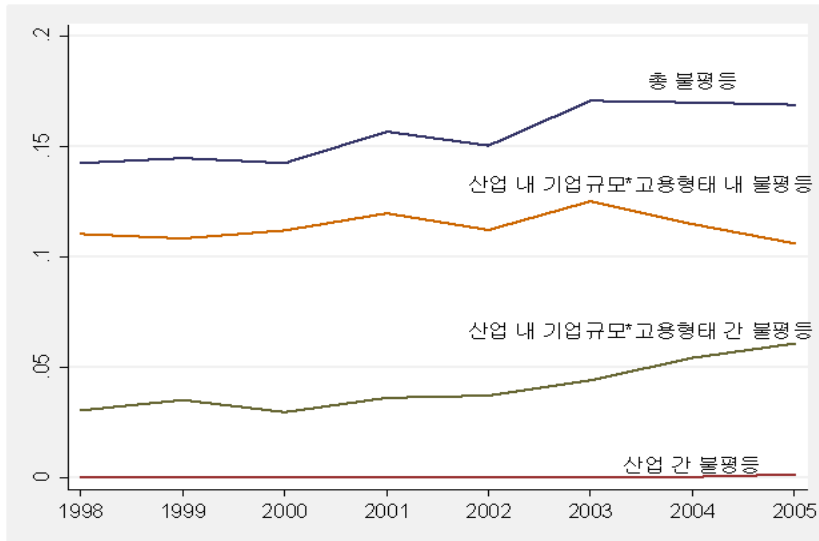
결국 1998-2005년의 소득불평등은 산업간 차이보다는 산업내 기업규모·고용형태별 차이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기업규모간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탈산업화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영세사업체 혹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할 경우에 소득불평등은 더욱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교차시킨 20개의 하위집단으로 각 산업별 임금근로자들을 구분하고 산업내 총 소득불평등을 이들 하위집단간/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면, 두 가지 변수의 불평등효과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그림 4-3]과 [그림 4-4]를 참고). 총소득불평등은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내 불평등에 의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만,¹⁴⁾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간 불평등도 최근 들어서 소득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6개 산업간(농림어업/제조업/개인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불평등이 총불평등의 5%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반하여,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간 불평등은 30% 이상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 요인의 설명력도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부의 총 소득불평등 가운데 20개 하위집단간의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4%에서 2005년 36%로, 서비스업에서는 26%(1998년)에서 35%(2005년)로 증가하였다(<표 4-15>).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내 불평등은 200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용형태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14)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내 불평등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요인에 의하여 설명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취업자 개인의 인적 자본, 직업경력, 직업 등이 고용형태내 불평등을 설명할 것이다. 경제위기이후 소득불평등을 고용형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변수로 분석한 글은 이성균(2006)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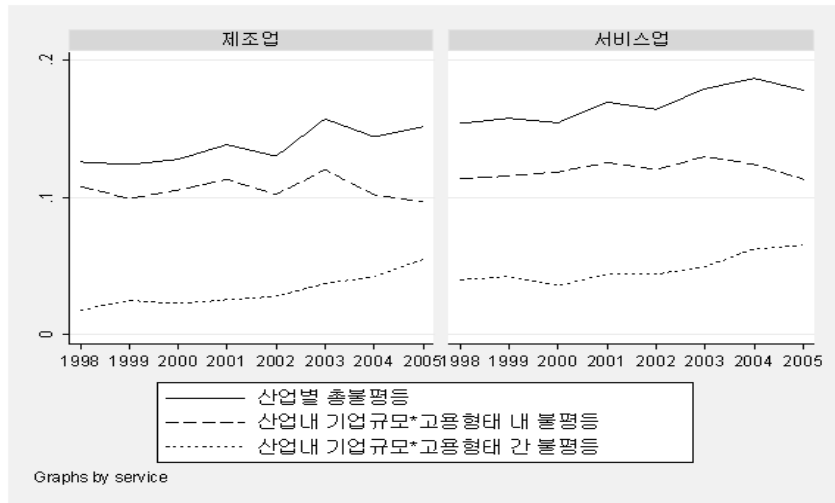
[그림 4-3] 총 소득불평등의 2단계 분해 결과의 추이



<표 4-15> 규모*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소득불평등 분해

	제조업			
	총 불평등	기업규모* 고용형태간 불평등	기업규모* 고용형태내 불평등	기업규모*고용형태간 불평등/총불평등
1998	0.126	0.018	0.108	14.2%
2005	0.152	0.055	0.097	36.1%
	서비스업			
1998	0.154	0.040	0.114	26.1%
2005	0.179	0.065	0.113	36.5%

[그림 4-4] 각 산업별 소득불평등의 하위집단 분해 결과의 추이



제6절 소결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탈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술혁신 등 최근의 변화는 공정과정이나 경영조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보화는 경제활동의 서비스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이후 기업경영활동을 둘러싼 제도 및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전문 서비스활동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지식정보관련 산업에서 증가하여 전반적인 소득수준도 높아진다"고 희망적인 진단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전통성과 영세성이 여전히 높은 특징을 나타내며, 생산자서비스부문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영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개인·유통 서비스부문 영세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사회서비스부문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및 규모별 고용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체는 여전히 많은 파트타임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금융, 의료, 정보관련 산업 사업체들도 노동유연화에 기초한 인력채용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업 내부의 산업부문간 소득격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내부적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이질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각 산업내부의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소득격차가 증가함으로써, 산업내 소득이질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 증가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탈산업화 경향 자체보다는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산업의 영세성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표현되는 한국 서비스산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받

영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법률·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보건·교육·복지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업을 확대하는 정책도 정부의 일자리 확대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취업자로 채워진다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당사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적절한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 논문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제5장 취업↔미취업 이행에서의 격차: 산업간·근로자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제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유연화전략 강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어떤 노동력 상태(예: 취업)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예: 실업)로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이한 인적 특성, 직업경험, 상황을 가지는 근로자 사이에 노동시장 이행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서 일정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상태변화와 관련하여 실업 또는 미취업상태로부터의 탈출 가능성, 그리고 취업상태에서 이탈 가능성이 산업·기업 특성이나 근로자 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근로자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지, 특히 어떤 근로자집단이 노동시장 이행에서 초래되는 위험성에 취약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미취업↔취업 이행에서 집단간 또는 산업간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이행과정에서 상향이동에 실패하여 저임금과 실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은 한 직장에 장기간 근무하거나 활발한 노동이동을 통해 상향이동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취업↔취업 이행과정, 즉 '취업→실업→직장탐색→취업→실업...'이라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집단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소득불평등 현상을 보다 종합적·동태적으로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한다.

이 연구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업↔취업의 동학을 구성하는 모든 상태 및 단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가 실직 또는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근로자 계층간 격차 및 기업·산업간 특성 차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노동이행과정에서 근로자계층간 격차 또는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근로자들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그리고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에 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리고 실업·취업간 노동시장이행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현상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근로자집단 간에 다르고 이러한 격차가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관점, 즉 소득불평등 현상을 동태적인 노동시장이행의 위험성과 함께 고려하는 관점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노동시장이행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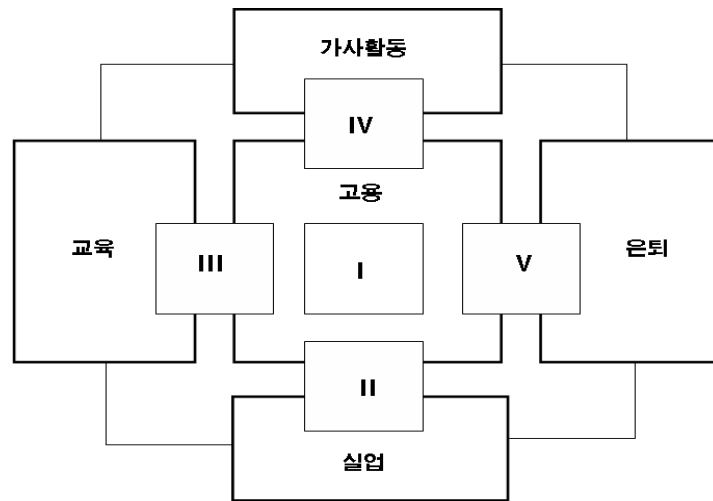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의 내용·형태가 보다 불안정해지고, 또한 인생 설계에서 개인적 필요나 욕구를 증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개인들은 자신의 근로경력에서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노동시장이행 경험과 다양한 이행경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이행 가운데 많은 부분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동시에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기업경영상의 이유나 질병 등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늘날 개인들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기회가 늘어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선택에 따른 상황은 위험성과 결함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위험(risk)의 출현과 점증하는 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경로의 선택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생애근로경로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Beck, 1992; Giddens, 1991). 더욱이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비자발적인 노동시장이행은 자발적 이행에 비해 보다 많고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또는 근로취약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있어서 노동시장 이행은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든 또는 비자발적인 것이든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보다는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오래 머물게 하거나 저임금일자리 → 실업 → 저임금이라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회전문 함정(revolving door trap)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행노동시장(TLM, Transitional Labor Market) 개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독일 경제학자 Schmid(1998)에 따르면, 이행노동시장은 현재 서유럽 국가들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출현하고 있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은 근로생애에 걸쳐 직장↔직장, 고용↔실업, 고용↔가사활동, 고용↔

질병·사고에 따른 근로능력상실 등 다양한 유형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개인적 욕구를 중시하는 생애설계 경향의 확산 등에 따른 이러한 이행행위들의 증가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과거의 특성으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1] 노동시장이행의 다양한 유형



자료: Schmid, 1998.

이행노동시장 접근이 기초하는 기본적 가정의 하나는 증대하는 근로자의 유연성은 자신의 근로경력을 개인적 생활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 이행은 근로자에게 일종의 위험(risks)을 초래한다. 즉, 일시적 근로경력 단절이 의도와는 다르게 영속적(permanent)인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점증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위험은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이며, 모든 개인들은 잠재적으로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Ulrich Beck,

1992). 개인들은 근로생활에 필요한 인적자본에서의 격차만이 아니라 이행숙련(transitional skills)에서도 차이가 난다. 즉, 모든 사람이 체계적인 생애설계에 요구되는 인지적·사회적 숙련(cognitive and social skills)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Giddens, 1991). 노동시장 내 특정 근로자집단은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자원들(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등)에서 취약할 뿐 아니라 이행숙련 또한 낮다(Bourdier, 1986). 따라서 이들 근로자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노동시장이행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Schmid(2000) 또한 이행노동시장이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이행은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직업경력에 있어서 하향 이동 함정(downward spiral), 즉 배제적 이행(exclusionary transitions)으로 귀결되고 결국 반복적 실업 또는 장기실업과 빈곤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Schmid(2000)는 이행노동시장 개념 중 규범적 개념(normative concep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규범적 개념이란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이 사회적 배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이행행위를 상향이동을 위한 폭넓은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이행을 촉진·보완하는 공공 및 민간의 제도적 틀에 의해 지원되는 정책들은 배제적 이행(exclusionary transition)의 위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근로경력에서 단절을 경험하는 근로취약계층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상태로 복귀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의 필요성과 의미는 이행노동시장의 규범적 개념과 부합한다.

따라서 이행노동시장 접근에서 핵심적 질문은 노동시장이행이 증가할 것인가라는 실증적 질문보다는 이행행위들이 근로자의 지위 유지·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는 어떤 근로자집단이 의도하지 않는 장기간 실업

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배제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Bijwaard & Veenman, 2007).

노동과 소득을 대규모로 재분배하는 고용전략을 수행하여 왔던 네덜란드는 종종 이행노동시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정상적 조건 하에서는 고용을 발견할 기회를 다시 가지지 못하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직업소개·알선서비스의 성과를 지적하면서 1990년대 네덜란드가 이룩한 뛰어난 고용성과는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에 높은 수준의 파트타임 노동, 증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그리고 안정성과 유연성을 최적화하는 유연안정성 접근에 기인하는 바가 컸음을 지적한다(Schmid, 2002).

그러나 이행노동시장의 모범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서조차 과연 이행노동시장의 출현이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라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명과 평가는 아직 일치된 견해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Bijwaard & Veenman(2007)은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자원을 가지는 경우에서조차 선별과정(selection process)이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일자리 기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배제적 이행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이행노동시장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배제적 이행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논쟁 및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3절 노동시장 이행경로 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이 1998년부터 매년 생산하는 한국노동패널(KLIPS) 9차년도 조사의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의 직업력 자료는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한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와 1차 조사 이후로 조사된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직업력 자료를 통해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직업을 자료 구성의 기본 단위로 하는 직업력 자료는 개인 조사의 유형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며 개인 자료의 주된 일자리 정보 또한 직업력 자료에 포함된다.

직업력 자료에는 일자리 발견 차수,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 일자리 번호,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의 보유/미보유 여부, 일자리의 형태(임금/비임금), 주된 일자리 여부,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 구직활동 관련, 업종 및 직종,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관련 사항, 사회보험관련, 기업 형태 및 규모, 노동조합 관련, 퇴직금 관련, 실업급여 관련, 교대제 관련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KLI, 한국노동패널 유저 가이드 2007).

본 연구에서는 회고적 자료가 가질 수 있는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를 고려하여 최초 조사시점인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의 회고적 일자리에 관한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또한 분석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1985년 이전에 입직한 경우와 1997년 이전에 이직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직업력 자료에서 제공되는 취업시기와 퇴직시기로부터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취업기간과 미취업기간을 계산하였다. 개인의 인

적 특성(성, 연령,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조사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직업력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임금 또는 소득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으로 환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 자료는 7,098명의 개인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근로자(7,098명) 중 임금근로자는 5,782명(81.4%), 비임금근로자는 1,247명(18.6%)이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640명(23.1%), 비제조업이 5,325명(76.9%)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20.4%, 30~45세가 43.87%, 45세 이상이 35.7%를 점하며,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49.6%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22.4%, 고졸 38.9%, 전문대졸 14.9%, 대졸 이상이 23.7%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관리·전문가·준전문가 직종이 19.1%, 사무·판매·서비스 직종이 42.2%, 생산직종이 38.6%를 차지한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기업 79.6%, 30~100인 기업 11.3%, 100~300인 기업 11.3%, 그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이 4.0%를 차지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4.6%가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24.1%가 중위소득의 6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체 근로자의 46.8%가 분석기간(이직시기 기준으로 1997~2006년) 동안 1번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2번의 일자리는 28.8%, 3번의 일자리는 12.8%를 점한다. 나머지 10%는 4번 이상의 일자리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KLIPS 직업력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7,098	5,782	1,247	1,640	5,325
연령	30세 미만	20.4	23.83	4.81	17.26	21.48
	30~45세	43.87	45.3	35.61	48.17	42.35
	45세 이상	35.73	30.87	59.58	34.57	36.17
성	남성	49.61	49.34	50.44	54.15	48.19
	여성	50.39	50.66	49.56	45.85	51.81
학력	중졸이하	22.43	20.98	29.83	24.94	21.67
	고졸	38.9	37.69	44.35	45.61	36.66
	전문대졸	14.96	16.34	7.94	13.78	15.32
	대졸 이상	23.71	24.99	17.88	15.67	26.35
직종	관리·전문가	19.13	20.28	13.73	13.5	21.04
	사무·판매·서비스	42.27	37.88	62.43	16.86	50.52
	생산직	38.6	41.84	23.84	69.64	28.44
산업	비제조업	76.45	73.49	89.98		
	제조업	23.55	26.51	10.02		
기업규모	30인 미만	79.63	76.49	99.05	63.71	85.19
	30~100인	11.33	13.05	0.63	20.98	7.9
	100~300인	4.04	4.69		7.56	2.9
	300인 이상	5	5.76	0.32	7.75	4.01
저임금	중위임금 50%	15.52	15.52		11.39	17.29
	중위임금 60%	24.63	24.63		18.73	26.86
	중위임금 2/3	35.11	35.11		29.51	37.07
저소득	중위소득 50%	24.31		24.31	20.45	24.57
	중위소득 60%	28.04		28.04	25	28.23
	중위소득 2/3	31.57		31.57	31.82	31.47
일자리수	1	46.79	45.71	52.13	43.72	48.08
	2	28.85	29.02	27.99	28.54	28.98
	3	12.82	13.08	11.47	14.45	12.28
	4	6.51	6.85	4.81	7.2	6.1
	5	2.86	3.06	2.09	3.84	2.52
	6	1.25	1.26	1.04	1.22	1.24
	7번 이상	0.91	1.02	0.48	1.03	0.81

2. 노동시장 이행경로에 대한 분석

개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또는 정리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며, 실직 이후 직업탐색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하거나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한다. 많은 경우 근로자들은 이러한 노동시장이행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력의 취업시기와 이직시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개인이 경험하여 왔던 일련의 일자리들이 지속된 기간(job spell),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사이의 기간, 즉 미취업기간(non-job spell)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¹⁵⁾ 어떤 근로자가 주어진 기간 동안 n 번의 일자리를 경험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i 번째 일자리를 $jobsp_i$ ($i=1,2,\dots,n$)라고 하고, i 번째 일자리($jobsp_i$)와 $i+1$ 번째 일자리($jobsp_{i+1}$) 사이에 존재하는 미취업기간을 i 번째 미취업기간($njobsp_i$)으로 정의하자. 그러면 어떤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경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jobsp1 \Rightarrow njobsp1 \Rightarrow jobsp2 \Rightarrow njobsp2 \Rightarrow \dots \Rightarrow njobsp_{n-1} \Rightarrow njobsp_n$$

본 연구는 근로자들이 매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새로운 일자리로 이행할 때까지 미취업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평균적인 이행경로가 어떠한지, 상이한 집단(예: 남성 vs 여성 등)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이행과정에서 임금(또

15)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사이에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직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상태를 포함하여 미취업기간으로 정의하였다.

는 소득)수준이나 종사상 지위 등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근로자집단간 이행경로 비교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이 누구인지를 규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7번 이내의 일자리 수를 경험한 경우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전체 표본 근로자의 99% 이상이 7번 이하의 일자리를 경험하였고, 7번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전체근로자,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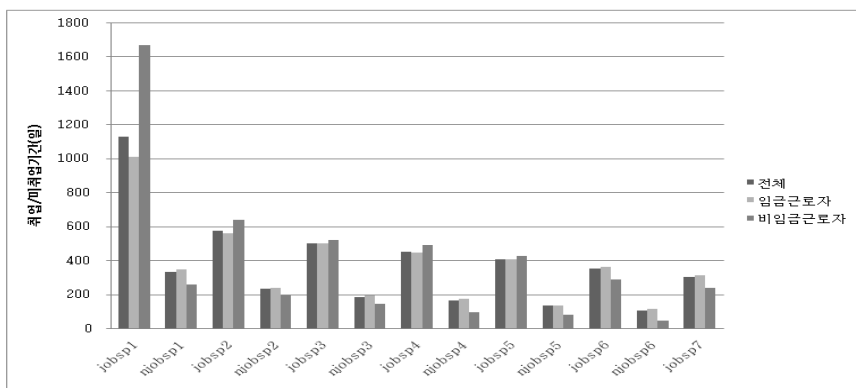
<표 5-2>는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일자리이행과정을 보여주는데, 1번째 일자리 지속기간은 1,125일이며, 이후 일자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일자리 지속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7번째 일자리 기간은 1번째 일자리의 1/3을 하회하는 30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사이 기간, 즉 미취업기간도 횟수가 증가하면서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njobsp1 330일→njobsp6 106일. 일자리 횟수 증가에 따라 임금근로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비자발적 이직 비중도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한편, 일자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실질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취업기간 동안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본의 향상이 전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직장 이동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였는지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 직전에 받았던 임금과 미취업기간을 끝내고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처음 받는 입직임금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석 자료의 임금은 이직 직전의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입직하여 근무하는 동안 일정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입직임금은 분석 자료에서 제시되는 임금보다 적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시점의 일자리에 대응하는 임금수준 비교만으로 노동시장이행을 통해 실질임금의 상승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임금 증가가 동일한 숙련수준에서 순전히 좋은 일자리로 이행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취업기간에 획득된 숙련 향상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추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 일자리이행과정: 전체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변수	전체 (N=7,094, 일자리수=1.98)				임금근로자 (N=5,780, 일자리수=2.01)				비임금근로자 (N=1,245, 일자리수=1.82)			
	기간 (일)	월 소득 (만원)	임금 근로 (%)	비자발 이직 (%)	기간 (일)	월 임금 (만원)	상용직 (%)	비자발 이직 (%)	기간 (일)	월 소득 (만원)	자영자 (%)	비자발 이직 (%)
jobsp1	1125	110.5	0.82	0.30	1008	106.4	0.65	0.30	1667	150.2	0.74	0.33
njobsp1	330				343				256			
jobsp2	571	110.7	0.84	0.28	560	106.9	0.63	0.28	635	155.8	0.77	0.29
njobsp2	232				239				194			
jobsp3	499	118.2	0.86	0.27	498	113.4	0.65	0.27	519	181.2	0.90	0.27
njobsp3	185				191				143			
jobsp4	449	123.5	0.87	0.26	444	115.9	0.63	0.27	490	191.6	0.89	0.22
njobsp4	160				170				93			
jobsp5	407	122.0	0.86	0.32	407	120.6	0.69	0.31	427	142.2	1.00	0.41
njobsp5	132				135				77			
jobsp6	351	132.9	0.92	0.32	361	130.8	0.60	0.34	287	175.0	1.00	0.20
njobsp6	106				116				42			
jobsp7	302	132.6	0.89	0.33	312	127.2	0.57	0.31	237	.	0.50	0.50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임금근로자도 전체근로자와 유사한 이행패턴을 보여준다. 즉, 일자리 횟수 증가에 따라 취업기간과 미취업기간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은 증가한다. 그러나 상용직과 비자발적 이직의 비중에서는 일자리 수의 증가에 따라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비임금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수 증가에 따라 취업기간과 미취업기간이 감소하지만, 실질임금에서는 4번째 일자리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자영자나 비자발적 이직 비중에서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인적 특성, 기업·산업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근로자집단간 이행경로상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산업간 비교

<표 5-3>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평균적 일자리이행과정을 보여준다. 1번째 일자리 지속기간은 제조업이 1,311일로 비제조업(1,069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3번째 일자리까지는 제조업의 일자리 지속기간이 서비스업보다 길고 4번째 일자리부터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미취업기간을 비교하면, 일자리 횟수에 따라 변하며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다. 산업에 관계없이 일자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일자리 지속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미취업기간 역시 대체로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 횟수 증가에 따라 임금근로의 비중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서비스업은 임금근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비자발적 이직의 비중은 일자리 횟수에 관계없이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

매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대체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두 산업부문 공히 일자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대체로 실질임금이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임금수준의 상승이 직장 이동을 통한 순수한 임금상승으로 보기 어

럽다. 직장 이동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였는지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 직전에 받았던 임금과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처음 받는 입직임금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 자료의 임금은 이직 직전의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입직임금은 분석 자료에서 제시되는 임금보다 적을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시점의 일자리에 대응하는 임금수준 비교만으로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실질임금의 상승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¹⁶⁾ 여기에도 미취업기간 동안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인적자본이 증가하였다면 그 만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동을 통한 임금상승은 분석 자료의 임금보다 더욱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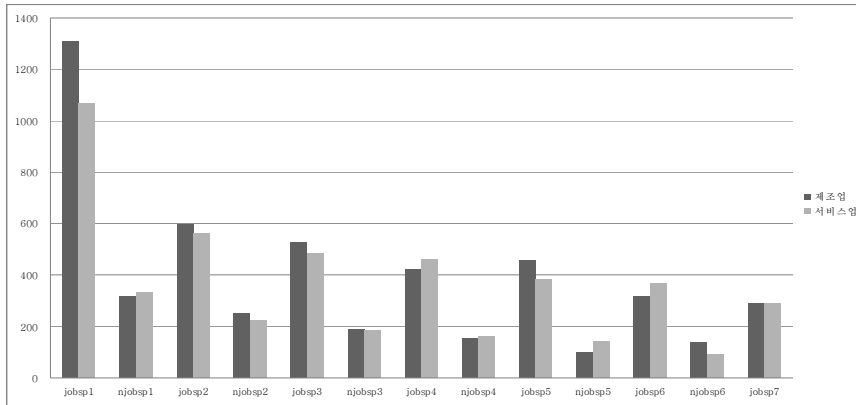
다음으로 산업을 6개 산업, 즉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자(<표 5-4>). 첫 번째 일자리 지속기간은 제조업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이며,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업이 가장 짧다. 3번째 일자리까지 이러한 산업간 일자리 지속기간의 격차가 대체로 유지되며, 4번째 일자리 이후에는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지속기간이 완만하게 떨어져 오히려 타 산업들에 비해 일자리 지속기간이 길게 되는 경향이 있다. 미취업기간은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횟수가 늘어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개인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취업기간의 감소가 완만하다. 임금근로 비중은 유통, 개인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며, 나머지 산업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실질소득 수준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수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16) 1998~2006년까지 제조업의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연간 4.5%였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2번째와 3번째 일자리 사이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자. 3번째 일자리 입직 시에 2번째 일자리의 임금(108.4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3번째 일자리 기간(527.2일) 동안 연간 실질임금상승률을 적용하면 130.7만원이 된다. 이를 3번째 일자리 임금(118.1만원)과 비교하면, 직장이동으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6.6만원(130.7-118.1)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6번째와 7번째 일자리를 빼면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다.

〈표 5-3〉 일자리이행과정: 제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N=1639, 일자리수=2.07				서비스업 N=5324, 일자리수=1.94			
	기간 (월)	월소득 (만원)	임금근로 비율	비자발이직 비율	기간 (월)	월소득 (만원)	임금근로 비율	비자발이직 비율
jobsp1	1311.3	112.1	0.92	0.35	1069.3	109.8	0.79	0.29
njobsp1	319.0				333.4			
jobsp2	596.7	108.4	0.89	0.31	559.6	111.6	0.81	0.27
njobsp2	250.7				223.0			
jobsp3	527.2	118.1	0.89	0.29	486.5	118.0	0.84	0.26
njobsp3	190.3				184.0			
jobsp4	424.0	123.7	0.89	0.30	461.3	123.6	0.87	0.25
njobsp4	152.9				160.9			
jobsp5	455.4	124.1	0.88	0.29	383.6	121.4	0.85	0.34
njobsp5	98.5				141.4			
jobsp6	317.6	117.0	0.92	0.38	366.3	135.7	0.92	0.30
njobsp6	139.9				92.5			
jobsp7	289.0	133.9	0.80	0.30	290.2	126.0	0.92	0.30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표 5-4〉 일자리이행과정: 6개 산업간 비교

	제조업 N=1639, 일자리수=2.07				건설업 N=598, 일자리수=2.19				사업서비스 N=797, 일자리수=1.87			
	기간 (월)	월 소득 (만원)	임금 근로 비율	비자발 이직 비율	기간 (월)	월소 득(만 원)	임금 근로 비율	비자발 이직 비율	기간 (월)	월 소득 (만원)	임금 근로 비율	비자발 이직 비율
jobsp1	1311.3	112.1	0.92	0.35	1181.8	133.9	0.89	0.45	1186.6	125.5	0.91	0.27
njobsp1	319.0				243.5				393.0			
jobsp2	596.7	108.4	0.89	0.31	574.0	121.6	0.85	0.40	587.6	118.6	0.84	0.24
njobsp2	250.7				230.2				161.3			
jobsp3	527.2	118.1	0.89	0.29	471.3	128.1	0.89	0.34	545.8	140.2	0.84	0.25
njobsp3	190.3				188.7				172.9			
jobsp4	424.0	123.7	0.89	0.30	501.5	131.9	0.95	0.27	445.1	138.7	0.83	0.17
njobsp4	152.9				95.4				120.1			
jobsp5	455.4	124.1	0.88	0.29	340.3	142.9	0.89	0.38	405.0	143.2	0.89	0.32
njobsp5	98.5				58.9				182.5			
jobsp6	317.6	117.0	0.92	0.38	422.0	132.2	0.94	0.63	399.2	122.2	1.00	0.00
njobsp6	139.9				118.6				121.7			
jobsp7	289.0	133.9	0.80	0.30	416.7	144.4	1.00	0.40	60.8	24.5	0.50	0.50

	유통서비스 N=1515, 일자리수=1.94				개인서비스 N=1240, 일자리수=1.99				사회서비스 N=1188, 일자리수=1.88			
	기간 (월)	월 소득 (만원)	임금 근로 비율	비자발 이직 비율	기간 (월)	월소 득(만 원)	임금 근로 비율	비자발 이직 비율	기간 (월)	월 소득 (만원)	임금 근로 비율	비자발 이직 비율
jobsp1	1179.6	116.6	0.72	0.24	899.7	90.9	0.70	0.25	923.2	99.1	0.88	0.33
njobsp1	341.4				336.3				341.7			
jobsp2	588.1	116.2	0.77	0.23	549.7	99.2	0.79	0.26	519.6	106.8	0.88	0.29
njobsp2	224.8				241.0				241.7			
jobsp3	512.2	120.5	0.80	0.23	471.5	101.3	0.82	0.26	466.9	115.5	0.90	0.25
njobsp3	162.7				233.5				162.7			
jobsp4	469.0	122.6	0.85	0.28	424.2	118.9	0.84	0.20	457.2	112.5	0.89	0.30
njobsp4	251.9				131.3				181.7			
jobsp5	363.0	115.2	0.83	0.27	443.8	109.7	0.84	0.38	398.5	107.1	0.90	0.37
njobsp5	221.2				88.9				150.3			
jobsp6	297.3	134.6	0.91	0.14	467.9	97.8	0.92	0.42	297.0	178.1	0.94	0.31
njobsp6	38.0				103.4				71.0			
jobsp7	357.4	124.5	1.00	0.00	121.7	87.4	0.80	0.25	329.5	171.4	1.00	0.50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다. 저임금과 비저임금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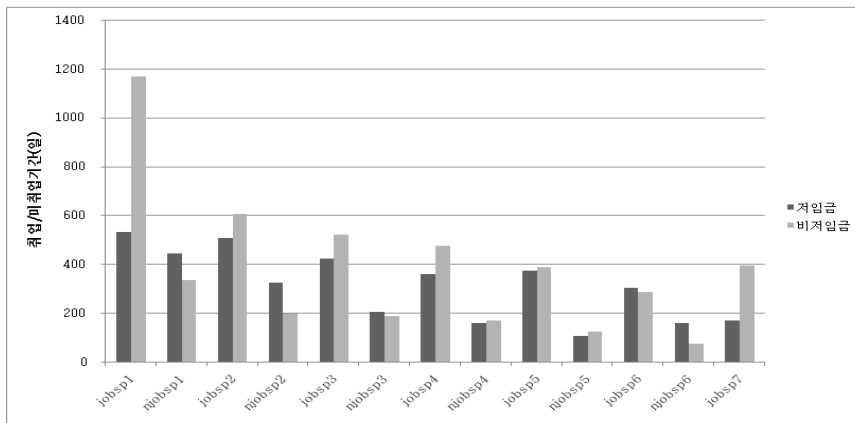
저임금과 비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경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보자(<표 5-5>). 여기서 저임금이란 1번째 일자리 임금이 중위(median)임금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중위임금은 KLIPS 1차년도(1998년)의 중위임금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저임금 및 비저임금 근로자 공히 일자리·미취업기간 횟수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기간과 미취업기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일자리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이 비저임금 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히 초기 3회까지의 미취업기간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비저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긴 미취업기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단계에서 저임금 상태에 있었던 근로자들은 비저임금 근로자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직업탐색의 어려움이 크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취업기간이 길지 않게 됨을 보여준다.

라. 남성과 여성 근로자

<표 5-5>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공히 일자리·미취업 횟수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기간과 미취업기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저임금과 비저임금 근로자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일자리 지속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은 반면 미취업기간은 남성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성별 임금격차는 상당한 정도이지만, 대체로 일자리가 횟수가 증가하면서 임금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용직과 비자발적 이직의 비율에서는 일관된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기 힘들다.

〈표 5-5〉 일자리이행과정 비교: 저임금 vs 비저임금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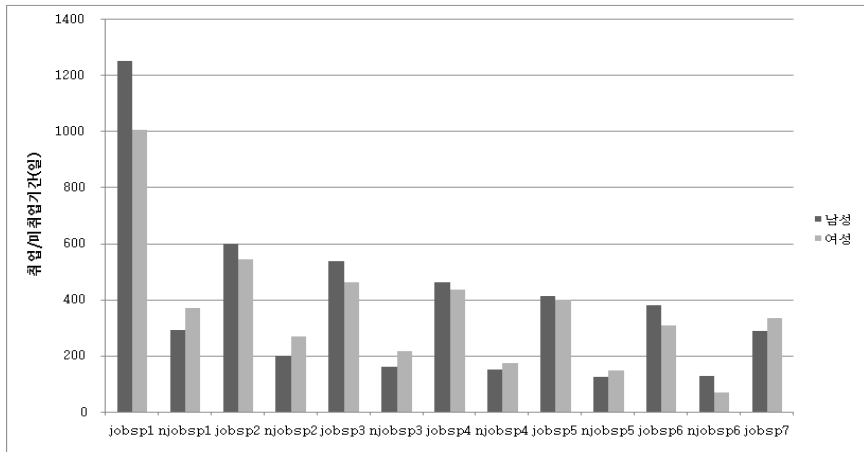
	저임금: N=1,236, 일자리수=1.97				비저임금: N=3,783, 일자리수=1.96			
	기간 (일)	월임금 (만원)	상용직 (%)	비자발 이직(%)	기간 (일)	월임금 (만원)	상용직 (%)	비자발 이직(%)
jobsp1	529.8	46.3	1.00	0.32	1168.2	126.1	1.00	0.29
njobsp1	443.2				334.8			
jobsp2	506.1	74.2	0.92	0.29	603.6	120.0	0.87	0.28
njobsp2	324.7				197.3			
jobsp3	422.5	85.0	0.93	0.32	519.3	125.7	0.88	0.26
njobsp3	203.1				188.0			
jobsp4	358.9	83.5	0.95	0.28	473.9	131.5	0.89	0.26
njobsp4	159.3				170.0			
jobsp5	373.0	88.3	0.90	0.31	387.2	130.5	0.92	0.32
njobsp5	105.3				122.3			
jobsp6	301.8	119.6	1.00	0.31	284.6	128.1	0.93	0.38
njobsp6	159.7				75.0			
jobsp7	167.3	86.5	1.00	0.25	395.4	163.8	0.87	0.40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표 5-6〉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남성 vs 여성 임금근로자

	남성: N=2,852, 일자리수=2.06				여성: N=2,928, 일자리수=1.96			
	기간(일)	월임금 (만원)	상용직	비자발 이직	기간(일)	월임금 (만원)	상용직	비자발 이직
jobsp1	1133.5	130.7	0.67	0.33	887.4	82.8	0.63	0.26
njobsp1	306.5				381.2			
jobsp2	589.9	130.1	0.68	0.31	530.1	84.5	0.58	0.25
njobsp2	209.4				270.7			
jobsp3	538.1	139.0	0.68	0.29	457.2	86.9	0.63	0.25
njobsp3	167.1				218.2			
jobsp4	451.5	137.0	0.62	0.28	436.5	91.5	0.65	0.24
njobsp4	164.9				177.4			
jobsp5	405.9	140.9	0.75	0.30	410.0	95.7	0.62	0.32
njobsp5	125.6				151.2			
jobsp6	396.5	147.4	0.59	0.37	307.6	104.0	0.61	0.30
njobsp6	139.0				71.9			
jobsp7	291.1	157.8	0.53	0.38	353.9	79.8	0.64	0.18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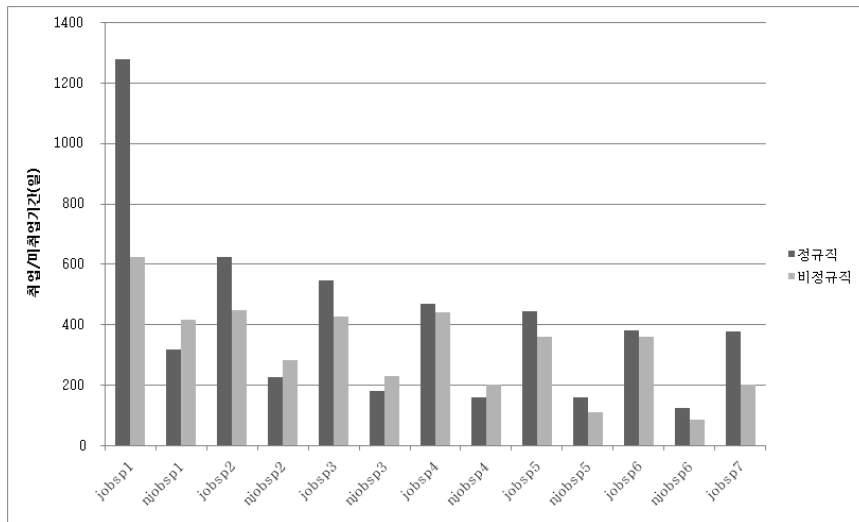
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히 취업기간과 미취업기간은 일자리 횟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는 앞의 분석에서와 동일하다. 여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1번째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 5-7>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대체로 일자리기간은 짧고 미취업기간은 길게 나타나며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그 격차가 현격하여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 변화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처음에는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비록 절대수준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지만 일자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흐름이 보다 뚜렷하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정규직의 경우 일자리 횟수가 늘어나면서 상용직의 비중이 대체로 줄어드는 반면, 정규직의 경우 상용직 비율이 상당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정규직의 경우 비자발 이직의 비율이 진폭을 거듭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일자리 횟수가 늘어나면서 동 비율이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요컨대, 비정규직의 경우 한편에서는 일자리 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많은 부분이 상용화되면서도 다른 한편 비자발적 이유에 따른 이직도 증가하는 복합적 양상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7〉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정규직 vs 비정규직

	정규직: N=2,963, 일자리수=2.06				비정규직: N=1,843, 일자리수=1.96			
	기간(일)	월임금 (만원)	상용직	비자발 이직	기간(일)	월임금 (만원)	상용직	비자발 이직
jobsp1	1281.2	128.0	0.94	0.31	607.4	77.0	0.20	0.29
njobsp1	318.6				416.0			
jobsp2	614.7	118.1	0.74	0.28	448.6	88.1	0.40	0.30
njobsp2	227.7				283.1			
jobsp3	538.6	123.7	0.71	0.25	427.5	93.9	0.49	0.30
njobsp3	183.0				235.1			
jobsp4	461.1	122.5	0.69	0.28	434.3	104.9	0.52	0.23
njobsp4	159.5				208.9			
jobsp5	441.2	125.9	0.81	0.25	366.3	114.8	0.45	0.38
njobsp5	163.2				110.1			
jobsp6	372.6	142.6	0.70	0.31	367.1	115.9	0.41	0.45
njobsp6	129.3				85.2			
jobsp7	383.3	136.4	0.67	0.25	212.9	101.2	0.40	0.50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바. 학력계층별 비교

앞의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학력계층별로 취업기간과 미취업기간이 일자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표 5-8>). 그러나 일자리간 및 미취업기간의 크기를 비교하면 상이한 결과가 발견된다. 즉 3번째 일자리 기간까지는 고졸 이하의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지만 이후에는 반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일자리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편 3번째 미취업기간까지는 두 그룹 간에 미취업기간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이후에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임금에서는 두 그룹 모두 일자리 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용직 비율에서는 두 학력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일자리 수가 증가하면서 고졸이하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다소 줄어들지만 대졸 이상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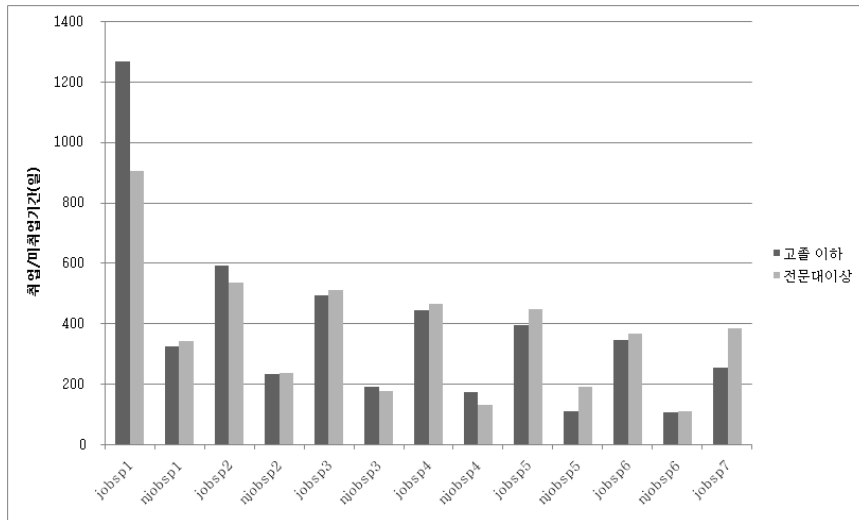
사. 연령계층별 비교

<표 5-9>은 3개 연령계층별 일자리 이행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먼저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취업기간·미취업기간이 일자리 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나, 30세 미만에서는 취업기간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임금수준을 보면, 45세 이상에서는 안정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30세 미만과 30~45세는 일자리 수 증가에 따라 임금수준이 상승하다가 6번째 또는 7번째 일자리에서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용직 비율은 30세 미만의 경우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3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이동을 통해 상용화 되는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지만, 30세 이상에서는 일자리 이동 횟수가 증대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등의 형태로 채용되는 비율이 늘어남을 보여준다. 끝으로 자발적 이직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비자발적 이

직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8〉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고졸 이하 vs 전문대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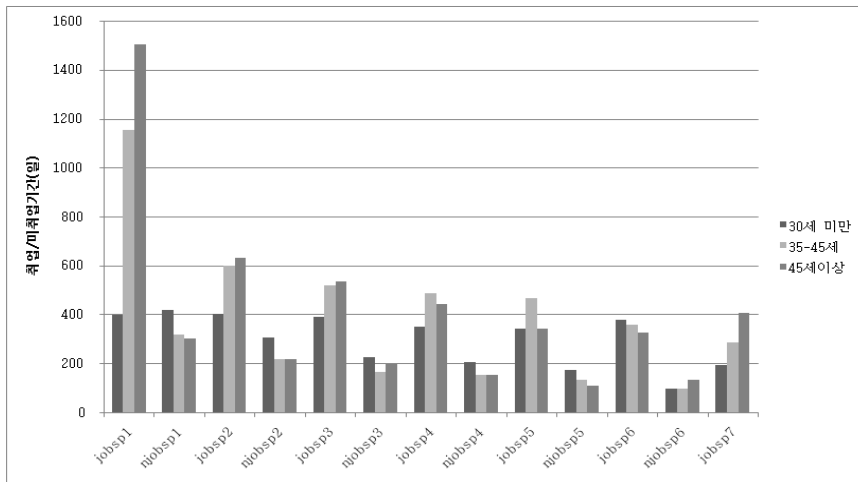
	고졸이하: N=3,390, 일자리수=2.14				전문대이상: N=2,390, 일자리수=1.83			
	기간(일)	월임금 (만원)	상용직	비자발 이직	기간(일)	월임금 (만원)	상용직	비자발 이직
jobsp1	1120.0	99.3	0.63	0.38	851.1	117.1	0.66	0.18
njobsp1	343.4				344.7			
jobsp2	576.4	97.7	0.58	0.33	533.5	122.2	0.71	0.19
njobsp2	240.5				236.9			
jobsp3	494.3	103.3	0.59	0.31	507.0	133.7	0.77	0.20
njobsp3	194.6				184.1			
jobsp4	434.6	106.1	0.57	0.30	465.5	136.1	0.75	0.19
njobsp4	183.8				136.9			
jobsp5	389.1	113.1	0.64	0.34	455.8	141.0	0.81	0.23
njobsp5	107.2				212.9			
jobsp6	351.4	121.6	0.54	0.38	389.1	159.0	0.76	0.26
njobsp6	114.1				119.1			
jobsp7	267.7	104.1	0.50	0.30	387.8	157.9	0.67	0.33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표 5-9〉 일자리이행경로 비교: 연령계층별

변수	30세미만: N=1,378, 일자리수=1.80				30-45세: N=2,617, 일자리수=2.09				45세이상: N=1,785, 일자리수=2.06			
	기간 (일)	월 임금 (만원)	상용직 (%)	비자발 이직 (%)	기간 (일)	월 임금 (만원)	상용직 (%)	비자발 이직 (%)	기간 (일)	월 임금 (만원)	상용직 (%)	비자발 이직 (%)
jobsp1	390.1	78.5	0.51	0.11	1114	118.4	0.80	0.25	1331	110.9	0.57	0.50
njobsp1	416.9				327.1				316.8			
jobsp2	403.1	88.5	0.61	0.12	593.3	120.2	0.74	0.25	622.9	100.6	0.47	0.44
njobsp2	315.7				216.8				225.5			
jobsp3	397.0	97.2	0.70	0.18	516.1	126.7	0.73	0.21	539.6	102.8	0.48	0.43
njobsp3	224.9				170.0				209.8			
jobsp4	345.6	97.9	0.77	0.15	485.6	131.5	0.70	0.26	429.7	99.3	0.41	0.34
njobsp4	210.7				166.2				153.5			
jobsp5	353.9	103.5	0.74	0.27	456.5	137.2	0.75	0.26	357.2	103.2	0.55	0.42
njobsp5	148.0				143.8				113.5			
jobsp6	395.4	91.2	0.64	0.00	359.9	152.4	0.67	0.33	345.1	110.2	0.44	0.54
njobsp6	96.3				110.9				138.6			
jobsp7	192.6	85.2	0.33	0.00	298.8	143.7	0.56	0.47	419.1	129.7	0.75	0.22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

제4절 노동력상태간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다양한 노동력 상태 사이의 이행행태가 인적 특성별 및 산업·기업 특성별로 어떻게 다르며, 또한 이행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특정 그룹의 노동력, 특히 노동시장 이행에서 배제적 위험(exclusionary risks)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먼저 취업·미취업상태로부터 탈출확률이 근로자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노동력상태간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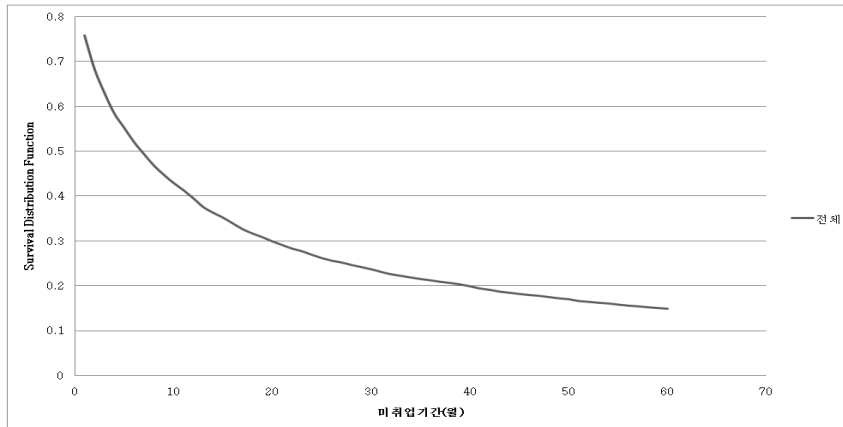
1. 미취업 탈출확률 분석

실업과 비경제활동이라는 2개의 노동력상태를 함께 포함하는 미취업상태에 머물 확률 또는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생존분석방법에는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추정방식, 모수적(parametric) 회귀분석방식, 로짓 또는 프로빗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생존확률에 대해 현재 널리 사용되는 Kaplan-Meier(KM) 모델을 사용하였다. j 시점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d_j 라고 하면, KM의 생존함수 추정치는 주어진 시점 t 에 있어서 t 와 같거나 작은 시점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의된다.

$$\hat{S}(t) = \prod_{\tilde{t}_j \leq t} \left[1 - \frac{d_j}{n_j} \right] \text{ for } t_1 \leq t \leq t_k.$$

<표 5-10>과 [그림 5-2]는 전체산업에 대한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표 5-10>에 제시된 2번째 칼럼은 생존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10개월 미취업기간에서 KM 추정치는 0.4293인데, 이는 어떤 미취업자가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미취업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확률을 의미한다. 1 마이너스 생존확률로 계산되는 3번째 칼럼은 탈출확률로서 어떤 시점 이전에 미취업상태로부터 벗어날 확률을 말한다. 4번째 칼럼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KM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며, 그린우드공식(Greenwood formula)을 통해 획득되는 추정치이다. <표 5-10>의 아래에 제시되는 미취업 탈출누적률 가운데 50번째 백분위(percentile)는 중위(median) 탈출시간으로 7개월로 추정되었다. [그림 5-2]의 곡선은 추정된 생존함수를 보여주는데, 매번의 미취업으로부터 탈출이 발생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가장 높은 우측 절단(right-censored) 기간에서 멈춘다.

[그림 5-2]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 전체산업, 임금·비임금근로자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표 5-10〉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 전체산업, 임금·비임금근로자

미취업기간(월)	생존률	실업탈출확률	Std.Error	미취업탈출자수	미취업자수
1	0.7578	0.2422	0.00462	2083	6517
2	0.6835	0.3165	0.00502	2722	5878
3	0.6306	0.3694	0.0052	3177	5423
4	0.5843	0.4157	0.00531	3575	5020
5	0.5524	0.4476	0.00536	3848	4731
6	0.5204	0.4796	0.00539	4121	4438
7	0.4939	0.5061	0.0054	4346	4193
8	0.4684	0.5316	0.00539	4560	3939
9	0.4477	0.5523	0.00538	4732	3723
10	0.4293	0.5707	0.00536	4884	3530
11	0.4131	0.5869	0.00534	5015	3343
12	0.3953	0.6047	0.00532	5157	3168
13	0.3758	0.6242	0.00528	5310	2946
14	0.3629	0.6371	0.00526	5410	2817
15	0.3521	0.6479	0.00523	5493	2690
16	0.3391	0.6609	0.0052	5591	2557
17	0.3262	0.6738	0.00517	5687	2422
18	0.3166	0.6834	0.00514	5757	2323
19	0.3084	0.6916	0.00512	5817	2239
20	0.2991	0.7009	0.00509	5883	2137
21	0.2909	0.7091	0.00506	5941	2057
22	0.283	0.717	0.00504	5996	1972
23	0.2771	0.7229	0.00501	6037	1905
24	0.2691	0.7309	0.00499	6091	1833
25	0.2619	0.7381	0.00496	6139	1748
26	0.2561	0.7439	0.00494	6177	1682
27	0.2521	0.7479	0.00492	6203	1620
28	0.2466	0.7534	0.0049	6238	1557
29	0.2419	0.7581	0.00489	6267	1490
30	0.237	0.763	0.00487	6296	1431
35	0.2152	0.7848	0.00479	6423	1204
40	0.199	0.801	0.00474	6509	1021
45	0.182	0.818	0.00469	6591	842
50	0.1703	0.8297	0.00467	6642	709
55	0.1583	0.8417	0.00467	6688	568
60	0.149	0.851	0.00468	6719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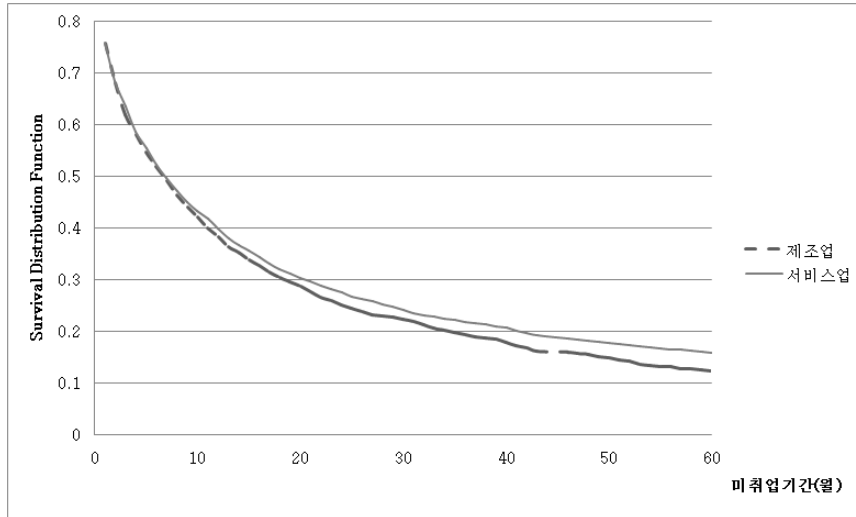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total	censored	75%	50%	25%	
전체	8600	1823	28	7	2	22.44

가. 산업간 미취업 탈출확률의 비교

이제 미취업상태로부터 이탈확률이 산업별, 직종별, 기업규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그림 5-3]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미취업 탈출확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먼저 중위 탈출누적률에서의 미취업기간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7개월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준다. 즉 실직 직전에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종사한 미취업자가 7개월 또는 그 이상 미취업상태로 머물 확률이 50%라는 것이다. 한편, 평균 미취업기간은 서비스업이 23개월로 제조업의 18.7개월에 비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지막 관측치가 우측 절단되기 때문에 평균의 추정치는 편의(biased)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두 산업부문의 생존함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미취업기간에서 서비스업의 생존확률곡선이 제조업보다 상위에 위치하는데,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어떤 시점에서 미취업상태 탈출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중위 탈출누적률 근처인 처음 7~8개월까지는 서비스업의 생존함수가 제조업보다 약간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이후 두 산업부문의 생존함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미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비스업의 미취업상태 탈출확률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생존함수의 동일여부(equality)에 대한 검정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즉, 생존기간이 긴 자료에 역점을 두는 Log-Rank 검정에서는 5% 수준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생존함수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만, 생존기간이 짧은 자료에 역점을 두는 Wilcoxon rank 검정에서는 유의확률의 값이 0.256으로 두 산업부문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못하다.

[그림 5-3]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제조업 vs 서비스업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서비스업	6664	1463	29	7	2	23.03	5.28	1.29	13.63
제조업	1901	356	25	7	2	18.69	(<0.021)	(<0.256)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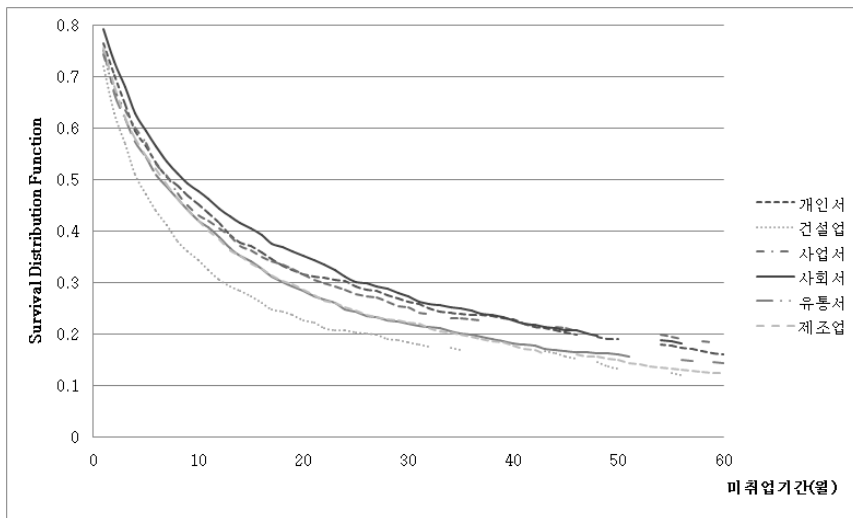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다음으로 산업을 세분화하여 전체산업을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6개 산업으로 구분,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을 비교하였다([그림 5-4]). 미취업기간에 따라 생존함수의 수준은 미취업기간에 따라 변하지만 대체로 건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 비교하면([그림 5-5]),

거의 모든 미취업기간에서 거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실제로 생존함수 동일여부(equality)에 대한 모든 검정통계량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생존함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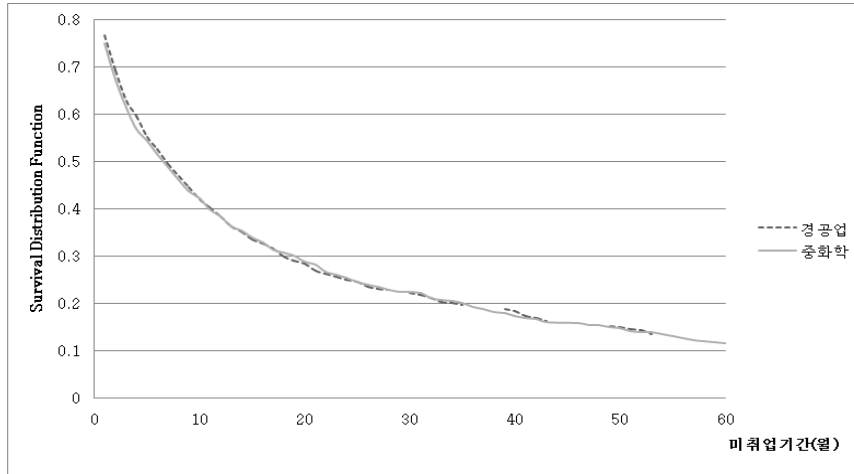
[그림 5-4]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6개 산업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제조업	1901	356	25	7	2	18.69	46.46 (<0.001)	45.28 (<0.001)	107.87 (<0.001)
건설업	770	135	17	5	1	17.49			
사업서비스	1011	247	31	8	1	22.45			
사회서비스	1366	320	35	9	2	25.53			
유통서비스	1925	386	24	7	2	20.5			
개인서비스	1623	378	23	8	2	21.69			

자료 :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그림 5-5]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경공업 vs 중화학공업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경공업	781	140	24	7	2	18.51	0.22 (0.632)	0.28 (0.595)	1.96 (0.161)
중화학공업	1120	216	25	7	1.5	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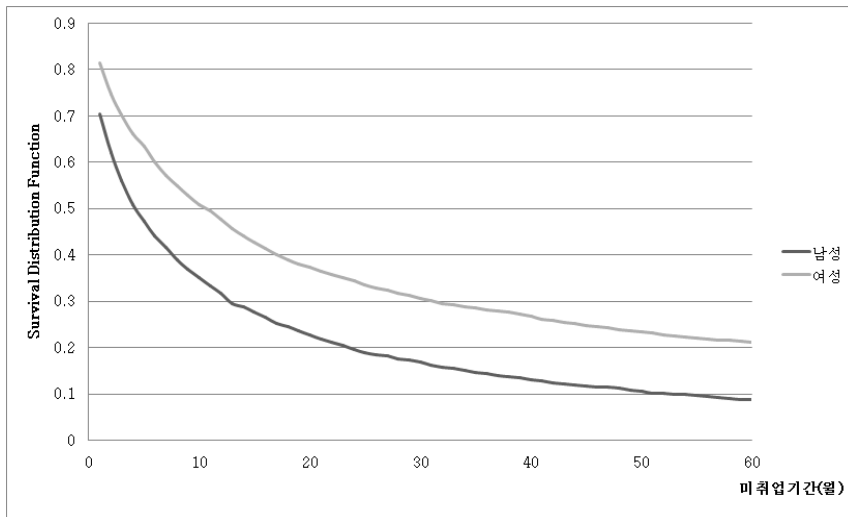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나. 근로자 특성별 미취업 탈출확률의 비교

여기서는 성, 연령, 학력, 직종, 비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근로자 특성별로 미취업상태로부터 탈출할 확률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성별로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그림 5-6]), 예상한 대로 여성의 미취업 생존함수는 모든 미취업 시점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위쪽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도 미취업상태 생존함수의 구조가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5-7]). 30~45세 중년층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4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0개월보다 짧은 미취업기간에서는 미취업 탈출 가능성이 청년층보다 다소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생존함수가 가장 위쪽에 위치하여 미취업상태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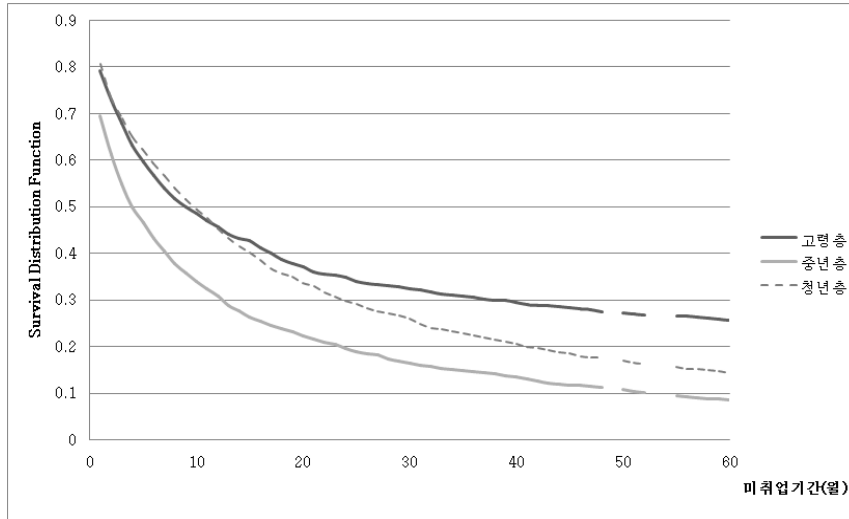
[그림 5-6]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남성 vs 여성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남성	4294	643	18	5	1	15.85	328.87	298.97	669.91
여성	4306	1180	45	11	2	28.44	(<0.0001)	(<0.0001)	(<0.0001)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그림 5-7]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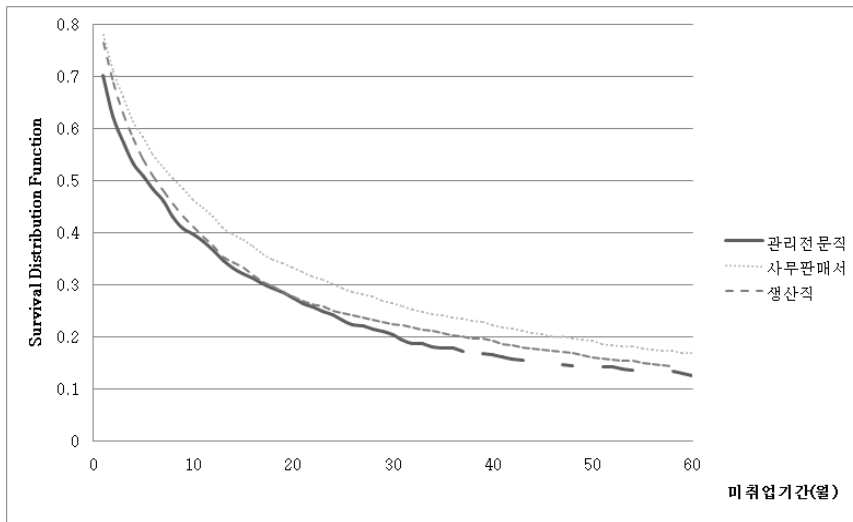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고령층	2204	669	70	9	2	28.03	285.83 (<0.0001)	249.50 (<0.0001)	548.26 (<0.0001)
중년층	3442	487	17	4	1	16.07			
청년층	2954	667	31	10	2	22.79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다음으로 직종별로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그림 5-8]). 여기서는 미취업자가 실직 직전에 종사하였던 기업에서의 직종에 따라 표본근로자를 임원관리·전문가·준전문가, 사무·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등 3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직종별 생존함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임원관리·전문가·준전문가 직종이 가장 아래쪽에, 사무·판매·서비스직이 가장 위쪽에, 그리고 생산직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시점에서 임원관리·전문가·준전문가 직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사무·판매·서비스직은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여

기서 사무·판매·서비스직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생산직보다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앞서 보았듯이 서비스업의 미취업상태 탈출확률이 제조업에 비해 낮다는 사실([그림 5-3])과 부합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일단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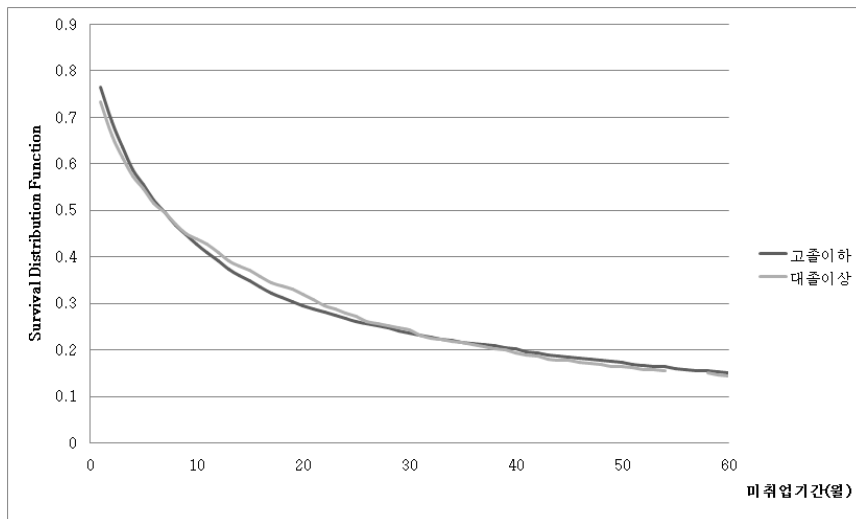
[그림 5-8]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직종간 비교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관리전문직	1657	314	23	6	1	17.97	34.22 (0.001)	42.95 (0.001)	65.09 (0.001)
사무판매서	3568	828	33	9	2	24.36			
생산직	3361	678	24	7	2	19.12			

한편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사이에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에서 거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그림 5-9]에서 보듯이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미취업 생존함수는 매우 유사하며, 제시된 검정통계량 또한 두개의 학력수준별 생존함수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5-9]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고졸이하 vs 대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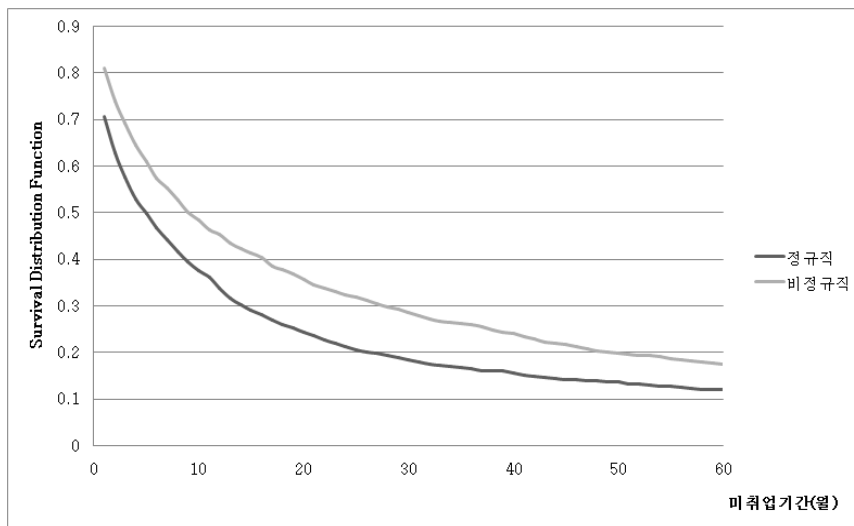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고졸이하	6730	1414	28	7	2	21.35	0.024	0.577	1.059
대졸이상	1870	409	29	7	1	22.22	(<0.8769)	(<0.4471)	(<0.3034)

다음으로 미취업 직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즉 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미취업 탈출확률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5-10]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을 경험한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경험한 근로자집단 사이에는 미취업 생존함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비정규직 경험 근로자집단의 생존함수는 정규직 경험의 근로자 집단의 그것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정규직 경험 근로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경험 근로자들이 실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 탐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미취업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소위 '비정규직 함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5-10]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비정규직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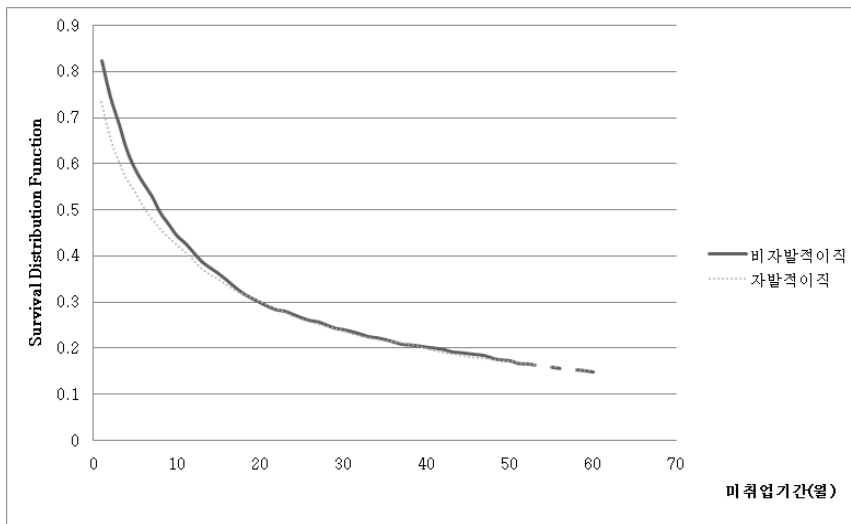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정규직	3452	589	20	5	1	17.54	100.30	117.86	156.05
비정규직	2550	687	38	10	2	26.02	(<0.0001)	(<0.0001)	(<0.0001)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 또한 근로자의 미취업 탈출확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5-11]에서 보듯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들은 특히 20개월보다 짧은 미취업기간에 있어서

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탐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취업기간이 20개월을 넘어 장기화되면 비자발적 및 자발적 이직 경험 사이에 미취업 탈출확률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5-11]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이직사유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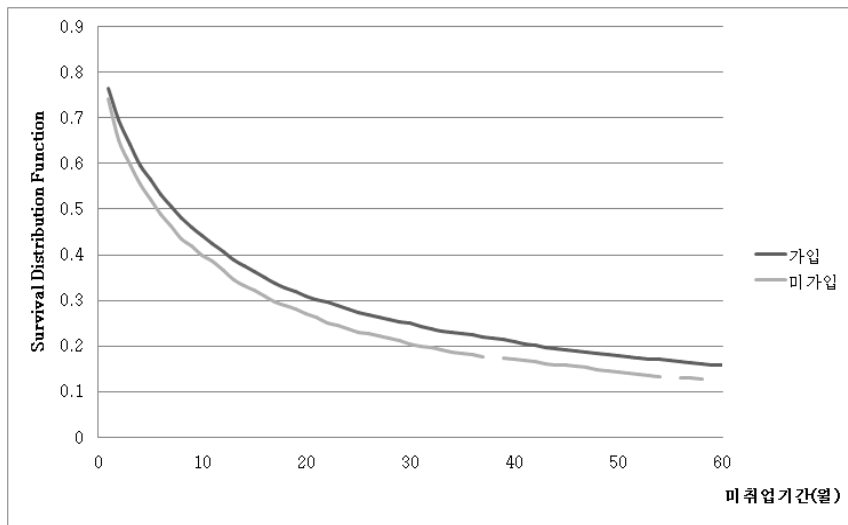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비자발적 이직	2451	524	28	8	2	21.25	5.46 (0.02)	27.24 (0.001)	7.71 (0.006)
자발적 이직	6146	1299	28	7	1	22.2			

끝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의 미취업탈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5-12]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들은 미가입자에 비해 모든 미취업기간에 걸쳐서 미취업 탈출확률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실직근로자들이 고용보험사업에서 제공되는 실업급여, 고용지원·직업능력개발서비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풀이된다.

[그림 5-12]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고용보험 가입여부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가입	6345	1345	30	80	2	23.28	19.39	17.35	94.55
미가입	2255	478	22	6	1	17.94	(<0.0001)	(<0.0001)	(<0.0001)

2. 일자리 탈출확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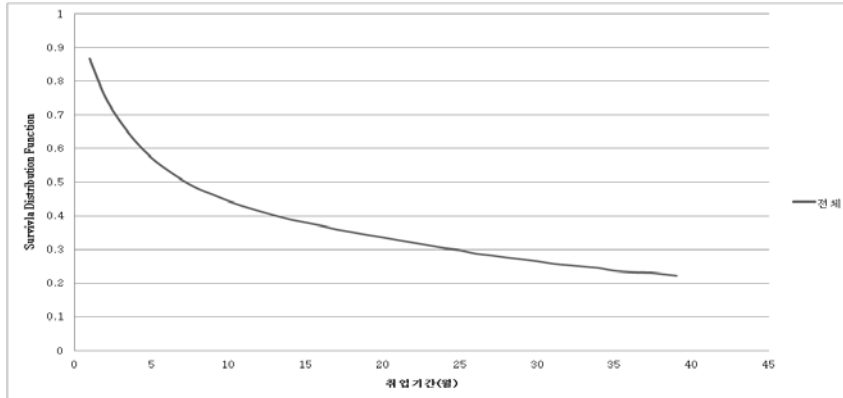
오늘날 근로자들이 하나의 평생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드문 현상이며, 생애에 걸쳐 수많은 노동력 상태, 즉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을 교대로 경험하게 된다. 세계화 진전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의 강화, 그리고 개인적 삶을 추구하려는 개인들의 욕구 증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행위는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이탈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 이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보다 나은 직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업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실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의 인적 특성이나 근무하는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를 이탈하는 행태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취업→실업·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 즉 일자리 이탈의 양상과 정도가 근로자 특성별로, 그리고 기업·산업의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떠한 근로자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 이탈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취업상태에 계속 머물 확률 또는 취업상태에서 이탈할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앞서 설명하였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그림 5-13]은 임금·비임금근로를 포함하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함수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어떤 취업기간 시점에서 생존함수곡선을 따라 부여되는 값은 어떤 취업자가 해당 취업기간 동안 계속해서 취업상태로 남게 될 확률, 즉 생존확률을 의미한다. 1 마이너스 생존확률로 계산되는 취업 이탈확률은 어떤 시점 이전에 취업상태로부터 벗어날 확률을 말한다.

[그림 5-13]의 아래 부분에 제시되었듯이 취업탈출누적률 가운데 50번째 백분위인 중위(median) 탈출시간은 7.3개월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취업기간은 5.33개월로 나타났다.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는 16,572개이며, 이 가운데 7,242개(43.7%)는 분석기간의 마지막 시점까지 계속 진행중인 취업기간, 즉 우측에서 절단된(right-censored) 관측치이다. 이하에서는 취업상태로부터 이탈확률이 산업별, 직종별, 근로자특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5-13]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 전체산업, 임금·비임금근로자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total	censored	75%	50%	25%	
전체	16,572	7,242	32.5	7.3	2.2	5.33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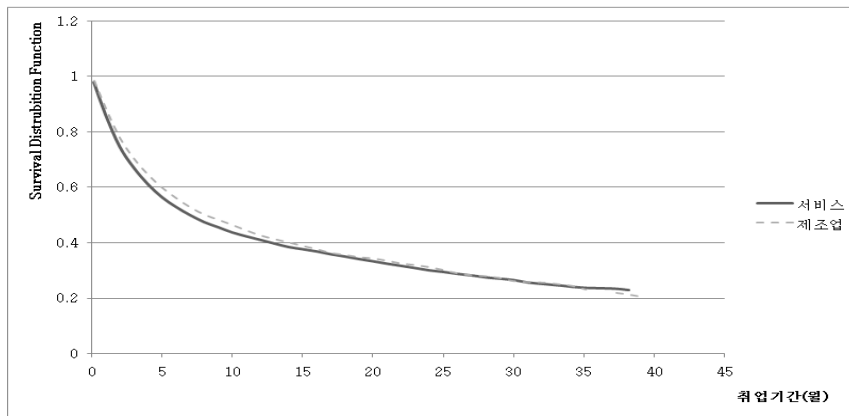
가. 산업간 취업 탈출확률의 비교

[그림 5-14]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취업탈출확률 또는 실업확률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먼저 중위 탈출누적률에서의 취업기간은 서비스업이 7개월, 제조업이 8.16개월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1.16개월 정도 오래 취업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평균 취업기간은 제조업이 5.69개월, 서비스업이 4.91개월로 제조업이 0.8개월 정도 더 길다.

추정된 생존함수를 살펴보면([그림 5-14]), 대체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위쪽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두 생존함수의 동일여부에 대한 검정결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존함수가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에

종사할수록 취업탈출이 작아지는 반면, 서비스업에 종사할수록 취업탈출 확률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처음 취업기간부터 약 17개월까지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위쪽에 있다가 이후로는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어간다. 이는 취업기간 17개월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탈출확률의 차이가 작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5-14]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 비교: 서비스업 vs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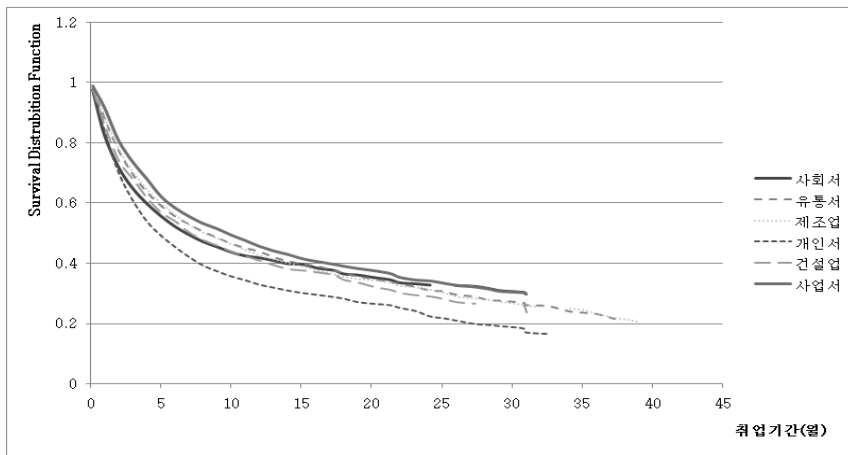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서비스	12889	5646	32.3	7	2	4.91	6.41 (0.011)	14.23 (0.0002)	20.93 (0.001)
제조업	3627	1577	33.5	8.16	2.5	5.69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그림 5-15]에서는 전체산업을 6개 산업으로 세분하여 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률을 비교하였다. 취업기간에 따라 생존함수의 수준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제조업이 위쪽에 위치하며,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건설업은 아래쪽에 위치한다. 생존함수 동일여부에 대한 검정은 산업별 생존함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등 위쪽에 위치하는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취업탈출확률

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취업탈출확률이 가장 낮 으며, 개인서비스업은 취업탈출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5]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산업간 비교: 6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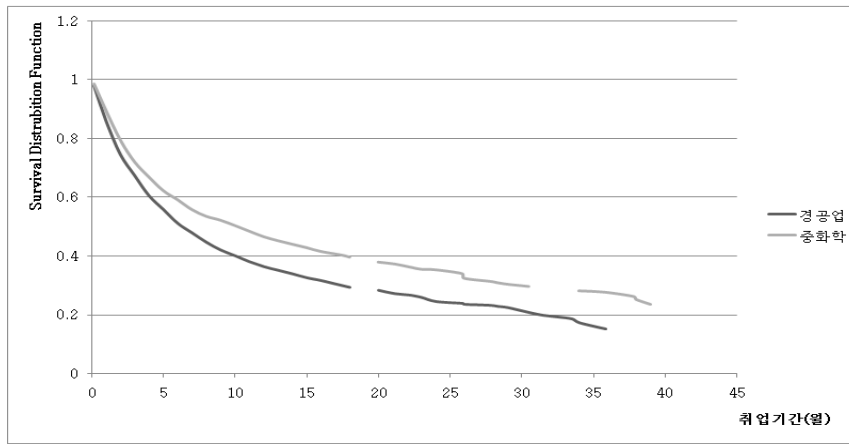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개인서비스	2839	1065	22.8	4.8	1.6	33.5 (0.001)	154.3 (0.001)	206.4 (0.001)	
건설업	1458	636	30.6	7.1	2				
사업서비스	2151	1061	.	9.66	2.83				
사회서비스	2705	1209	.	6.83	1.83				
유통서비스	3786	1692	32.5	8.1	2.3				
제조업	3627	1577	33.5	8.1	2.5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다음으로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그림 5-16]), 중위 탈출누적률에서 취업기간은 중화학공업이 10.3개월로 경공업(6.5개월)보다 훨씬 크게 추정되었다. 또한 모든 취업기간에서 중화학공업의 생존함수가 경공업보다 위쪽에 위치하여 중화학공업이 경공업보다 취업탈출확률이 작음을 보여준다. 또한 취업기간이 늘어날수록 두 산업간 생존함수의 차이가 벌어져 취업탈출확률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16]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경공업 vs 중화학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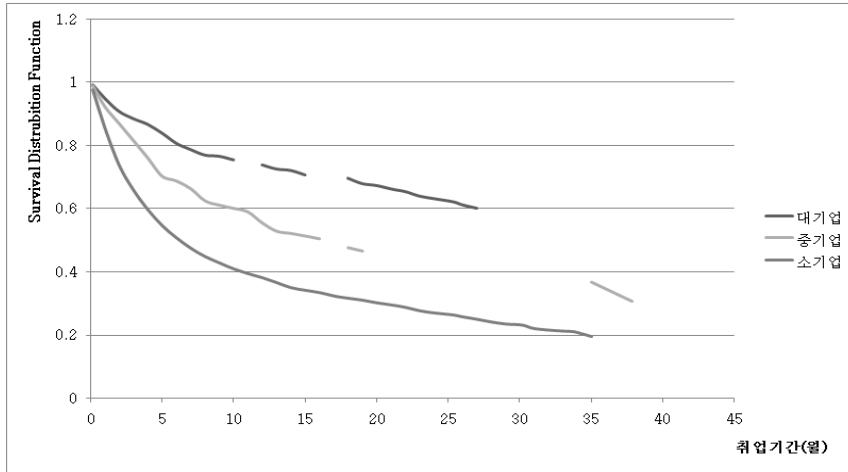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경공업	1334	486	23.8	6.5	2	3.34	35.2 (0.001)	26.6 (0.001)	45.8 (0.001)
중화학공업	2293	1091	39.6	10.3	2.6	7.08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끝으로 기업규모별로 생존함수곡선을 비교해 보면([그림 5-17]),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순으로 위쪽에 위치하며, 취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업규모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근로자들이 취업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그림 5-17]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대기업	376	264	.	.	10.33	6.59	188.1 (0.001)	159.0 (0.001)	405.0 (0.001)
소기업	6845	2942	27	6.3	2				
중기업	350	209	.	16.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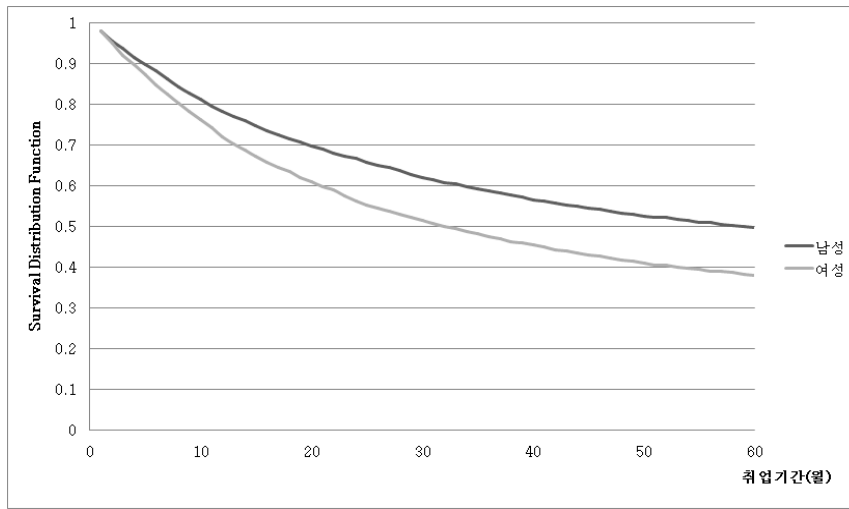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나. 근로자 특성별 미취업 탈출확률의 비교

성, 연령, 학력, 직종, 비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근로자 특성별로 취업상태에서 실업으로 이탈할 확률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성별로 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그림 5-18]), 여성의 취업 생존함수가 모든 취업시점에서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며,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중위 탈출누적률에서의 취업기간 또한 남성이 여성의 2배정도 훨씬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여성의 경우 남

성에 비해 취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림 5-18]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남성 vs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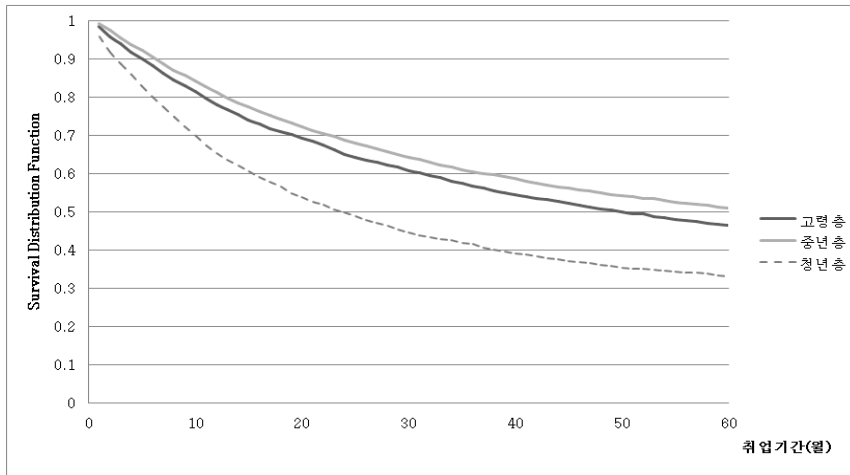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남성	8977	4312	.	59	15	103.96	251.0 (<0.0001)	1193.7 (<0.0001)	431.8 (<0.0001)
여성	7595	2930	130	32	11	75.60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다음으로 연령계층을 청년층(30세 미만), 중년층(30~45세), 고령층(45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그림 5-19]에 따르면, 중위 탈출누적률에서의 취업기간은 중년층(64개월), 고령층(50개월), 청년층(24개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서는 평균 취업기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령계층별 생존 함수를 비교하면, 모든 취업기간에서 중년층이 가장 위쪽에 있고 고령층, 청년층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취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령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나머지 두 연령계층에

비해 생존함수 수준이 매우 낮는데, 이는 청년층의 경우 취업탈출확률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생존함수 구조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빈번하게 일자리 이동을 하면서 직업 탐색활동을 수행하는 청년층 노동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19]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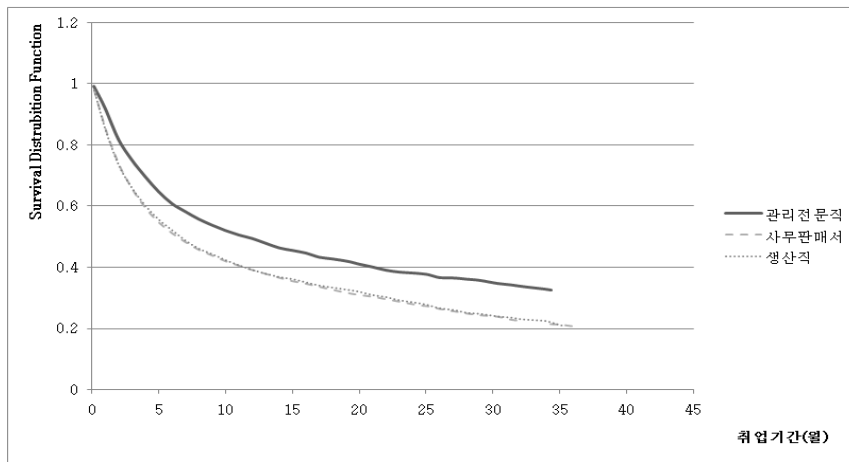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고령층	4209	1822	161	50	15	88.80	513.28 (<0.0001)	612.93 (<0.0001)	894.63 (<0.0001)
중년층	7114	3440	.	64	18	106.83			
청년층	5249	1980	126	24	8	65.25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한편 직종별 생존함수를 보면([그림 5-20]), 관리·전문직이 가장 위쪽에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사무·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은 매우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관리전문직이 사무·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 비

해 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가장 낮으며, 나머지 두 직종은 취업탈출확률이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림 5-20]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직종간 비교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관리전문직	3766	1965	.	11.66	3	7.89	145.5 (<0.001)	158.5 (<0.001)	186.2 (<0.001)
사무판매	6589	2704	28.16	6.33	2	4.09			
생산직	6201	2572	28.5	6.66	1.83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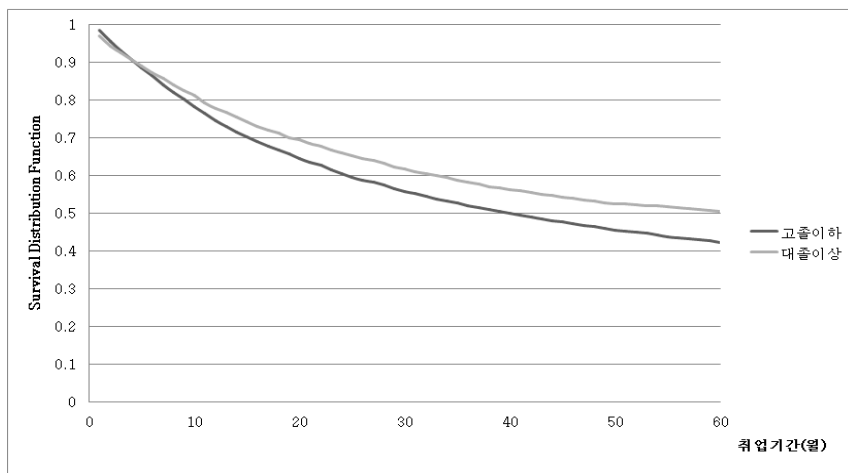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학력별 생존함수를 보면([그림 5-21]), 처음 약 5개월까지의 취업기간에는 고졸이하가 위쪽에 위치하나 전반적으로 대졸이상이 위쪽에 위치하며,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의 취업탈출확률이 저학력자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 보면([그림 5-22]), 중위 탈출누적률에서의 취업기간은 정규직이 54개월로 비정규직(20개월)의 2.7배에 달하며, 평균 취업기간도 정규직(100개월)은 비정규직(51.9개월)의 거의 2배 정도 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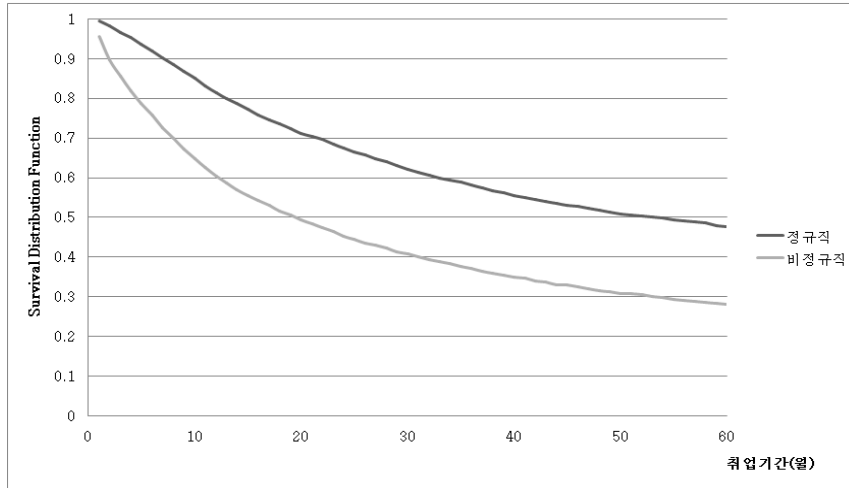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생존함수는 모든 취업기간에서 정규직에 비해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여 정규직에 비해 취업탈출확률이 매우 높을 것임을 보여 준다.

[그림 5-21]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고졸이하 vs 대졸이상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고졸이하	12402	5122	165	40	12	86.28	90.87 (<0.0001)	46.32 (<0.0001)	139.61 (<0.0001)
대졸이상	4167	2117	.	61	15	98.71			

[그림 5-22] 취업 이탈확률 및 생존률의 비교: 정규직 vs 비정규직



	observations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정규직	6943	3253	238	54	17	100.15	674.37	802.38	1106.18
비정규직	4241	1451	73	20	7	51.94	(<0.0001)	(<0.0001)	(<0.0001)

3. 미취업·취업기간의 결정요인 분석

가. 생존기간 분석모형

한 개인이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생존기간 (T)을 $T = \exp(x\beta) T_0^\sigma$ 로 모형화 하고, 이를 다시 로그 형식으로 전환하면 $\log T = x\beta + \sigma \log T_0$ 로 표현할 수 있다.

$$T = \exp(x\beta) T_0^\sigma \Rightarrow \log T = x\beta + \sigma \log T_0$$

여기서 σ 는 scale parameter이며, x 는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벡터이다. 위 식에서 $y = \log T$, $\varepsilon = \log T_0$ 로 정의하면, 위 모형은 통상적인 선형회귀분석모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분석 표본에 속하는 i th 개인에 대해 위의 추정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log T_i = \beta_0 + \beta_1 x_{i1} + \dots + \beta_k x_{ik} + \sigma \varepsilon_i$$

여기서 교란항 ε_i 의 분포를 결정하면 우리는 생존기간을 분석할 수 있는 모수적(parametric) 모형을 얻을 수 있다. 교란항(ε_i)의 분포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T 의 분포는 Weibull, exponential, gamma, log-logistic, log-normal 분포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¹⁷⁾

생존기간 관련 자료는 보통 절단된(censored) 관측치를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OLS 추정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절단된 자료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ibull 모형을 중심으로 취업·미취업의 생존기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Weibull 모형은 exponential 모형을 기본적으로 유사하고 다소 수정한 것이지만,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Allison, 1995). 특히 Weibull 모형에서는 교란항이 표준적인 extreme value 분포를 하지만, scale 계수, $\sigma=1$ 이라는 가정을 완화한다. $\sigma>1$ 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7) 다양한 ε 의 분포에 상응하는 T 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treme value(2 parameter) → Weibull 분포, extreme value(1 parameter) → exponential 분포, log-gamma → gamma 분포, logistic → log-logistic 분포, normal → log-normal 분포.

해저드함수(hazard)가 감소하며, $0.5 < \sigma < 1$ 이면 해저드함수는 감소하는 속도로 증가한다. $\sigma = 0.5$ 이면 해저드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며, $0 < \sigma < 0.5$ 이면 해저드함수는 증가하는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Weibull 모형은 두 가지 이유로 생존기간에 대한 모수적 추정모형으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다(Allison, 1995). 먼저 이 모델은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생존함수(survivor function)를 가지고 있다.

$$S_i(t) = \exp\left\{-\left(t_i e^{-\beta x_i}\right)^{1/\sigma}\right\}$$

둘째, 이 모형은 비례적 해저드(proportional hazard) 모형으로 추정된 계수 값을 적절히 변형하면 상대적 해저드비율(relative hazard ratio)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Weibull 모형에서는 해저드모형(in log-form), 즉 $\log h(t) = \alpha \log t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과 생존기간모형(in log-form), $\log T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 \sigma \varepsilon$ 사이에 정확한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모수 값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beta_j^* = \frac{-\beta_j}{\sigma} \text{ for } j = 0, \dots, k. \text{ 그리고 } \alpha = \frac{1}{\sigma} - 1.$$

나. 미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표 5-11>은 Weibull 모형을 이용하여 미취업기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미취업기간(개월)이며, 설명변수로는 연령, 성, 학력, 정규직 여부, 고용보험가입 여부, 비자발적 이직

여부, 종사상 지위, 직종, 산업, 월임금 등을 포함한다. 연령은 미취업시점의 연령이고, 월임금은 실질 직전의 직장의 실질임금으로 측정되었다. 정규직 여부, 고용보험가입 여부, 비자발적 이직 여부, 종사상 지위, 직종, 산업 등의 설명변수는 미취업 직전의 직장에서의 정보로서, 모두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먼저 근로자의 인적 특성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자. 연령 변수의 경우 음(-)의 계수 값을 나타내어 연령이 많을수록 미취업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연령제곱의 계수 값은 예상대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연령에 대한 미취업기간 곡선이 U자형 형태를 가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청년층은 중간이며 고령층이 가장 낮게 추정된 앞의 생존함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 성 더미변수(남성=1)는 음의 계수 값을 보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취업기간이 적음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앞의 취업이탈확률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학력 더미(전문대이상=1)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간 미취업기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미취업 탈출확률 분석에서 고졸이상과 대졸이상 근로자 사이에 생존함수의 차이가 없었던 것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있었던 사람의 경우 비정규직 경험자보다 미취업기간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일단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되면 이후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상향이동하기가 어려워 미취업기간이 길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유사하게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비해 미취업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한 미취업기간이 낮아지는데, 이는 실직 후에 고용보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업탈출이 보다 쉬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1〉 미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산업

변수	전체산업 종속변수: ln미취업기간, n=6083			제조업(임금근로자) 종속변수: ln미취업기간, n=1439		
	추정치	표준오차	Pr> χ^2	추정치	표준오차	Pr> χ^2
상수항	3.7843	0.1649	<.0001	3.6803	0.3609	<.0001
연령	-0.0675	0.009	<.0001	-0.0489	0.02	0.0146
연령제곱	0.0008	0.0001	<.0001	0.0005	0.0003	0.0517
남자=1	-0.2194	0.0344	<.0001	-0.1308	0.0741	0.0774
전문대이상=1	0.0534	0.0421	0.2044	0.1281	0.1021	0.2097
정규직=1	-0.1729	0.0418	<.0001	-0.182	0.069	0.0083
고용보험=1	-0.0861	0.0382	0.0244	-0.0552	0.0677	0.4149
비자발 이직=1	0.1621	0.0361	<.0001	0.1101	0.0719	0.1253
관리·전문직=1	-0.0774	0.0449	0.0848	-0.1792	0.1209	0.1381
생산직=1	-0.0959	0.0419	0.0223	-0.0864	0.0996	0.3856
제조업=1	0.16	0.0398	<.0001	0.0808	0.0665	0.2243
월실질임금	-0.0014	0.0002	<.0001	-0.0028	0.0006	<.0001
Scale	1.1807	0.0112		1.1778	0.0231	
Weibull Shape	0.8469	0.0081		0.8491	0.0167	
	Log Likelihood=-10255.6			Log Likelihood=-2425.05		

주: 제조업의 경우 산업더미는 경공업=1임.

자료: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직종별로는 관리직·전문가 직종과 생산직종의 경우 음의 값을 보여주는 데, 이는 이들 직종이 사무판매서비스 직종에 비해 미취업기간이 적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의 미취업 탈출확률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더미계수가 양의 값을 보여주어 서비스산업에 비해 미취업기간이 길게 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서비스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생존함수 분석결과와

는 다르다. 이러한 상충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월임금은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전 직장에서 고임금을 받은 근로자일수록 미취업기간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제조업의 미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변수에 있어서 계수 값의 부호는 전체산업의 추정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성 더미, 정규직 더미, 월실질임금을 제외한 변수들의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양의 부호를 지나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제시된 미취업 탈출확률 분석에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존함수가 다르지 않다는 결과와 부합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년층, 남성, 정규직 경험, 고용보험 가입, 자발적 이직, 관리전문직 및 생산직, 서비스업, 고임금 등의 특성을 갖는 근로자들이 미취업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고령층, 여성, 비정규직 경험, 고용보험 미가입, 비자발적 이직, 사무·판매·서비스직, 제조업,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다음으로 전체산업의 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표 5-10>), 연령의 경우 양(+의 계수 값을 가지며 연령제곱은 음(-)의 값을 나타내어 연령에 대한 취업기간 곡선은 역U자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연령이 중년층에 도달하기까지는 연령 증가에 따라 취업기간이 늘어나지만 이후 고령층으로 갈수록 취업기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의 취업탈출확률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고령층, 청년층 순으로 뒤를 잇는 생존함수 분석의 결과와 부합한다. 그러나 성 더미와 학력

더미의 경우 앞의 생존함수 분석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성 더미의 경우 계수 값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앞의 생존함수 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 탈출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더미 변수의 경우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전문대졸 이상자가 고졸이하에 비해 취업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생존함수 분석결과와는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취업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생존함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직종별로는 관리직·전문가 직종의 경우 여타 직종에 비해 취업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의 계수 값은 전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생존함수 분석결과와 대체로 부합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기간이 긴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또한 생존함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노동조합 존재의 효과를 보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취업기간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구성원의 고용안정성 확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월임금은 유의미한 양의 계수 값으로 추정되어 임금이 높을수록 취업기간이 길게 됨을 보여준다.

제조업 임금근로자에 대한 취업기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5-12>), 대체로 전체산업과 유사하지만 일부 설명변수의 경우 추정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정규직, 생산직 더미, 월임금, 노조 변수의 경우, 추정치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산업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성 더미의 경우 양(+)의 계수 값을 가지지만 유의미하지 않으며, 관리전문직 더미는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져 전체산업 분석결과와는 다르다. 산업더미 추정 결과를 보면, 경공업이 중화학공업에 비해 취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생존함수 분석결과와 부합한다.

〈표 5-12〉 취업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산업

변수	전체산업 종속변수: ln취업기간, n=6085			제조업(임금근로자) 종속변수: ln취업기간, n=1439		
	추정치	표준오차	Pr> χ^2	추정치	표준오차	Pr> χ^2
상수항	0.0937	0.13	0.4714	-1.7174	0.2988	<.0001
연령	0.1074	0.0071	<.0001	0.1251	0.0167	<.0001
연령제곱	-0.0011	0.0001	<.0001	-0.0013	0.0002	<.0001
남자=1	-0.0002	0.0284	0.9954	0.0396	0.0615	0.5194
전문대이상=1	-0.0981	0.0338	0.0037	-0.2454	0.0837	0.0034
정규직=1	0.1976	0.0321	<.0001	0.3555	0.054	<.0001
관리·전문직=1	0.088	0.0361	0.0147	-0.2228	0.0995	0.0252
생산직=1	-0.0074	0.034	0.8268	-0.1287	0.0821	0.117
제조업=1	0.0793	0.0317	0.0123	-0.066	0.0526	0.2097
월실질임금	0.0025	0.0002	<.0001	0.0036	0.0006	<.0001
노조=1	0.3627	0.0508	<.0001	0.3281	0.0847	0.0001
Scale	0.9409	0.009		0.9539	0.0189	
Weibull Shape	1.0628	0.0102		1.0483	0.0208	
Log Likelihood=-8962.21			Log Likelihood=-2145.91			

주: 제조업의 경우 산업더미는 경공업=1임.

자료: 자료: KLIPS(1~9차) 직업력을 사용하여 추정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년층, 고졸 이하, 정규직, 고임금, 제조업, 노조가입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긴 취업기간을 가지는 반면, 청년층·고령층, 전문대졸 이상, 비정규직, 서비스업, 비노조,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취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직종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제5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다양한 노동력 상태 사이의 이행행태가 산업·기업 특성별로, 그리고 인적 특성별로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이행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히, 노동시장 이행에서 배제적 위험(exclusionary risks)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이들 근로자계층의 노동시장이행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산업별 및 근로자집단별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취업·미취업상태로부터 탈출확률이 산업별 및 근로자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노동력 상태간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획득된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별로 취업·미취업간 이행행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미취업기간과 취업기간이 공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빈번한 노동시장 이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을 보다 세분하면, 대체로 건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함께 서비스업 종사인력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중년층,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은 짧고 취업기간이 길게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 및 정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

치에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고령층,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은 길고 취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의 위험이 가장 큰 근로자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를 비롯한 이들 근로자집단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들을 파악·제거하여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정책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고 미취업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등 취업으로의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여성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취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넷째, 직종별로는 사무·판매·서비스직이 관리·전문직이나 생산직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고 취업 생존확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행이 빈번하고 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문제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무·판매·서비스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저성장·저고용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고용구조, 고용의 질, 근로소득 분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문별·계층별 이동성 또한 약화되어 왔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집약되는 노동시장·고용 위기는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 사회보장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문제들이 상호작용하여 초래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시장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서 세계화, 산업구조 변화, 기술특성 변화 등 경제적 요인과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이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 분배구조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학제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들 가운데 경제·산업부문의 구조 변화라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 유연화가 고용구조, 고용의 질, 근로소득 분배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이행의 내용 및 질적 수준에서 근로자집단 및 산업 간에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행된 주요 분석결과와 그 정책적 함의를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의 변동과 고용의 불균등구조

노동시장 전반에 있어 양극화의 추이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면에는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동과 불균등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 질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문제 실상을 산업별로 분해해보면, 각 산업부문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양극화구조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고용 질의 농림어업·건설업·개인서비스부문과 좋은 일자리 질의 제조업·사회서비스·생산자서비스부문간의 격차·간극이 뚜렷하게 고착화됨으로써 노동시장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이러한 산업간 불균등구조가 내재하고 있다는 현실 분석에 의거하여 노동시장의 총량적 정책처방보다는 산업별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의 산업부문을 유지·확산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일자리의 산업부문에서 고용조건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요망되는 것이다.

우선, 산업별 고용구조와 고용 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고용규모·비중이 생산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질 유지·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공동화 및 해외생산기지 이전을 제어하고 생산거점 투자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협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제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행 장시간 생산체제에서 탈피하여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적

극 유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고용구조는 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양극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세부부문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통상, 탈산업화, 즉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산업의 고용 증대를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지난 1990년대 이래 서비스산업 내부에서 특히 유통서비스부문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생산자서비스의 고임금부문과 개인서비스의 저임금부문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노동양극화에 일정하게 기여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임금·고부가가치의 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부문은 해당 서비스의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부문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과 투자 비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망되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 증대에 못지않게 양질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고려하여(물론,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방식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특히 교육·보건복지·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통적인 저임금·저부가가치의 개인서비스·유통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사업부문의 규모 확대와 경영방식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토록 함과 동시에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회보험 미가입 등 탈법·편법 노무관리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법정고용조건 강제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저부가가치부문(유통·개인서비스)의 산업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들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실직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고임금 산업부문으로의 상향 전직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산업별 임금 불평등도와 임금불평등 분해

2005년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임금불평등을 산업별로 분해하고 또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임금불평등을 분해하여 임금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 임금 격차는 대단히 커서 사회서비스업의 월평균임금은 농업과 개인서비스업 월평균임금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전체 불평등을 산업간 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으로 분해한 결과, 산업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낮은 반면 산업내 불평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한 임금불평등 분해 결과는 근속년수와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가 전체 불평등의 절반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별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적자본과 노동시간 대한 보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령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노조 프리미엄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와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불평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산업간 불평등보다 산업내 불평등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내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차 산업에서 산업내 불평등이 크지만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내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근속년수와 고용형태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근로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근속년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하게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이야말로 임금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셋째, 전체 불평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내 불평등 가운데서 성차별에 따른 불평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불평등을 낳고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보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이루어지지만,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보상은 남성에서 높게 이루어져 성차별적인 보상체계의 속성을 보여준다. 연령이나 성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요소들이기 때문에 연령과 성에 따른 보상의 차이는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업,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 등 성차별이 심한 산업에서 성차별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양성평등정책이 전체 근로자 임금불평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확대와 소득불평등

현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탈산업화 경향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서비스산업 확대에 표현되는 탈산업화 경향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별 고용구조변화를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차이, 서비스업 내부구성 및 고용형태의 국가별 차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산업부문·고용형태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의 소득은 산업별 고용구조·사업체규모·종사상 지위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탈산업화의 소득불평등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요인들의 효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산업을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부문·고용형태·기업규모에 의한 소득불평등 효과를 분해하여 파악하였다.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서비스산업의 내부구성, 서비스산업의 고용형태별 규모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단계 작업으로 불평등 분해를 시도하였다. 1단계는 전체 불평등을 산업간 불평등과 산업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는 작업이며, 2단계는 산업을 기업규모 혹은 고용형태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산업내 불평등을 이러한 하위집단간 불평등과 하위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는 작업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8-2005년의 소득불평등은 산업간 차이보다는 산업내 기업규모·고용형태별 차이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간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탈산업화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영세사업체 혹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할 경우에 소득불평등은 더욱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교차시킨 20개의 하위집단으로 각 산업별 임금근로자들을 구분하고 산업내 총 소득불평등을 이들 하위집단간·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한 결과를 보면, 총소득불평등은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내 불평등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만,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간 불평등도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산업간 불평등이 총불평등의 5%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반하여,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의 고용형태간 불평등은 30% 이상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 요인의 설명력도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부의 총 소득불평등 가운데 20개 하위

집단간의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4%에서 2005년 36%로, 서비스업에서는 26%(1998년)에서 35%(2005년)로 증가하였다. 동일산업·기업규모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내 불평등은 200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용형태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전통성과 영세성이 여전히 높은 특징을 나타내며, 생산자서비스부문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영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및 규모별 고용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체는 여전히 많은 파트타임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금융, 의료, 정보관련 산업 사업체들도 노동유연화에 기초한 인력채용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업 내부의 산업부문간 소득격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 내부적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이질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각 산업내부의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소득격차가 증가함으로써, 산업내 소득이질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 증가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탈산업화 경향 자체보다는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산업의 영세성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표현되는 한국 서비스산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법률·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보건·교육·복지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업을 확대하는 정책도 정부의 일자리 확대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취업자로 채워진다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당사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적절한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 논문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취업↔미취업 이행에서의 격차: 산업간·근로자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노동력 상태 사이의 이행행태가 산업·기업 특성별로, 인적 특성별로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이행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특히, 노동시장 이행에서 배제적 위험(exclusionary risks)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이행 원활화를 지원하는 공공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획득된 주요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별로 취업·미취업간 이행행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미취업기간과 취업기간이 공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빈번한 노동시장 이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을 보다 세분하면, 건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의 미취업 탈출확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서비스업 종사인력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청년층,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은 짧고 취업기간이 길게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 및 정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고령층, 비정규직, 저임금 근

로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은 길고 취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의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를 비롯한 이들 근로자집단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들을 파악하여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을 촉진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고 미취업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등 취업으로의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여성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취업으로의 이행을 유도·촉진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승복(2005), 「우리나라 임금소득불평등의 증장기적 변화」, 『노동리뷰』 11: 9-2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5), 『산업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워크샵 발표문).
- 김영미·한준(2007), 「계급과 불평등: 소득불평등 분해를 통해 본 한국 불평등구조의 변화」 2007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김유선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123: 12-47.
- 김장호(1999), 『한국노동경제론: 새로운 생산방식과 고용』, 한길사.
- 금재호·조준모(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남성일·이화영(1999),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특성 분석: 외환위기 이전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1).
- 류기철·류재술(1999),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국제경제연구』, 5(2).
- 방하남·이영면·김기현·김한준·이상호(2007),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신광영(2006), 「서비스사회와 계급구성의 변화」, 『동향과 전망』 68:82-109.
- 신동균(2003), 「산업간 임금격차의 경기변동상 변화 패턴과 노동시장 가설」 『노동경제논집』 26(3): 77-114.
- 안주엽·김동배·전병유·김주섭(2004), 『경제위기 전후 금융산업과 노동』, 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어수봉·조세형(2006), 『고용의 질'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여유진 외(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1.
- 유경준(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KDI 정책연구 시리즈 2007-1.
- 유경준·김대일(200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08.
- 유길상·김복순·성재민(2003),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훈(2006), 「서비스산업의 노동체제와 노동자 태도」, 『한국사회학』, 40: 98-131.
- 이병훈(2004),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성위기」, 『아세아연구』, 118: 65-89.
- _____(2007a), 「1997년 노동체제의 진단과 개혁과제」,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발표논문..
- _____(2007b), 「노동양극화와 사회정의」, 『한국사회』, 7(1): 145-172.
- 이병희(2000),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재취업성과에 관한 준실험적 평가」, 『노동경제논집』, 23(2)
- 이병희(2001),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근로자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4(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02a),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2b),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 변화」, 『노동정책연구』, 2(4),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정재호(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균(2004),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동』, 울산대학교 출판부.
- 이홍직·장준영(2007), 「산업간 생산성격차의 확대 원인과 경제적 영향분석」, 『한은조사통계월보』, 7: 54-85.
- 장병돈(2004),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요인 분석」, 『산은조사월보』, 585: 1-24.
- 장수명·이번송(2001), 「인적자본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와 그 외부효과」 『노동경제논집』, 24(1): 1-33.
- 전병유(2001), 「산업특수적 숙련과 임금」, 『노동경제논집』, 24(1), 한국노동경제학회.
- 전병유·김혜원·신동균(2006),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신동균·신관호·이성균·남기곤(2007),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이환(2003),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산업노동연구』, 9(1): 71-105.
- 정준호(2006), 「한국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 『동향과 전망』 68: 44-81.
- 정진호(1999), 「한국의 직장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학위논문.
- _____(2001),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1-17.
- _____(2005), 「임금수준 격차 및 그 변화」,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황수경 외. pp.9-41.

- 최강식(1997),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최장집(2005),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 통계청(2007), 『2005 서비스업 총조사보고서: 산업전국편 제 I-1권』, 통계청.
- 한국개발연구원(편)(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제안』
- 한국노동연구원(2007), 『2007 KLI 노동통계』
- 홍성우·양채열(1999),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광주지역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2(1)
- 홍장표(2007), “혁신과 통합의 산업정책 모색” (미발표논문).
- 황덕순·전병유·고선(2004),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 외(2005),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05-04.
- Allen S, G.(1995), "Update Notes on the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1890-1990" *Industrial and Labor Research*, 48: 305-421.
- Allison, P. D.(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Cary, NC: SAS Institute Inc.
- Aoyama, Y. and C. Manuel(2002),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ternational Labor Review*, 141(1): 123-159.
- Appelbaum, E. and P. Albin.(1990), "Shifts in employment, occupational structure,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Noyelle T. (ed.)

- Skills, Wages and Productivity in Service Sector*, Westview Press.
- Arbacche, J. S, and G. Fransisco(1999), "Unions and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World Development* 27(10): 1875-1883.
- Bell, D.(1981), *The Social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Society*, (이동만 역 (1984), 『정보화사회의 사회적 구조』, 한울).
- Beck, U.(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ijwaard, G. E and G. Ridder(2005), "Correcting for selective compliance in a re-employment bonus experiment", *Journal of Econometrics* 125: 77-111.
- Bijwaard, G. E. and J. Veenman(2007), *Unequal Chances on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 Case of the Netherlands*.
- Blackburn, M.(1990), "What can explain the increase in earning inequality among male." *Industrial Relation* 29: 441-456.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2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wood Press.
- Clark, C.(1950), "Economic life in the Twentieth Century" *Measure* 1(4):329-47.
- Carnoy, M., et al.(1997), "Labour markets and employment practices in the age of flexibility: A case study of Silicon Valley."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6(1): 27-48.
- Crompton, R.(1995), *Class and Stratification* (정태환·한상근 옮김 『현대의 계급론』, 한울아카데미).
- Cowell, F. A. and S. P. Jenkins(1995), "How Much Inequality Can we

- Explain? A Methodology and an Applic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 Journal*, 105: 421-430.
- Cowell, F. A.(1995), *Measuring Inequality*, London: Prentice Hall.
- _____(2000), "Measurement of Inequality" in A. B. Atkinson and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Amsterdam: North Holland.
- Elfring, T.(1988), *Service Sector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ldershot: Avebury.
- _____(1989), "New Evidence of the Expansion of Service Sector in Advanced Econom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4).
- Esping-Andersen, et al.(1999), *Why Deregulate Labour Mark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elds, G. S.(2003), Accounting for Income Inequality and Its Change: A New Method, with Application to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Worker Well Being and Public Policy* 22: 1-38.
- Galbraith, J. K and M. Berner(2001), *Inequality and Industrial Change: A Global 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age*. Cambridge(UK): Polity Press.
- Gittleman, M. and N. W. Edward(199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9(3): 295-312.

- Hartog, J. P. T. Preira and J. A. C. Vieira(1997),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nd Tenure Effects in the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is for the UK, 19: 71-1986" *Economica* 62: 29-36.
- Hatch, J. and C. Angela(2000), "Job growth in the 1990s: a retrospect," *Monthly Labor Review*, August.
- Houseman, S.(2000), "Introduction," in Houseman S. and M. Osawa (ed) *Nonstandard Work in Developed Countries: Causes and Consequencie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Israeli, O.(2007), "A Sharpley-based decomposition of the R-square of a linear regression,"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5: 199-212.
- Kahn, Lawrence A.(1998),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International Evidence," *Economica*, 65: 507-34,
- Kassab, C.(1992), *Income and Inequality: The Role of the Service Sector in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Income*. Greenwood Press.
- Katz, L. A. and L. H. Summers(1989), "Industry Rents: Evidence and Implica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acroeconomics* 209-275.
- Kremer, M. and M. Eric(1996), "Wage inequality and segregation by skill" Working Paper 571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reuger, A. and L. Summers(1988), "Efficiency Wage and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Econometrica* 56: 259-253.
- Kutscher, R. E.(1987), "Overview and Implications of the projections to

- 2000." *Monthly Labor Review* 109(6): 3-13.
- Lancaster, T.(1990), *The Econometric Analysis of Transition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llemand, et al.(2007), "The Establishment Size Wage Premium-Evidence from European Countries," *Empirica* 34: 427-451.
- Lane, Julia I. et al.(2007), "Establishment Wage Differentials", *BLS Working Paper* 403.
- Lawrence, R.(1984),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middle class." *Brookings Review* Fall: 3-11.
- Litchfield, J. A.(1999), "Inequality: Methods and Tools" Text for World Bank's Website on Inequality, Poverty and Economic Performance: <http://web.worldbank.org/poverty/inequality/index.htm>
- Maddison, A.(1995),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OECD.
- McMahon, P. J. and J. H. Tschetter(1986), "The Declining Middle Class." *Monthly Labor Review* 109(9): 22-27.
- Morduch J. and T. Sicular(2002), "Rethinking Inequality Decomposition, with evidence from rural China, *Economic Journal* 112: 93-106.
- Morris, M. and B. Western(1999), "Inequality in earnings at the close of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25: 623-657.
- Murdoch, J. and S. Terry(2002), "Rethinking Inequality Decomposition, with Evidence from Rural China,"
- OECD(1986), *Trends in the Information Economy*, OECD.
- _____(2001), *Employment Outlook 2000*. OECD.

- _____(2002), *Employment Outlook 2001*. OECD.
- Oi, W. Y. and T. L. Idson(1999), "Firm size and wage" in Ashenfelter, O. C. and Card Davi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Amsterdam: North Holland.
- Osburn, J.(2000),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patterns and possible sources," *Monthly Labor Review*, 123(2).
- Raffalovich, L. E.(1990), "Segmentation theory, economic performance, and earnings inequality." *Research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9: 251-278.
- Ramos-Diaz, J.(2005), Low-wage Employment: "Stepping Stone" or "Durable Trap", WP 5-20, Pompeu Fabra University-Barcelona-Spain.
- Reskin, B.(1996), "A queueing perspective on non-standard employment/ employer relationships."
- Rycx, F.(2002),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Evidence from Belgium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De Economist* 155(5): 555-568.
- Schmid, G.(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Discussion paper FS I pp.98-206,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Berlin.
- _____(2000), Foreword. In J. O'Reilly. I. Cebrian, and M. Lallement(Eds), *Workingtime Changes: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pp. xix-xxi. Cheltenham, UK: Edward Elgar.

- _____ (2002), Employment systems in transition: Explaining performance differential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In G. Schmid and B. Glazier(Eds.).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pp.23-48. Cheltenham, UK: Edward Elgar.
- Shorrocks, A. F.(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93-211.
- _____ (1984), "Inequality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s", *Econometrica*, 52: 1369-1385.
- Slichter, S.(1950), "Note on the Structure of Wag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2: 80-91.
- Smith, V.(1997), "New Forms of Work Organ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315-339.
- Theil, H.(1967), *Economics and Information Theory*, Amsterdam: North Holland.
- Tilly, C., B. Blustone and B. Harrison(1986), *Low Wages 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bster, F.(1995),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조동기 역(1997), 『정보사회이론』, 나남출판).
- Wieczorek, J.(1995), "Sectoral trends in world employment and the shift toward servic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4(2): pp.205-226.
- Wolf, Edward N. and M. Gittleman(199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9(3): 295-312

- World Bank.(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he World Bank.
- Yun, Myeong-Su(2007), "Earnings Inequality in USA, 1969-99: Comparing Inequality Using Earnings Equati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2(1): 127-177.

